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김국신, 김기현, 배정호, 이한규, 최춘흠

통일연구원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5
II.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와 평가: 주요 국가별	9
1. 중국	11
2. 일본	45
3. 캐나다	89
III.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와 평가: 지역별	121
1. 중동지역	123
2. 중남미지역	158
3. 아프리카지역	197
IV. 정책적 고려사항	219
1. 기본적 고려사항	221
2. 주요 국가별 고려사항	223
3. 지역별 고려사항	228
참고문헌	23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5

표 목 차

<표 II-1> 대중 통일역량 평가	45
<표 II-2>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향후 과제	59
<표 II-3>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사항	62
<표 II-4> 대일 통일역량 평가	88
<표 II-5>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추이	92
<표 II-6>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추이	97
<표 II-7> 캐나다의 대북한 교역 추이	108
<표 II-8> 대캐나다 통일역량 평가	120
<표 III-1> 대중동지역 통일역량 평가	157
<표 III-2> 한·중남미 외교관계 현황	166
<표 III-3> 한국의 지역별 교역 현황(2003년)	174
<표 III-4> 한국의 지역별 해외 총투자 누계 현황 (2004년 5월 말 기준)	176
<표 III-5> 한·멕시코 수출입 동향	179
<표 III-6> 한국의 대브라질 교역 규모	182
<표 III-7>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184
<표 III-8> 대중남미지역 통일역량 평가	196
<표 III-9> 남북한의 아프리카 상주대사관 실태(2003년)	201
<표 III-10>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교역 현황	204
<표 III-11> 한국의 대앙골라 교역 현황	206
<표 III-12> 한국의 대남아공 교역 현황	207
<표 III-13> 대아프리카지역 통일역량 평가	217

서론

I



1. 연구목적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남북한은 1945년 이후 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한반도는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분단되었고 현재에도 미·중·일·러 주변 4국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로 1991년에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채택함으로써 화해의 단계로 진입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로 1993~94년 제1차 북핵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미·북간 채택된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고, 1998년 2월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성과로 2000년 6·15 남북정상 회담이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 이후 남북관계는 정부차원의 대화,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제는 분야별로 제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 도의 경우 남북장관급회담 등 38회의 남북대화가 있었고 2004년 8월까지에도 18회 이상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각종 합의서와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 위기는 베이징에서 북·미·중간 3자회담(2003.4.23~25)과 3차에 걸친 북·미·중·한·일·러간 6자회담(8.27~29; 2004.2.25~28; 6.23~26)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와 남한의 핵물질실험 사건에 대한

북한의 완전해명 요구 등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김일성 사망 일 조문대표단 방북 불허 문제와 동남아를 통한 대량 탈북자의 국내입국 문제로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는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에서는 역내국가간 이념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긴밀히 되고 있으나 안보 면에서는 상호 협력과 견제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세계안보·군사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 미국은 역내 중무장 지상군을 감축하고 경무장의 신속기동군으로 대체시키는 한편, 일본을 아·태지역의 군사허브로 삼고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침체를 회복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관계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연 8~9%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온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3년 10월 최초의 유인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군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세우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간 경제혼란에 빠져있던 러시아는 2000년 1월 집권 시 ‘강한 러시아’ 건설을 표방한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러시아 제일의 수출품인 원유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로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소련 붕괴직후 상실했던 동북아 역내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자주 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경제 상황에서 남북한간 및 동북아 역내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내적 통일역량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일역량을 총집결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의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2003년도 연구과제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2003년도 연구에서는 EU, 오세아니아, ASEAN, 비동맹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 실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금번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별에서는 중국·일본·캐나다, 지역별에서는 중동·중남미·아프리카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지역별 분석에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 실태를 고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토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으며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을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동지역에서는 24개국 중 7국(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중남미지역에서는 33개국 중 3국(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프리카지역에서는 54개국 중 3국(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지를 받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외교면에서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내적 통일역량과 국제적 통일역량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통

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적 통일역량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 경제력 축적, 세대·계층·지역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 복지국가 실현 등이라면, 국제적 통일역량은 한반도 주변 4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강화, 이들로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경제관계 확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관련기관과 관련인사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해외동포 및 동포단체들의 잠재력 활용,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적 분위기 조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설정 하에 주요 국가들을 분석하는 II장과 지역별로 분석하는 III장에서는 해당국의 남북한관계를 먼저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과 인사들을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해당국 거주 한인동포 및 동포단체들의 실태를 고찰하였고, 주요 국가 및 지역별 분석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 실태를 개괄적으로 평가하였다. 통일역량 평가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설정하였다.

①우리나라와 수교여부(수교의 경우 통일역량 ‘상,’ 미수교의 경우 ‘하’), ②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지지의 경우 통일역량 ‘상,’ 중립의 경우 ‘중,’ 반대 또는 무관심의 경우 ‘하’), ③우리나라와 경제관계 상황(교역과 투자의 증가추세 경우 통일역량 ‘상,’ 일정수준 유지의 경우 ‘중,’ 감소추세의 경우 ‘하’), ④고위인사교류 상황(정례적 수준의 정상·총리급·장관급 회담 개최의 경우 통일역량 ‘상,’ 비정례적 수준의 정상·총리급 회담 개최의 경우 ‘중,’ 장관급 이하만의 회담 개최의 경우 ‘하’), ⑤ 학술표류 실태(상호간 활발한 교류의 경우 통일역량 ‘상,’ 통상적 수준 교류의 경우 ‘중,’ 저조한 교류의 경우 ‘하’), ⑥한인

동포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현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동시에 현지 한인회 활동이 활발한 경우 통일역량 '상,' 상기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의 경우 '중,'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

그리고 마지막 IV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일반적 고려사항과 주요 국가별 고려사항 및 지역별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춘흠(중국), 배정호(일본), 여인곤(캐나다), 김국신(중동지역), 김기현(중남미지역), 이한규(아프리카지역) 박사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와 평가:
주요 국가별

II



1. 중국

가. 한반도관계 개황

(1) 중국의 대한국 정책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이 개입하면서부터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중국의 대미 정책선상에서 추진되어 왔다. 중국은 북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여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원치 않았다. 그러다가 1975년 유엔에서 중국은 북한을 유엔 가입국으로 미국은 한국을 유엔 가입국으로 추천하여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합법정부 입장을 포기하였다. 그 후 중국은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을 전개하였으며 비공식적인 고위급 접촉을 전개해 나갔다.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중국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치중하였다. 당시 중국은 한국경제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에서 한국과의 경협 확대를 모색한 것이었다. 중국은 한·중 경협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 정치·군사관계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에 참여하면서부터 한국과의 정치, 군사분야 협력을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요구인 비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고 양국 관계를 ‘협력 동반자’로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1990년대 까지도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

에 대한 정치, 군사 협력 정책을 적극 전개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정치, 군사협력 관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¹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면에는 북한과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한편 중국은 남북한 관계 발전이 한반도 안정 유지에 가장 긴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관계 확대를 가장 지지하여 왔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관계로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발표된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은 양국이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김대중 정부때 선언한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동의하였다.² 중국이 한국의 주장에 합의한 데는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한·중관계 발전을 한·미관계 발전과 비교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향후 대중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길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중 양국은 또한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적극적이고 빈번한 교류를 하면서 ‘전면적 협력동반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성공한다. 한·중 양국의 정상은 1992년 수교이후 2003년까지 5차례의 정상회담을

¹ 1999년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방중에 이어 2000년 遲好田 국방장관의 답방으로 양국은 국방 분야에서 점진적인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²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시 한·중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합의하였다. 중국의 해석에 의하면 동반자 관계란 서로 적대하지 않으며 또 위험을 나누어 겪는 협력관계(互不爲敵, 同當風險)라는 뜻이다. 주재우 교수와의 면담에서 확인됨.

가졌으며, 다자간협력체를 통한 10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그 수는 총 15회로 더욱 증가한다.³ 그리고 외무장관급의 회담 역시 46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양국 간의 정치, 외교 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양국은 어업협정, 황장엽 이송문제, 탈북자문제, 마늘분쟁 등 민감한 국익과 국사현안에 있어 정부 간의 협의가 빈번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최근에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면서 한국과의 정치, 외교적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써, 중국 동북 3성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정치, 경제 등을 연구하는 대형 국책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구려를 비롯하여 고조선 및 발해사, 조선족 등 소수민족 문제, 동북 지역의 경제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접국인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향후 한반도 통일이후의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측은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단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명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고구려사가 한민족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국의 정치 군사협력은 진일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

³ 김태호, “한중관계 11년과 미래: 양적팽창과 잠재적 갈등을 중심으로,” 『계간사상』 (2003년 가을호), pp. 63-64.

여 왔던 중국이 북핵문제로 인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점이다. 이는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2003년 미·북·중 3자회담 실현을 위해 전기침(錢其琛) 국무위원을 북한에 급파하면서 3~4일간의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하는 압력을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북한을 참여케 하였다.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4월 북경 3자회담의 실현은 중국의 중재와 참여로 인해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한·중 북경 정상회담에서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면서 북핵문제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한·미·일 3국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기본입장을 중국정부에 재천명하였다. 한·중 공동선언문에서 한국은 한·미·일 3국이 합의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 북한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중국측에 주지시키고 중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얻어 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표명하여 한국의 지지를 얻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

⁴ 2003년 7월 한·중 북경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한·미, 한·일 정상 회담에 이어 3번째로 갖는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에 중대한 회담이었다. 한·중 양국 정상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핵,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은 2003년 북경 미·중·북한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와 수출의사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와 수출 차단을 위한 중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경제적, 군사적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이 동시에 협의되어야만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 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정책과 관련, 중국은 한국의 대중 무역과 투자 확대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협을 상호 이익과 상호 보완이라는 입장에서 확대해 나갔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2002년까지 한·중 교역 규모는 한국측 통계에 따르면 1992년 63.7억 달러에서 2002년 411.5억 달러로 6.5배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1992년 50.3억 달러에서 2002년 440.7억 달러로 8.7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하튼 한국은 한·중 수교이후 현재까지 2차 산업의 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의 1차 산업과 교역 하면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2003년 기준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통계 기준으로 동년 양국간 교역액은 570억 달러이며, 한국의 무역흑자액은 132억 달러이다.

한·중 투자와 관련, 한국의 대중 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부터 2002년까지 대한국 투자액을 150.2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다.⁵ 2003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제1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누계 4.7억 달러에 머물고 있어⁶ 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⁵ 한국수출입은행(2003.6.23)과 중국 상무부 통계: 수치상에 차이가 크나 이는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측 통계는 66.6억 달러로 보고 있다.

⁶ 산업자원부, 2003.

한·중 경협 문제와 관련, 200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 증진이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한국측 입장에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게 경협은 호혜협력 차원에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무역갈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양국간 갈등, 특히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당시 한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긴급 관세, 조정 관세 등을 수시로 발동하여 왔으며, 중국도 대응책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무역 갈등이 빈번하였다. 중국은 한국기업이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중국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 후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 지역 투자를 촉구하기 시작하였다.⁷ 200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 중국의 대북 정책

중국은 1949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대미 견제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1950년 김일성의 주도로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중국은 미국의 해공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소련의 해공군의 지원이 없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판단아래 구소련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구소련으로부터

⁷ “ROK’s Yonhap: Roh Calls for Seoul’s Participation in China’s Development Project,” *Yonhap*, July 3, 2003, *FBIS-CHI-2003-0708*.

확답이 없었다. 미군의 대중국 본토 침공 위협을 감지한 모택동은 육군 중심의 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전에 개입하였다. 이는 중국당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축소한다는 입장에서 인민해방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을 한국전에 투입한 것이었다. 1950년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은 막대한 인명손실을 가져왔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을 가능한 한 빨리 중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에서 휴전을 미국보다 먼저 제시하였다. 1953년 휴전이후 미국이 한국과 군사동맹을 수립한데 반해 중국은 당시 북한과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았다.

구소련이 미국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을 전개해 나가면서 중국과 갈등이 크게 증폭되었다. 1961년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소 분쟁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그토록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국을 지지하지 않은 북한을 적대시 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은 북한을 독재국가이며 수정주의 국가라고 매도하면서 중·북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국경분쟁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환점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9년 중국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 중국의 대북 군사적 지원은 많이 축소되었으며 북한에 대해 한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변질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보다는 구소련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1980년대 중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미 연합전략 추진으로 인해 실제로 북한의 대한국 정책을 내심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무모한 대남 군사도발 억지를 더욱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천안

문사태로 인해 중·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관계 확대노력은 별로 없었다.

1990년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유일강대국으로 등장하여 대중 견제를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군사협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부터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나 찬성도 표시하지 않았다.⁸ 중국은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급격히 철수하거나 감축된다면 북한이 이를 오판하여 대남 국지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 획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철수 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으로 인해 한국, 미국 및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전개하였으며,⁹ 1961년의 중·북 우호조약 중 자동군사 개입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⁸ Chu Shulong,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10.28-10.29).

⁹ Andrew Wedeman,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in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 79.

일환으로 중·북 우호협력조약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간히 피력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첨예할 당시인 1992~1994년 기간 동안 북한의 무모한 선제 군사도발 모색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입장에서 중·북 우호협력 조약 중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6월 남북한 평양 정상회담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며 만약 주한미군이 평화유지 역할에 국한한다면 미군주둔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표명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북·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요구함으로써¹⁰ 남북정상 간에 양해된 사항을 파기하였다. 중국은 2001년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평양 정상회담 시 북한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에도 『중·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북한 간에 대미 태세에 대해,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¹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도 표명으로 북핵 위기가 제기되면서¹²

¹⁰ 『大公報』, 2001년 8월 20일, *FBIS-CHI-2001-0820*.

¹¹ 중국은 2000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때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원치 않고 있어 북한과는 불편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러·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¹² 북한은 NPT의 허점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에 체결된 NPT 조약은 NPT 가입국에 대해 비핵화 인센티브로 민간 핵전력에 대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협상유도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향후 일본의 핵무장과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상기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될 경우 중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한 핵보유 국가로 향유하여 온 자국의 전략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표방하고 북한과 미국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은 다음 3가지 정책 목표 - 즉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고 또한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불신도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신이 직접 중재자로 참여하여야만 자국이 주장하는 3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국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발전이 크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남북한이 기존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2002년 12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양국이 관계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6자회담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중국의 대북 방북 외교는 더욱 확대되었다. 2003년 8월 초 중국 외교부 다이빙궈(戴秉國) 수석부부장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즉 우라늄, 플루토늄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우라늄 농축시설과 중수시설은 IAEA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이후 북한이 제1차 6자회담에 참여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6자회담 참여 표명이후 중국군 쉬차이허우(徐才厚) 총정치부 주임(상장), 류홍짜이(劉洪在)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은 더욱 증대되었다. 8월 북경 제1차 6자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장인 북한의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은 미·북 간에 해결되어야하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요구인 체제안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기타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관계 수립 요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³

그 후 우방귀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외교부 부부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였다.¹⁴ 우방귀오 상무위원장의 방북은 강택민 전 국가주석의 2001년 9월 방북이후 최고위급 중국 인사의 방북인 셈이다. 우방귀오 상무위원장은 김정일의 북경 방문을 초청하고 향후 5년간의 대북 경제지원 차관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대표가 북한의 미국 비난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다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북한이 한반도 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점이다. 중국 대표단의 방북 기간 중 북한은 제2차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2004년 2월과 6월 제2차 및 제3차 6자회담이 중국의 중재로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나 미·북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가시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¹³ 중국은 제1차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측이 제기한 안보 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히 평화를 실현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남의 근본이익과 동북아시아 정세 안정 수호에 유리하다”라고 언급하였다.

¹⁴ 중국 대표단에는 曾培炎 국무원 부총리, 盛華仁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于廣州 상무부 부부장, 呂聰敏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王毅 외교부 부부장, 劉洪才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葛振峰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으로 구성되었다.

요약하면, 탈냉전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북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물자 지원을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중·북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중국의 대북 무역 흑자는 총 4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2년 경우 중국의 대북 수입은 2.7억 달러, 수출은 4.6억 달러로 무역 흑자는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 대북 수입액은 1.8억 달러,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4%와 22%의 감소를 보였다. 중국의 대북 상반기 흑자가 0.9억 달러인 것으로 보아 2003년도 중국의 대북 무역흑자는 작년의 수준보다는 감소되었으나 북한이 식량과 광물성 원료를 더욱 많이 도입하여 무역흑자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대북 곡물 수출은 2000년 34만 톤에서 2001년에는 63만 톤으로 증가되었으나 2002년에는 30만 톤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0년 수준에 그쳤다. 중국의 대북 곡물수출이 감소된 배경에는 중국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액이 급격히 감소된 점과 북한의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의 대북 수입 방식은 가공, 일반, 변경, 보세무역 순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2003년도 상반기 변경무역을 통한 대북 수입은 전년 대비 42%의 증가를 보였으며 보세무역은 5% 감소하였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북한의 2002년 7·1 경제조치와 중국화폐의 상대적 우위로 인해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한 민간기업은 북한 호텔경영 인수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며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물자공급 부족, 법적 구비 결여 등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중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물자 지원과 관련, 중국은 한국전 휴전이후부터 1961년 군사동맹 체결 시까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였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구소련의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완충해주는 전략 기지로 판단하여 북한에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중국의 대북 물자 지원은 1960년대 말 문화대혁명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북 지원을 지속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과의 정치관계가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4년부터 북한 에너지 소비량의 약 75% 정도를 우호가격으로 지원해 주었다. 1996년 김영남의 방중 시 중국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 동안 5년간 식량 50만 톤과 석유 130만 톤의 대북 지원을 약속하였다. 2003년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 시 중국은 2003년에서 2007년간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¹⁵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제1차 5개년 지원 규모보다 조금 증액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북한은 중국이 자국의 에너지수급 3개년계획(2003~2005년), 800만t 식량증산 5개년계획(2003~2007년),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 등 에너지와 식량,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중국당국은 북한이 7·1 경제조치를 계기로 가격자유화를 실현하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한 공산품 가격 폭등과 정권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한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 실

¹⁵ “Top Legislator Wu Bangguo: PRC Willing To Seek Stronger Economic Ties With DPRK,” *FBIS-CHI-2003-1030*.

시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북 외교관계가 소원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물자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

(1) 국가차원 주요 기관

중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은 여러 분야와 차원에서 산재되어 있다. 정치, 안보, 경제, 군사, 과학 등 여러 분야가 있으며 차원으로는 중국공산당, 행정부인 국무원, 군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면에서 보면 정책제안기관, 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을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분야에 관한 것으로 주로 정책제안 기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정책제안기관의 기능을 알기 전에 우선 간단한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을 연구하는 여러 기관, 학술단체 등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과 집행기구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기관과 연구기관간의 유대관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과 행정부인 국무원 차원의 정책 결정과 집행기구로는 당중앙외사영도소조(黨中央外事領導小組)와 국무원외사판공실(國務院外事判公室)이 있다. 당중앙외사영도소조는 당중앙 정치국과 국무원의 대외관계 실무부서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 간의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¹⁶ 한편,

¹⁶ 1987년 이후 1997년경까지 약 10년간은 리펑 당시 총리가 조장으로 역임하였으

국무원외사판공실은 당중앙외사영도소조의 협의사안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비서 조직이며, 약 20명 내외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⁷ 국무원외사판공실은 차관급인 주임과 부주임의 지휘를 받아 중앙외사영도소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외사판공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보다는 상당히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¹⁸

한반도 관련 정책집행은 당서기처, 국무원, 군의 유관기관들이 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상무부, 그리고 당의 중앙서기처 산하의 대외연락부 등 약 10여개 유관부서들이 당중앙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을 협의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관련 군사안보 문제는 아마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문제는 당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대외관계는 국무원 산하의 외교부가 전담하고, 대외경제문제는 과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그리고 2003년의 행정개편 이후에는 신설된 상무부가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며 1997년 이후 최근까지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중앙 외사영도소조 조장으로 외교정책 전반을 총괄하였다. 현재는 장쩌민이 은퇴를 하여 후진타오 총서기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¹⁷ 보통 국무원외사판공실과 당서기처 산하의 외사판공실은 동일한 인물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¹⁸ 이는 당중앙외사영도소조가 일반적인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군사 안보 문제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중국공산당 소속

1) 중공중앙당교(中共中央黨校)

중앙당교는 고위급 간부를 단기 양성 교육하는 기관으로 한반도 관련 심도있는 연구는 적다. 주로 등소평 정치사상과 중국의 정치, 경제, 대외 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는 당의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한반도 관련 연구는 주로 趙虎吉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인민일보사

당 소속 신문사로 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선전, 설명,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며 순수한 의미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국무원(중앙정부) 소속

1) 국무원 직속

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과 연구인원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유명하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발전되었다. 약 200명 이상의 연구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책임자는 陸忠偉 원장이다. 국제정치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세 판단을 중시하고 있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원장 이외에 王在邦 부원장(미국외교, 강대국정치), 陶堅 부원장(중·미관계, 미국정치), 楊伯江(동북아실 주임, 동북아 정치), 林利民(전략중심 주임, 중·미관계,

북핵문제), 馬俊威(일본정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戚保良(중국의 대북 정치, 한·중관계), 程玉潔(중·북관계, 한반도 정치), 吳晶晶(중국의 한반도 정치, 남북관계), 種欣(한반도 정책), 李軍(중·북관계, 한반도 정치), 은퇴한 于美華(중국의 한반도 정치)¹⁹ 등이 중요한 구성원이다.

주요 발간물은 『現代國際關係』(중문),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영문) 등이고, 다음과 같은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을 갖고 있다.

- 林利民, “朝核問題的三種解決前景與中國的政策選擇(북핵문제의 3가지 해결 전망과 중국의 정책 선택),” 『朝鮮半島核問題與東北亞安全學術討論會』, 中國軍控與裁軍協會, 朝鮮史研究會,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세계사연구소 공동주관 학술회의, 북경, 2004. 10. 22~23.
- 戚保良, “朝核問題與中韓合作,” 북경, 2004. 6. 18.
- “東北亞安全機制: 現實與前景(동북아 안전체계: 현황과 전망),” 『現代國際關係』, 2004. 4.
- 楊伯江, “東北亞安全形勢的變化與態勢,” 『現代國際關係』, 2003년 第4期, pp. 12-14.

¹⁹ 현재 于美華는 改革開放論壇(China Reform Forum)의 동아연구실 주임이며 고급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改革開放論壇은 黨中央黨校의 지도아래 중국대외정책 개념(和平崛起 정책)을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改革開放論壇의 소장은 장관급인 曾必堅이다.

나) 중국사회과학원²⁰ 아주태평양연구소

북경 소재 중국사회과학원 아주태평양연구소는 1988년 창설된 사회과학원 소속 국제문제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현 인원은 약 60명이며 연구인원은 45명으로써 최고 책임자는 張蘊嶺 소장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 특히, APEC과 ASEAN 및 ARF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관계, 중국의 동북아정책, 한·중, 중·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조직은 경제연구실, 정치사회연구실, 안전외교연구실, 조선반도연구중심 등 4개의 연구실로 구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연구중심(한반도연구센터)은 중국의 한반도전문가 약 150명 이상을 회원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주요 구성원은 孫土海 부소장(국제정치 연구원), 韓鋒 부소장(국제정치 부연구원, 동남아국가 안전외교 전략과 다변외교), 李文(정치사회연구실 주임, 아시아 정치사향), 朴鍵一(한반도 정치,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朴光姬(동북아 경제협력, 한·중·일 무역관계), 金英姬(동북아 경제, 안보,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 金熙德(일본연구), 은퇴한 韓鎮涉(한반도 연구) 등이다. 1992년 창간된 『當代亞太』(중문) 월간,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2003년 11월 출간된 『張蘊嶺 主編』, 『未來 10-15年 中國在亞太地區面臨的國際環境』 등이 주요 발간물이고,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 朴鍵一, “朝鮮內外政策調整的趨勢及特點(북한의 대내외정책 조정 추세와 특징),” 中國사회과학원아태연구소, 2002. 2. 등이 있다.

²⁰ 중국사회과학원 韓國研究中心에서는 1993년부터 『當代韓國』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當代韓國은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역사 등 여러 면을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학술지이다.

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세계발전연구소 동아실(東亞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국무원 직속 정책연구 및 자문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국민경제, 사회발전과 개혁·개방 과정 분석을 통한 중단기 전략 설정 등이고 주로 대내외 경제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세계발전연구소는 1990년 4월에 성립되었다. 동아실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자국정부의 경제정책 자문 및 입안에 치중하고 있어 대한반도, 특히 한·중 경협이 중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조직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실, 세계발전연구실, 유라시아(歐亞)사회발전연구소 등 3개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최고 책임자는 王楚奎 주임이고, 동아실 책임자는 鮑延明 주임이다.

『中國發展評論』(중문)과 *China Development Review*(영문)가 주요 발간물이고,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 鮑延明, “試論FTA與東亞自由貿易區的構建,” 『世界經濟與政治論壇』, 2002. 2. 등이 있다.

2) 외교부 소속

중국국제문제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는 외교부 소속으로 1956년 국제관계연구소로 시작하여 1986년 12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연구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최고 책임자는 馬振崗 소장이다. 미주연구실, 아주태평양연구실, 서구연구실, 남아·중동·아프리카연구실, 동구·중앙아시아·러시아연구실, 국제정치연구실, 세계경제연구실, 도서정보센터 등 7개 연구실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원은 元簡 부소장(미국외교, 국제정치경제), 阮宗澤 부소

장(미국외교, 강대국정치), 徐 堅: 부소장(국제정치, 아태지역안보 문제와 세계화문제), 楊成緒 전임 소장(아시아정치), 周興寶(국제관계, 아태정치), 卞林波(일본정치, 아태지역 강대국관계와 안보문제), 은퇴한 陶炳憲(한반도 정치, 남북관계,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虞少華(중국의 한반도 정치) 등이다.

발행량 1만부의 『國際問題研究』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 영문판이 부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徐 堅 主篇, 『國際環境與中國的戰略機遇期』(국제환경과 중국의 전략기회), 2003.
- 宋明江 편, 『世界格局之爭中的機遇和挑戰』(세계질서 형성중의 기회와 도전), 2003

(다) 지방 정부 소속

1) 길림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중국 장춘시 소재 길림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는 길림성 정부 직속의 연구 및 정책 자문기관이다. 동북아 경제협력, 특히 동북3성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문제와 남북한 관계, 북한핵문제, 동북아 정치 안보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는 張 鋒 소장이고 張玉山, 韓今玉, 徐文吉, 정책자문위원이고 전 소장인 張 榮, 연길 과기대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陳龍山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社會科學全選』과 『東北史地』가 주요 발간물이고 다음과 같은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이 있다.

- 張 榮, “朝美核對抗的發展前景分析(북미 핵 대항의 발전 전망분

- 석), 『朝鮮半島核問題與東北亞安全學術討論會』, 中國軍控與裁軍協會·朝鮮史研究會·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세계사연구소 공동주관 학술회의, 북경, 2004. 10. 22~23.
- 張玉山, “朝鮮核政治的選擇與命運(북핵 정치의 선택과 운명),” 『朝鮮半島核問題與東北亞安全學術討論會』, 中國軍控與裁軍協會·朝鮮史研究會·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세계사연구소 공동주관 학술회의, 북경, 2004. 10. 22~23.
 - 張榮勳, 『韓國盧武鉉參與政府的對朝和平繁榮政策』(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한 평화번영 정책), 길림성 사회과학원, 2004. 6.
 - 張榮, “21世紀的中韓全面伙伴關係(21세기 한중 전면적 동반자관계),” 길림성 사회과학원, 2004. 6, pp. 137-167.

2) 산동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

산동성 제남(濟南)시 소재 산동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는 산동성 인민정부 직속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연구소는 1988년 11월 창설되었다. 산동사회과학원은 1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반도 관련 기관으로 대외경제연구소와 한국연구센터가 있다. 산동성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한국경제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소는 대외경제연구실과 아·태경제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인원은 총 11명이다. 최고 책임자는 范振洪 소장이며 王愛華(중국경제, 남북한 관계), 전임 소장인 盧新德(한국경제), 전임 부소장인 劉淑琪 등이 근무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 盧新德, “21世紀初期中韓經濟合作展望(21세기 초 한·중 경제협력 전망)”
- 范振洪 외, 『未來15年韓國與中國山東省經貿合作戰略研究』(미래 15년 한국과 산둥성 경제무역 합작 전략 연구), 1998. 등이 있다.

3) 요령사회과학원

요령성 심양시 소재의 요령사회과학원은 요령성 정부 직속 청(廳)급 연구기관으로 1978년 창립되었다. 한반도문제, 러시아 극동·일본·몽고 지역,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경제특구, 특히 요령성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동북아국가 경제연구와 미국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趙子詳 원장 밑에 변강(邊疆)연구소, 구미경제연구소, 동북아경제연구소, 국제비교경제연구소의 4개 연구소와 조선한국연구중심, 일본연구중심, 러시아연구중심의 3개 센터로 조직되어 지역연구와 경제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중 한반도 관련 기구는 동북아경제연구소와 조선한국연구중심이다.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于治賢(동북아경제, 남북한 경제), 呂超(조선 한국연구중심 주임), 金哲(조선한국연구중심 남북관계), 于穎子(세계 경제연구소, 한·중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주요 발간물은 『社會科學周邊研究』이며,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은

- 金哲, “朝核問題與朝鮮半島安全展望,” 2004. 4. 등이 있다.

4) 상해국제문제연구소(SIIS)

1960년 창설된 상해시정부 직속 자문연구 기관이다. 동북아 정치와 경제, 미국의 동북아정책, APEC 관련 경제협력 등을 연구하고 있고, 북

핵문제 관련 연구는 전략실에서 주로 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는 俞新天 소장이고 미국연구실, 일본연구실, 러시아·중
동연구실, 아·태연구실, 전략연구실, 세계경제연구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태연구실 주임은 田中天으로서 한반도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1982년 창간된 『國際形勢年鑒』(중문), 『國際問題論壇』(중문),
『國際展望』(중문), 시사지, *SIIS Journal*(영문) 등이 주요 발간물
이며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 田中天, 『走向21世紀的亞太經濟』(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 江西元, “朝核問題與東北亞安全合作前景(북핵문제와 동북아 안
보협력전망),” 『東北亞論壇』, 2004. 5, pp. 44-48 등이 있다.

5) 상해사회과학원

상해사회과학원 내 아·태연구소의 王少普, 楊紅梅와 歐亞研究所
(유럽아시아 연구소)의 崔志鷹 등이 한반도문제 연구에 관계하고 있다.

(라) 대학관련 연구소

1)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길림성 장춘시 길림대학내 동북아연구원은 2000년부터 교육부 인문
사회과학 중점기관으로 선택되어 동북아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 인원은 약 75명, 연구인원은 56명이다. 동북아 경제협력, 특히 동북3
성과 러시아,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북한과 한국
의 경제 및 지역협력, 동북아 정치·안보문제, 한반도 평화발전 및 인구

관련 연구도 하고 있다. 조직은 세계경제연구소, 구역경제연구소, 국제 정치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인구·자원·환경연구소, 두만강국제개발연구소 등 6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책임자는李玉潭 원장(일본경제, 동북아지역경제)이고 주요 구성원 및 연구 분야는 朱顯平 부원장(러시아 경제, 두만강 지역개발), 尹豪 부원장(북한경제, 일본경제), 張寶仁 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한반도경제, 동북아지역경제), 徐文吉(한반도문제, 동북아경제, 세계경제지리), 高科(정치연구소, 소장, 세계근현대사, 동북아 지역정치, 강대국관계), 沈海濤(북핵문제), 壬明(동북아 경제협력, 두만강 경제협력), 은퇴한 金勝男(북한연구, 중·북관계) 등이다.

주요 발간물은 1979년 창간된 『人口學刊』(중문), 1982년 창간된 『現代日本經濟』(중문), 1992년 창간된 『東北亞論壇』(중문) 등이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은 아래와 같다.

- 巴殿君, “朝鮮內外政策的變化及其與東北亞國家關係(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와 동북아 국가관계),” 劉清才, 高科 主編, 『21世紀初東北亞地緣政治』(길림대학출판사, 2004. 4).
- 許琳, “美國東北亞政策與朝鮮核危機,” 劉清才, 高科 主編, 『21世紀初東北亞地緣政治』(길림대학출판사, 2004. 4).
- 沈海濤, “東北亞國際環境: 新變化與中國的外交選擇(동북아국제 환경: 새로운 변화와 중국의 외교선택),” 『東北亞論壇』(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2003. 1).
- 李玉潭, 『日韓金融制度比較研究』(길림인민출판사, 2002. 11).
- 王勝今 撰, 『現代朝鮮經濟』(길림대학 출판사, 2001. 4).
- 徐文吉, “論中國的東北亞安全戰略和建設性作用”(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건설적 역할을 논함), 『東北亞論壇』(길림대학 동북아 연구원, 2000. 11).

2) 연변대학

길림성 연길 소재의 연변대학은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 민족대학으로 1949년 4월 창설되었고 교육부 중점 건설학교의 하나로 유명하다. 거의 대부분이 연변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원들로서 한반도 관련 논문을 계속 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연변대학내 주요 기관과 연구자는 동북아연구원(박승헌 원장), 조선한국연구중심(김호응 소장), 조선한국문제연구소(고경수 소장), 동북아법학연구소(김기진, 李寶琦 부소장), 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김강일 소장), 조선역사연구소(김성호 소장), 동북아경제연구소(현동일 소장), 경제관리학원(김화림 부소장), 사범대 역사학부(강용범), 민족연구원(박창욱 원장) 등이다.

그리고 이 기관들의 주요 연구업적은 다음과 같다.

- 金基田, “第二次朝鮮核危機走向及對東北亞局勢的影響(제2차 북핵위기 향방과 동북아에 대한 영향),” 『朝鮮半島核問題與東北亞安全學術討論會』(中國軍控與裁軍協會·朝鮮史研究會·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세계사연구소 공동주관 학술회의, 북경, 2004. 10. 22~23.
- 高敬秀, “韓美同盟關係與東亞安全合作,” 연길, 2004. 8. 25.
- 金強一, “論中國的東北亞區域戰略(중국의 동북아 전략),” 『연변대학학보』, 제37권 제2기, 2004. 6.

3)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국제관계대학원)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은 중국 종합대학중 국제관계 연구 대학원으로는 제일 처음으로 창설되었고, 현 연구인원은 약 53명이다. 국제정치 이론 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로 강대국 관계, 중국의 안보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陳峰君, 劉金質 교수가 주로 한반도 연구를 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는 전 중공중앙정치국위원 및 부총리 錢其琛 원장이다. 국제관계연구소, 亞非연구소(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세계사회주의연구소의 3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원 및 연구 분야는 李 玉 부원장, 陳峰君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아·태 국제관계와 정치경제, 아·태 안보와 한반도), 張小明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梁守德(국제정치이론, 국제정세와 중국의 국제전략), 劉金質(한·중관계, 한·중 경제협력) 등이다. 『國際問題研究』가 주요 발간물이고 다음과 같은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이 있다.

- 陳峰君, 『亞太大國與朝鮮半島』 (북경대학출판사, 2002).
- 陳峰君, “21세기朝鮮半島對中國戰略意義,” 『國際問題研究』, 제4기 (북경, 2002).
- 劉金質, “全面發展的中韓合作伙伴關係(전면적 발전의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 『國際政治研究』, 2002년 제3기 (북경, 2002. 8).

4)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전략연구소

북경 소재의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전략연구소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국제문제연구소는 국제관계이론, 중국외교정책,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로 강대국 관계를 연구하는 반면, 전략

문제연구소는 국제전략 문제, 미국정치와 외교관계, 국제관계이론,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반도관련 연구는 동북아 강대국 연구, 특히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어 지역학 차원의 접근은 적은 편이다. 최고 책임자는 국제문제연구소 閻學通 소장이고 부소장은 李潤海이며, 전략연구소 소장은 楚樹龍이다.

주요 발간물은 『軍備控制』, 『國際政治科學』이고 직접적인 한반도 관련 논문은 적은 편이나 중국의 강대국 정치에서 한반도문제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 관련 주요 연구업적은

- 閻學通, “和平崛起與保障和平-簡論中國崛起的與策略(평화굴기와 평화보장-중국의 평화굴기와 책략),” 2004. 4.
- 楚樹龍, 耿秦 主編, 『世界, 美國與中國』(청화대학출판사, 2003. 10). 등이다.

5)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국제관계대학원)

북경 소재 인민대학내 국제정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04년 4월에 창설되었다. 주로 국제정치 이론, 중·미관계와 중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조직은 미국연구중심, 국제사무연구소, 동아시아연구중심(동아시아연구센터), 비교국제정치경제연구소, 공무원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책임자는 李景池 원장이다. 주요 연구진은 施殷弘 미국연구중심 주임(미국의 대중 정책과 중·미관계, 한반도 정치), 金仙榮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미국외교, 중·미관계, 강대국정치), 宋新寧 국제관계학원 부원장(국제관계이론,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미국정치)이고 施殷弘 교수가 주로 한반도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은 『人民大學學報』이며,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으로는

- 施殷弘, “朝核問題與東北亞安全,” 2004. 8 등이 있다.

6)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한국연구센터)

상해 소재 복단대학은 1905년에 창립되었으며 한국연구중심은 국제관계대학원내 연구기관이다. 한국연구중심은 1992년 10월에 창설되었고 현재 상임연구위원은 2명이나 겸임연구위원은 30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나 한국관련 정치,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 걸친 학제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는 朱明權 소장이고, 주요 구성원은 복단대학내 한국학 연구자들과 상해지역에 있는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상해평화발전연구소, 화동사범대학, 상해외국어대학 한반도 연구자들이다.

주요 발간물은 『韓國研究論叢』이고, 한반도 관련 연구업적은

- 朱明權 主編, 『20世紀60年代國際關係』, 2001.

- 朱明權, 『核擴散: 危險與防止』(핵확산: 위험과 방지), 1995. 등이다.

7) 기타

상기 이외에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으로 북경 국제전략연구소(국방부, 공군참모부와 관련) 및 평화와 발전연구센터(국방부, 총정치국 소속)가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는 한반도 관련 논문과 분석을 주로 수록한 『當代韓國』을 편집하고 『世界經濟與政治論壇』을 매년 출판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주로 강대국 정치와 경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한반도문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上海 同濟大學 아태연구중심 조선반도연구실은 崔志鷹 교수가 주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의 최근 발표 논문은 “和平繁榮政策與韓朝關係的發展”(평화번영정책과

남북한관계의 발전)이다.²¹ 청도에 있는 中國 海洋大學 국제문제연구소는 車建國이 부소장으로 있으며 한반도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 민간차원 주요 기관

중국인 중심으로 된 민간차원의 한반도 관련 연구단체는 현재 중국에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흔히들 민간단체라고들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간단체라 할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산하기구로서 등록되어 있어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로부터 단체의 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아태연구소 내에 조선반도연구중심(한반도연구센터)이 2001년 설립되어 2004년 4월 중국의 한반도전문가 약 150명 이상을 회원으로 구성한 한반도연구회를 발족시켰다. 한반도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학자들과 정기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토론하는 연구회이며 지한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북경에서 크게 활동하는 관변 민간학회로는 「中國軍控與裁軍協會」(중국군비통제와 군비감축 협회), 「朝鮮史研究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회는 2004월 10월에 북핵 관련 중국내 전문가를 대거 초대하여 북경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중국인민학회는 『外交』(중문), *Foreign Affairs Journal*(영문) 잡지를 출판하고 있다. 「和平與發展研究中心」은 주로 경제발전과 역내안정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²¹ 張 榮 主編, 『韓國盧武鉉參與政府的對朝和平繁榮政策(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한 평화번영 정책)』(길림성 사회과학원, 2004.6), pp. 27-49; 崔志鷹, 『大國與朝鮮半島(강대국과 한반도)』.

다. 한인동포 실태

한인동포, 즉 조선족 동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으로 현재 인원수는 대략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북3성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집단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는 연변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연변지역은 소수민족자치지역으로서 전체 중국 동포의 38%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심양, 할빈, 장춘 등 주요 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교육과 직장을 위해 동북3성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동포단체로 전국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리 많지 않으며 정치 분야 보다는 교육, 문화, 경제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동북3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분야 단체로는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손동식 이사장, 전 연변대학교 총장)를 들 수 있다. 2004년도가 협회창립 15년이 되며 중국동포 과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 협회는 중앙민족사무위원회 소속 국가 1급 사회단체로서 중국동포 과학자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동포들의 경제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교이전에는 중국 공민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관련 사무를 평가할 수 있었으나 수교이후 부터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왔다. 따라서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려할 점은 현재 동북 3성, 특히 집단 거주인 연변지역에 중국동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동포들은 교육비의 증가로 자녀를 하나만 가지려

하는 점과 대부분의 동포 청소년들이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과 향후의 생활 근거지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 집단 거주지의 경제적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중국동포 수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거주가 활성화되어야만 중국동포가 한민족의 역사, 언어, 전통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확보에도 이롭기 때문이다.

한글학교는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동포 특히, 청소년들이 한글 습득보다는 중국어 습득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점차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 연길 시내의 경우, 중국동포의 자녀들이 동포 소학교보다는 한족 소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숫자가 증가되어 동포 선생이 이들에게 한민족의 언어, 역사, 전통을 학습케 하는 기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연길시내 중국동포가 자녀를 한족 소학교로 보내는 수는 약 1,6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어 9개 동포 소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족 소학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가르치고 있어 체계적으로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물론 중국공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국어 학습이 중요하지만 이들 청소년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민족에 대한 자신감도 거의 상실케 될 것이다. 이들이 한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변과기대의 경우 중국동포가 80%,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자제와 중국인들이 20%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특성상 대부분 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강의해 왔는데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는 모든 수업을 중국어나 영어로 가르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면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하되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와 우리 정부와의 네트워크 관계를 보면, 재외동포재단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 우선 학술회의를 통해 중국동포와 상호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술회의나 일차적인 상호방문을 통한 연계활동보다는 직접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중국동포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재외동포재단이 중국동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IT직업훈련을 연변과기대와 제휴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대중 통일역량 평가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크게 형성되고 있는 점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는 것은 한·중 수교이후 양국관계 발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한국과 중국이 확신한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 통일역량 강화 노력이 다른 어느 국가에 대한 노력보다 더욱 공고히 그리고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수교이후 대중 외교에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한국은 대중 외교에 있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한국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역량 확대를 점진적이고도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국정부가 만약 급하게 그리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워 중국정부 및 민간인들과 통일논의를 하였다면 통일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중국의 의혹을 사 역량이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식 통일방안보다 한국식 통일방안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한국의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통일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점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의 대중 외교 중에서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통일역량 강화, 특히 한반도 안정유지, 탈북자 처리 과정과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및 교육 관련 차원의 대중 외교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분야는 아직도 정치와 군사협력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군사협력 부문에 있어 중국과의 고위층 방문과 정기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의식하여 폭 넓은 교류와 협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중공당 중앙이 제시하는 비전에서 출발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 외교는 통일역량 강화에 아주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방문외교를 통한 인적 교류가 중심이 되어 양국의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원이거나 전직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중을 통해 중국의 집권층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정치현실이 중국의 정치상황과 달라 국회의원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로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보다 실무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한·중 경쟁 수준에 비춰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교류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현재 중국정부 연구기관과의 상호 학술 방문 교류를 통해 정책입안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 정부 고위층이나 중간 간부층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이 중국정부의 연구기관들이다. 중국정부의 연구기관은 정부의 고위층 및 중간층 인사들과 정책협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기관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산하의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중앙정부내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심지어는 대학과의 학술교류와 상호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통일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중국측 연구자들과 폭 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특히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국방연구원, 국방대학 등이 중국정부의 저명한 연구기관과 상호 교류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대중 활동에 있어서는 세종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중국의 대학과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과의 학술교류가 주로 중국의 대학을 통해 중국 각지에서 실현된 점을 보아도 한국대학들의 대중 통일역량 역할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대중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실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1992. 8. 24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및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지지	상
경제관계	- 교역(2003년): 570억 달러, 132억 달러 교역흑자, 1위 수출대상국 - 투자 : 중국의 대한 투자 11억 달러 한국의 대중 투자 97억 달러	상
고위인사교류	양국 정상회담 · 외무장관 회담 · 의회간 및 군사교류 회담 정례적 개최	상
학술교류	정부 ·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간 교류 활성화	상
한인동포 네트워크	중국거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부재, 재외동포재단의 활동	중

2. 일본

가. 한반도관계 개황

국제사회에서의 양자간 관계가 대체로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듯이, 일본과 한반도 관계도 일본의 국내여론, 역사적 유산 및 한·일 양자간 현안, 북·일 양자간 현안,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과 그에 따른 대북정책 및 북·미관계, 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오고 있다.

(1) 한·일관계

(가) 정치면

한·일관계는 역사적 후유증에 의한 잠재적 갈등요소를 내포한 채 경쟁과 협력관계를 지속시켜 오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1992년 1월 미야자와(宮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고, 국회연설을 통하여 ‘아시아속의, 세계속의 한·일’을 주제로 연설하였고, 노태우 대통령 역시 동년 11월 교토를 방문하여 관계 증진을 도모하였다. 즉,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일 양국은 ‘아시아속의 한·일, 세계속의 한·일’을 기치로 내걸고 관계 증진을 추구하였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추구되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의한 갈등,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 폄하’ 발언 등으로 인해 냉각상태를 맞이하여야 했다. 이후 한·일관계는 일본 국내의 옴한론의 확산 등으로 매우 악화되었다.

한·일관계는 1998년 2월 국민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개선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한·일관계는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공동선언』을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한·일 공동선언』의 서명과 더불어 한·일간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00년에는 여러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한·일 양국의 정상은 5월 모리(森) 총리의 방한 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국’ 회의 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같은 정상회담의 개최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일간에는 대북 정책공조 강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과 사전조치 합의, 동북아 다자간 대화기구의 추진 합

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와 관련된 구체적 협력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70억 달러의 대한 투자 유치 등 협력관계의 내실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5월 29일의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일본측의 적극적 협조가 확보되었고,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한·일 투자협정(BIT), 2002년 월드컵 관련 협조 방안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가 협의되었다. 따라서, 6월 15일 모리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같은 평화를 향한 변혁”이라고 평가하면서 “7월의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을 촉구할 것”임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G-8성명」이 채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23일의 도쿄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양국 정상간 협의·협력체제 강화를 비롯하여 한·일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지식·정보산업 분야 협력방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 구체적 협력방안, 한·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한·일 항공운항 증대 등 다양한 의제들이 협의되었다. 특히, 교민 지위문제 및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즉, 한·일관계는 2001년에 역사 왜곡 교과서의 문부성 검정 통과 파문, 남쿠릴열도 수역내의 공치조업 분쟁,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하여 다소 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교류가 위축되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및 각료급회담 등을 통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정부간 수준의 관계는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개선되

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2년에 접어들면서 한·일관계는 이와 같은 기틀을 바탕으로 한·일 장관회담의 개최 및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한 추진 등 ‘한·일 월드컵 공동주최’의 성공을 향해 상호협력관계의 구축을 도모하면서 한층 진전되었다. 3월의 김대중 대통령-고이즈미 총리의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비롯하여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 등 양국간 협력방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하였고, 6월의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한·일 양국간에는 다양하고도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의 4강 진출, 일본의 16강 진출 등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양국 국민수준에서의 한·일관계는 매우 성숙된 단계로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 성숙 및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정부간 차원의 협력도 보다 긴밀하게 전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7월 1일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차 방일한 고이즈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월드컵 이후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증진을 비롯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위한 한·일공조, 경제·통상협력의 증진 등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9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일 정상회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남북대화의 중요성 및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0월 26일 멕시코 APEC 정상회담 도중에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미국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로 인한 한국내 반일감정의 토양속에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젊은 세대간에는 대등한 파트너 의식이 한층 성숙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양국 국민간 우호분위기가 고조되고, 다양한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보다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었던 시점에서 한국의 참여정부가 등장하였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일본의 다수 지도층 인사가 보다 성숙된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참석하였고, 취임식 직후에는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일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도쿄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ASEAN+3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 등에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아울러 5차례 이상의 외무장관급 회담이 열렸다. 즉, 2003년의 한·일관계는 비록 역사왜곡 발언 등이 있었지만 비교적 성숙된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한 우호관계가 지속되었다.

한·일 정상회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월 25일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교환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에 의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확인되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노력 등이 심도있게 협의되었다. 6월 7일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양국간 실질적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동성명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일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미사일·납치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것을 표명하였다. 양국간 동반자적 관계의 발전을 위한 교역의 확대 및 산업협

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체결을 위한 노력, 미래를 향한 한·일 협력의 강화방안으로 상호이해의 제고를 위한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등도 강조되었다.

10월 8일 인도네시아의 발리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6월 7일 「도쿄 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 확인 등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되었다. 10월 21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의 개시, 한·일 사회보장협정의 실질 합의, 한·일 세관 상호지원협정의 조기 체결 추진, 양국간 일일 생활권의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이 합의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은 양국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3월 말 일본을 방문한 한국 외무장관은 도쿄회담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강조와 더불어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8월 22일 서울 외무장관급 회담에서는 대북정책 및 6자회담과 관련된 한·일 협력 방안,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된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면제·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사회보장협정 및 세관 상호지원협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9월 UN 참석 시 가진 뉴욕 외무장관급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및 대북정책,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 10월 2일에는 도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일 FTA의 기본 4원칙으로서 실질적 자유, 상호이익의 증진, WTO 규범과의 일치 및 지역경제 통합의 모범 등을 제시하였다.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10월 한·일 예비역 군인들 간의 교류에 이어 11월 정부간 차원에서 제5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방안, 북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제2차 6자회담의 상호협력, 양국 고위 실무정책 당국자 대화 채널의 정착 등이 논의되었다.

2003년을 종합평가하면, 5월 31일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자민당 정부 조사회장의 창씨개명 정책 발언, 12월 28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東京都)지사의 한일합방 정당화 발언 등 소수 우익·보수 정치인들의 과거사 망언이 있었지만,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등 정부간 차원의 고위급 교류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일본 국내의 한류열풍으로 한·일 양국 국민간 수준의 우호적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즉,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국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음식, 한국어 공부 등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한·일 양국 국민간 수준의 우호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4년 7월 21일 제주도의 서귀포에서 노무현 대통령·고이즈미 총리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의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2005년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비자면제, 한·일간의 항구적 비자면제 문제도 언급되었다.

(나) 경제면

한·일 경제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부품산업의 일본 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

의 대한 투자는 그다지 확대되고 있지 않다.

최근의 한·일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액은 1999년도 400억 달러, 2000년도 523억 달러, 2001년도 431억 달러 2002년도 450억 달러로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한국의 무역적자 폭도 증대하고 있다. 즉, 한국의 무역적자액은 1999년도 83억 달러, 2000년도 114억 달러, 2001년도 101억 달러, 2002년도 14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의 대체를 위해 부품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의 대한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 투자 현황을 보면, 1997년도 2.7억 달러, 1998년도 5억 달러, 1999년도 17.5억 달러, 2000년도 24.5억 달러, 2001년도 7.7억 달러, 2002년도 14억 달러 등이다. 즉, 한국의 기업환경 및 노사관계의 달러안정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대한 투자는 그다지 증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 1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양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일 경제관계에는 한국의 무역적자 해소문제와 더불어 FTA 체결 문제가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서 부각되어 있다. 세계경제 환경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의 블록화가 확산되고 있고, 동북아 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 한·중·일이 세계경제의 20%, 동아시아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일 FTA는 양국 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한·일 FTA의 효과로서는 무역·투자 확대 및 서비스 시장의 상호 개방, 1억 7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형성, 기업간 전략적 제휴·협작의 활성화 등 인적·물적·자본 교류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일부에서는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 국내 제조업의 약화, 양국 산업구조의 수직적 분화 등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일 경제관계는 한·일 FTA문제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 북·일관계

탈냉전기의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전향적 접근과 좌절,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 정상회담을 통한 국면타개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변천해 오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핵 및 미사일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대화과 압박’의 병용정책과 더불어 정상회담 외교를 통한 국면타개의 시도로 전개되고 있다.

(가)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일본의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전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²²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

²²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의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1990年 12月號) 참조.

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은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 뒤 제8차까지 열렸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후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1996년 후반기에 일본의 대북한 쌀지원문제,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²³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 2월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의 한국 망명사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정책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북·일관계는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²³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접촉에서 50억 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50억 달러는 한국정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 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 의혹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원칙이 마련되었고, 수교 본회담의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실현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 처는 1,831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제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고,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WFP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사민·사키카게 연립 방북 대표단이 1997년 11월 11~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북·일관계는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의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

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 세기의 운항 중단, 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극히 냉각된 북·일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투사건, 동년 6~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일 양국 정부는 10월 18~20일 싱가포르에서 재차 외교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고,²⁴ 동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북한-일본 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은 동년 12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에서 인도적 문제 협의, 북·일간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²⁵

이로써 북·일관계는 1992년 11월의 제8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일 양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1999년 12월 19~21일의 적십자 회담 및 21일의 국교정상화 제1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다. 이어 2000년 3월 13일에 제2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진 뒤, 동년 4월 4~8일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7년만에 재개된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에는 다카노 고지로

²⁴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과 북한의 외교부 송일호 일본과장, 당 외교 당국자 등 3명이 참석하는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은 나타나지 못했다.

²⁵ 『동아일보』, 1999년 12월 3일, 12월 4일; 『朝日新聞』, 1999년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북한 담당대사가 일본측 대표, 정태화 외교부 순회대사가 북한측 대표로 참석하여 북·일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5월 하순에 도쿄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북·일은 2000년 7월 15~17일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이어 ‘아세안 지역포럼’(ARF) 기간 중인 7월 26일에 외상회담을 갖은 뒤, 8월 21~25일 제10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도쿄에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촉과 더불어 일본국내에서는 동년 7월 3일 북·일 국교정상화 촉진활동을 위한 ‘북·일 국교촉진 국민협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지만, 제10차 도쿄 국교정상화 회담 역시 북·일의 입장만 되풀이되었고, 쌍방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합의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 및 미·북관계 진전의 영향으로 제3차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9월 12~18에 이루어졌고, 10월 6일에는 50만 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진전에 자극을 받은 일본 정치권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일간의 대화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제11차 국교정상화 회담이 높은 관심 속에 10월 30~31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11차 베이징회담도 기대와는 달리, 차기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2001년 11월 일본 경찰이 1999년 5월 파산한 『조선동경신용조합』(朝鮮東京信用組合)의 비리 수사와 그와 관련된 조총련 중앙본부의 강제 수사를 단행하자, 북·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아울러 2001년 12월 17일 북한 적십자회가 일본인 납치의혹 조사 사업의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한층 악화되었다.

(나) 1차 정상회담과 북·일관계

냉각상태의 북·일관계는 2002년에 들어오면서 4월의 북·일 적십자 회담, 7월의 브루네이 외무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은 대사급 회담으로서는 북·일 양측의 쟁점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수뇌회담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8월 18~19일의 적십자 회담 및 25~26일의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 등에서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하여 동년 9월 17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9월 17일 아침에 납치 일본인들의 사망문제로 인하여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관해 시인 및 사과를 함에 따라 주요 현안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되고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 (<표 II-2> 참조), 일본 정부는 이를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강조하였다.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의 일괄적 타결에 따른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되었다.

<표 II-2>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향후 과제

의제	합의사항	향후 과제
일본인 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피랍 11명 중 생존 5명, 사망 6명 생사 인, 생존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자 귀국, 사망자 사인 조사
과거청산·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무라야마 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답습 ○ 한·일 국교정상화 동일방식 보상 ○ 1945. 8. 15 이전 재산청구권 상호포기 ○ ①무상지급 ②저금리 장기차관 ③국제기구 통한 인도적 지원 등 3개항의 경제협력방안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및 차관 규모 문제 ○ 국제협력은행 통한 간접융자 및 신용공여 여부 검토
핵·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2003년 이후 미사일발사 실험 계속 유예 ○ 한반도 핵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약(94년 제네바합의) 준수 및 관련국 대화 해결 원칙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 실험유예 구체적 시한 확정 문제 ○ 영변 핵시설 사찰 등 핵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문제 ○ 북한 재래식무기 문제
국교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장관급 수교협상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 조총련계 교포 지위 문제 ○ 문화재 반환 문제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밝힌 피랍 일본인 11명 중 5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국내에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의 북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국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남북 일본인 생존자 5명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납치·경험·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차기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일본을 일시 방문한 생존자 5명이 잔류의향의 표명과 더불어

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향에 안착하고, 일본 정부가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거주 가족(8명)의 영주귀국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8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일간에는 갈등이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23일의 크로포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강경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정부가 압박에 비중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북·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일본정부는 대북한 ‘대화와 압박’의 병용정책을 전개하면서도, 8월 제 1차 6자회담, 9월 유엔총회, 10월 인도네시아 ASEAN+3 정상회담과 방콕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북한은 납치문제는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후 북·일 양국은 양자 간의 주요 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다자간회담의 틀 내에서 접촉을 갖거나, 수면아래의 양자 협상을 전개하였다.

(다) 2차 정상회담과 북·일관계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 상황,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도 일본 국내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 국내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국민연금 미납 문제가 일본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후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제1야당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의 사임 등을 초래하

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납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따가운 비판을 가하면서 납치피해 가족 8명의 무조건 귀국 문제 및 ‘사망’ 또는 ‘입국 사실이 없음’이라고 발표한 납치피해자 10명의 재조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의 정치적 공세를 상쇄시키면서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민지지율의 제고를 지향하여 전략적 승부수로써 평양방문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6자회담의 성사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도 그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 문제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 문제에 깊게 간여할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 한계에 부딪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9·17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주요 현안 및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 국교정상화 협상의 재개 계기마련 등을 위해 방북을 결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5월 22일 약 1년 8개월 만에 평양 재방문을 단행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핵심현안인 핵·미사일문제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는데, 제2차 김정일·고이즈미 평양회담의 결과 <표 II-3>과 같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즉,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재조사 합의를 받아냄과 동시에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의 준수와 더불어 북한의 제4차 6자회담 참가 및 미사일 발사 동결 등의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표 II-3>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사항

- 9·17 평양선언의 이행 확인
-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 등의 및 소가히도미 씨 가족 3인의 제3국에서의 조기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정
- 북한은 사망·행불자의 조사를 직접 착수하고, 여기에 일본도 참가
- 인도적 입장에서 일본은 국제기관을 통해 식량 25만 톤 및 1,000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
- 일본은 평양선언 중시의 입장에서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음.
- 일본은 조총련계 한국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이 함께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함.
- 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이전인 5월 15~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방북 지지율이 73%로 나타났다.²⁶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인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²⁶ 『毎日新聞』, 2004년 5월 17일.

어 납치 피해자 5명과 함께 귀국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40%대로 하락하였던 내각지지율은 54%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내었다.²⁷

그러나 북·일 납치문제 실무자회의에서 행방불명 10인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4년 내로 예정했던 대북 2차 경제지원을 보류하려 하고 있다.²⁸ 즉, 일본 정부는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5만 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중 식량 12만 5천 톤과 700만 달러의 의료품은 10월 중순경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 지원은 보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를 하나의 대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된다 해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일관계는 다소의 진통을 겪을 것이다. 즉, 납치문제 및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없이 일본의 본격적인 대북 경제지원도 어려울 것이며,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

(1) 정부기관

(가) 내각부의 내각정보조사실

1952년 4월 발족된 내각정보조사실은 일본의 경우에 국가단위의 중앙정보기관이 없으므로,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내 5개의 실 가운데 하나인 내각정보조사실이 총리의 정보참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²⁷ 『朝日新聞』, 2004년 5월 24일.

²⁸ 『東京新聞』, 2004년 10월 29일.

내각정보조사실의 조직은 경찰청·자위대·외무성·공안조사청·재무성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으로 구성되어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그 기능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수집한 해외 및 국내정보 등을 분석하여 총리에게 주 1회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종합분석된 보고서는 내조실장 → 내각관방장관 → 총리의 채널을 통하여 주 1회 정기보고 및 필요 시 수시보고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가개혁을 위해 1999년 7월 「정부조직개편법」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총리 직할 정보기제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각 부서별로 분산된 정보수집·분석 업무를 일원화하여 외교·안보 등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집약 및 분석·평가하기 위해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내각정보회의²⁹를 1998년 10월에 발족시켰다. 아울러 총리 직할의 내각정보조사실을 지위격상시켜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다. 내각정보조사실은 영어명칭이 Cabinet Information Reserch Office로부터 Cabinet Intelligence & Research Office로 변경됨과 더불어, ‘내각조사실장’의 명칭도 ‘내각정보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직급도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이 격상되었다.

따라서 내각정보실은 공안조사청,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 각 정보기관의 수집내용을 분석·집약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 및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반도와 관련된 정보의 집약·분석·평가·보고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²⁹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관방부장관, 내각정보조사실장, 경찰청 장관, 공안조사청 장관, 외무성·방위청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다.

(나)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 및 국제정보총괄관

외무성의 조직과 기구는 10국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은 외무성 전반을 총괄하는 총합정책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대양주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중동아프리카국 등 5개의 지역국과 경제국·경제협력국·조약국·국제정보국 등 4개의 기능국이다.

그리고 주요 포스트는 외무장관·부장관·정무관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 이외에, 핵심 보직으로 외무사무차관, 외무심의관, 국장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정치권의 주도로 시작되다가 곧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외무성 관료를 통한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주목되는 직책은 외무심의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고, 부서는 아시아대양주국 및 국제정보국이다. 외무심의관과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및 제2차 평양 방문과 관련 핵심 역할을 하였다.

1) 아시아대양주국

아시아대양주국은 일본과 지리적·역사적·문화적·경제적 등으로 관계가 깊은 한국·중국 등의 동북아 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아 등의 동남아 지역, 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 등의 서남아시아, 그리고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솔로몬 제국 등 오세아니아 지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대양주국은 지역정책과, 외지정리실, 북동아시아과, 한일경제조정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1과, 동남아시아 제2과, 서남아시아과, 대양주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있는 부서는 지역정책과, 북동아시아과, 한일경제조정실 등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동아시아과가 실무부서이다. 즉, 외무성 실무차원의 대북접촉은

북동아시아 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제정보총괄관

국제정보총괄관은 외무성의 국제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국제정보국이 2004년 8월 1일부로 폐지·개편됨과 더불어 신설되었다. 국제정보총괄관은 국제정보국의 기능 가운데 특히 안보분야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정보국은 1993년 8월 외무성 차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 축적 및 관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1999년 7월 「정보조직 개편법」의 성립과 더불어 2001년 1월부터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이 강화되면서 대폭적인 인적 충원이 이루어졌다.

국제정보국의 조직은 국제정보과, 분석 제1과, 분석 제2과, 조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지역국 및 4개 기능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과는 다른 각도에서 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5개의 지역국 및 4개의 기능국이 일일 안전처리 및 정책판단에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국제정보국은 중장기적이고 횡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분석 및 판단을 하고 있다. 국제정보국의 부서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된 부서는 국제정보과 및 분석 제2과이고, 분석 1과도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대북정책을 통하여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국제정보국의 국제정보총괄관으로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과장직은 국제정보관으로 개칭되었다.

(다) 법무성의公安조사청

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방지법에 의거 1952년에 설치되었다. 공안조사청의 주요 임무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조사, 무차별 대량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에 대한 규제, 관계기관에게 국내외 공안동향 및 정보 제공, 국제공안기관의 협력 등이다.

공안조사청의 주요 조직은 내부부국, 지방 지분부국(支分部局), 시설 등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부부국은 총무부, 조사 제1부 및 제2부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지분부국은 전국에 8개의 공안조사국 및 43개의 공안조사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시설 등의 기관으로서는 공안조사청 연수소가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내부부국의 조사 제2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 2부에서는 해외공안동향을 조사·분석하면서 북한 및 조총련을 담당하고 있다.

(라) 방위청의 통합정보본부 및 방위정보회의

국제사회에서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와 관련, 일본 정부는 군사관련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즉, 일본 정부는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통합정보본부'를 창설하였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방위정보회의'를 설치하였다.

통합정보본부는 1995년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수립을 계기로 통합막료회의(한국의 합참에 해당) 산하에 설치되었는데, 정보수집 및 분석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유사한 기관이다.

방위청의 '방위정보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발족하였는데 위기 발생시 '통합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 정부연구기관

1)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국제정치·국제경제·국제법 등 제(諸)과학의 발전 추구, 국제문제의 조사연구를 위한 제(諸)수단의 강구, 국제문제의 정보·지식·사상의 교환 촉진, 해외대학·연구기관과의 교류 추구 등의 취지아래 1959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60년 9월 외무성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현재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중장기적 시야에서 국제문제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국제문제연구기관으로서 주로 국제관계·외교문제의 기초연구, 외교정책의 기획 및 입안을 위한 국제정세의 조사·연구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 연구센터,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아메리카 연구센터, 글로벌 이슈 연구센터, 군축·불확산 촉진센터 등의 5개의 연구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즉, 글로벌 이슈 연구센터에서 유럽 지역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대체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는 1987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북한 정세, 중국의 경제발전과 향후 정치적 영향력, ASEAN 제(諸)국의 군비 근대화 등 지역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및 경제협력 등에 관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2) 방위문제연구소

방위연구소는 1952년 8월 보안청 보안연구소로서 발족하였다. 1954년에 방위청 방위연수소로 개칭하였고, 1985년 4월 방위청 방위연구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방위연구소는 방위청 산하의 연구·교육기관으로서 조사연구, 교육, 전사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연구소의 주요조직은 연구부, 교육부, 전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보직은 소장·부소장 및 총괄연구관 등이다.

각 부서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전사부는 전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사 편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부는 간부 자위관 및 타부처 간부 직원의 안전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부는 안전보장정책 및 전략이론 연구, 국제관계 및 지역정세에 관한 조사·분석 등을 주요 활동 분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부는 안전보장이론, 비전통적 위협과 군사력의 새로운 역할, 현대 분쟁과 군의 국제적 공조, 미국 일극 주도하의 국제관계와 안전보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 방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문제연구소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상황,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북한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현황 등에 관해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

3) 아시아경제연구소

1958년 재단법인 아시아경제연구소로 발족하여 1960년 7월 통상산업성(현재의 경제산업성)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7월 일본무역진흥회(JETRO)와 통합되었고, 2003년 10월부터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의 개발도상국·지역의 산업·경제 및 무역 등에 관해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조사연구, 연구교류, 자료정보, 개발

연수 등이다.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주요 연구조직은 지역연구센터, 개발 연구센터, 신영역연구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연구센터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지역의 무역상황, 산업 및 경제 상황에 관해 조사·연구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현황도 지역연구센터에서 조사·분석되고 있다.

개발연구센터는 개발도상국·지역의 사항별 경제분석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신영역연구센터는 지역연구센터 및 개발연구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해 기존의 조직 틀을 넘어 분석·연구를 하고 있다. 북·일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북·일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남북경제교류 및 북한 경제연구에 관한 연구도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2) 민간연구기관

(가) 평화안전보장연구소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1970년대 중반이후 일본 국민들의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족되었다. 즉,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1978년 10월 민간연구기관으로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독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 및 제언
- 군비관리 등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언
-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지식의 국민 보급
-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
-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도서·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공개

최근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 분석,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안전보장, 미·일 공동 한반도 연구, 위기관리에 관한 제 문제, 유사체제와 법적 조치, 미국의 신군사전략 및 군사체제의 금후 동향, 한반도의 장래와 일본의 안전보장, 중국정세와 일본의 안전보장, 동아시아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 동아시아의 핵위협 삭감연구 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남북한군사력의 현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을 분석하고 있는 『아시아 안전보장(Asian Security)』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나) 세계평화연구소

세계평화연구소는 1988년 6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과제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정책제언을 위해 총리부, 방위청, 경제기획청,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 등 6개 부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 따라서 세계평화연구소에는 총리부, 방위청, 경제기획청,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은 물론 자위대, NTT, NHK, 일본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나온 젊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즉, 세계평화연구소는 형식상으로 민간기관이나 반민반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평화연구소는 세계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어프로치’, ‘동아시아 장래의 안전보장체제와 일본의 안전보장’, ‘동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핵 불확산체제의 재구축과 핵군축’, ‘다원적 국제조직의 역할’, ‘유럽 확대의 세계적 의미’, ‘중국의 장래’ 등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아시아 지역 레짐의 구축과 일본의 역할’, ‘최근 러시아 정세와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 ‘미국의 대외정책’ 등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

(다) 환일본경제연구소

환일본경제연구소는 1993년 10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정보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동북아 지역과 일본과의 경제교류 촉진,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회의·세미나·심포지움 등의 개최, 동북아 지역 연구기관과의 교류, 기업의 국제교류 기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은 조사연구부와 경제교류부로 나누어져 있다.

한반도와 가까운 니카타에 위치한 환일본경제연구소는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주요한 심포지움·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일종의 대북문제 관련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환일본경제연구소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 개방정책의 동향’, ‘러시아 극동 중소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극동 발전 프로그램: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와 협력의 전망’, ‘동북아 수송회랑에 관한 조사’, ‘동북아 물류 및 시베리아 철도의 국제이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에너지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환일본경제연구소에서는 매년 『동북아경제백서』가 발간되고 있다.

(라) 북태평양지역 연구센터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에 위치한 북태평양지역 연구센터는 1984년 북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 국제감각과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 양성, 홋카이도의 국제화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북태평양지역 연구센터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캐나다 등 북태평양지역 8개국의 연구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 ‘북태평양 학술교류회의 홋카이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홋

카이도가 직면하고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산·학·관의 공동연구에 의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북태평양지역연구센터는 국제교류권 형성에 관한 조사업무, 중국 서부 대개발계획의 조사연구, 홋카이도의 선진농업기술의 해외 이전 가능성의 조사 연구, 해외경제 조사·연구 업무 등에 역점을 두고 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홋카이도의 선진농업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 조사·연구가 주목된다.

(마) 게이오대학의 동아시아연구센터

게이오대학 창립 1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 지역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연구센터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연구를 하였다.

지역연구센터는 ‘근세 한·일관계와 경제교류’, ‘한국전쟁의 재검토’, ‘중국 청대의 국가와 지역’, ‘중국의 환경문제’, ‘중국인의 이동과 문화창조’,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사회경제적 분석 등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치 한·일 공동세미나’, ‘한·일 양국의 정치와 외교’, ‘중·일관계 150년 중·일 공동심포지움’, ‘한반도-전환기의 도전 국제심포지움’, ‘미국, 한국과 북한 국제심포지움’, ‘한국과 일본의 민족문화 한·일 공동심포지움’, ‘일본과 북한 코리아포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중·일의 역할: 미·중·일 3국회의’,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지역협력 국제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였다.

지역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한 뒤, 동아시아 연구의 거점을 지향하여 2003년 10월 ‘동아시아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층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역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바) 시즈오카대학의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

21세기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시즈오카 대학은 2003년 1월 동대학의 국제관계학과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아직 축적된 연구성과는 미미하지만, 남북한에 관한 연구자료를 조직화·체계화함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사) 히로시마대학의 평화연구센터

히로시마대학의 평화연구센터는 세계최초의 핵무기에 의한 피폭 경험에 있는 히로시마 지역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1975년 7월 일본 최초의 평화학 학술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유일한 국립대학의 평화학 연구기관으로서 평화학의 연구 및 조직화, 평화학에 관한 문헌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정리, 평화학에 관한 연구성과 및 정보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히로시마 평화과학』(廣島平和科學)을 발간하고 있다.

히로시마대학 평화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미사일방위(MD)를 둘러싼 현상과 문제점’, ‘무력분쟁에서의 열화우라늄 무기사용’, ‘탈냉전시대의 핵문제와 일본’, ‘냉전 후 세계 핵상황과 히로시마’ 등이 있고, 아울러 ‘분쟁과 인간 안전보장’, ‘평화구축과 법의 지배’, ‘민족운동·민족분쟁에서의 언어의 역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히로시마 시립대학의 평화연구소 역시 세계최초의 핵무기에 의한 피폭 경험이 있는 히로시마의 비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1998년 4월 평화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1세기 핵군축 연구’, ‘신개입주의의 정통성과 합리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아울러 ‘동아시아의 신뢰조성 메카니즘’, ‘시민에 대한 군 폭력의 비교사적 연구’, ‘집단 폭력’, ‘동아시아의 핵 군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는 공개강좌, 심포지움, 출판 등을 통하여 학술연구의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고 있다.

(자) 큐슈대학 한국센터

큐슈지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큐슈대학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12월 한국센터를 설립하였다. 즉, 일본의 국·공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를 정면으로 내건 연구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큐슈대학의 한국센터는 4개의 주요 분야 즉 사회네트워크, 정치경제 시스템, 인간환경부문, 연구기획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반도 관련 연구는 물론 국제심포지움,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큐슈대학의 한국센터는 한국연구의 거점으로서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동 연구센터와 한국 각 지역과의 보다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해프로젝트(광케이블 구축)’를 추진하고 있다.

다. 한인단체

재일한인사회는 1945년 종전 시 재일한인의 수가 약 200~240만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약 60만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회복된 민족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좌우세력을 망라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연맹」이 좌파세력들의 세력확산 공작으로 인하여 좌경화로 기울게 되고, 이에 반발한 우파 민족주의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 촉진 청년연맹」을 설립함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좌·우파의 대립을 하게 되었다. 즉,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한인사회는 분열되고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체제이념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 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 「신조선건설동맹」(건동) →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1) 민단

좌·우파로 분열된 재일한인사회가 신탁통치문제, 체제이념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우파 한인들은 청년층 조직으로 「건청」을 결성하였고, 장년층 조직으로 「건동」을 결성하였다. 「건동」은 신탁통치배를 지지하는 「조련」을 반민족단체로 비판하고,³⁰ 「건청」과 힘을 합쳐

³⁰ 「建同」은 『신조선』 창간호와 제2호, 제3호를 통하여 격한 논조로 신탁통치반대를 주장했다.

「조련」에 대항하였다. 즉 「건동」과 「건청」은 ‘신탁통치 반대 대회’를 열어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3·1 독립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재일한인사회의 좌경화를 막기 위하여 우파 민족진영의 방파제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재일한인들의 거주·생활안정 및 권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우파계 재일한인사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한인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946년 8월 31일 개최된 「건동」 제2회 전체대회에서는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거류민단결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동년 9월 28일 개최된 「건동」·「건청」의 전국대의원 합동대회에서는 「민단」 창설에 관한 제원칙이 합의되었으며, 동년 10월 3일에는 「재일조선거류민단」의 결성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재일조선거류민단」 도쿄 결성대회에는 「건청」·「건동」 뿐만 아니라 「건국축진회」, 「조선구락부」, 「조선거류민회」, 「대한협회」, 「조선무역협회」, 「조선문화협회」 등 유명무실한 단체를 포함하여 20여개 단체의 대표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민단 제1차 선언」³¹이 발표되었다.

도쿄결성대회 후 「재일조선거류민단」은 전국조직을 지향하여 각 현(縣)에 지방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10월 4~5일 전국대회를 소집하여 「민단 제2차 선언」³²과 더불어 조직명을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하였다.

민단은 재일한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이 혁신계 단체를 지지하는 성향때문에 조직적 열세에 있었지만, 재일 한인들의 인권 및 생활권을

³¹ 「민단 제1차 선언」의 3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생안정을 기함. 2. 우리는 재일동포의 교양향상을 기함. 3. 우리는 국제친선을 기함.

³² 「민단 제2차 선언」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함. 2.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권옹호를 도모함. 3. 우리는 재류동포의 민생안정을 도모함. 4. 우리는 재류동포의 문화향상을 도모함. 5. 우리는 국제친선을 도모함.

위하여 「사법육성회」(1947), 「협동조합」(1947)을 설립하고 ‘외국인 등록 투쟁’(1947)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조련」 및 그 산하의 「재일조선민주 청년동맹」의 극좌 폭력노선에 따른 테러의 감행속에서도 조직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였다. 즉, 민단은 1949년 10월경에 지방본부 조직 43개소, 지부조직 207개소, 분단(分團)세력 133개소로 성장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시에는 「재일 의용 학도군」을 조직하여 참전하였으며, 현금 932,712원(圓), 위문포대 2,825자루를 본국에 보냈다. 민단은 좌익세력의 테러, 재일한인사회의 압도적인 북한지지,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을 정비하고 성장을 추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단은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단의 조총련계 동포 모국방문사업은 재일한인 사회에서 민단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반면, 조총련계 한인사회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조총련 조직을 근거에서 동요되도록 하였다.

한국정부의 지원아래 추진된 민단의 교육사업은 비록 규모면에서 조총련계 학교보다 상당히 열세에 있었지만, ‘모국이해교육’ 및 ‘현지적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재일 한인들의 민족교육에 적지 않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단의 재일한국인 권익신장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행정차별 철폐 운동’과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0년 ‘주택입주 차별’ 및 ‘금융공고(公庫) 차별’이 해소되었고, 사법연수생, 아동수당, 교원채용, 지방공무원, 소학교 취학안내 등에서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아울러 1981년에는 최대의 난관이었던 ‘국민연금’ 문제에서 국적조항의 철폐와 함께 복지제도에서의 국적차별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민단은 이와 같은 활

동을 통하여 재일한인사회에서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조직을 확장시키면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재일한인 1세대들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민족의식을 지녔다. 그러나 2·3·4세 한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또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단계 3·4세 한인들은 조총련계 3·4세 한인들보다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일본사회에 대체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³³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이제 겨우 7%정도에 불과하고, 2세에 이어 3·4세가 재일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민단계 청장년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서 본명이 아닌 통명인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가 민족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단계 3·4세 젊은 한인들의 취약한 민족의식은 일본 국내외의 탈 이념화 성향 및 국제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한층 약해지고 있고, 이는 민단에 대한 무관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단계 젊은 세대들이 민단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소극적 참여 또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민단은 조직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조직기반의 침하에 따른 조직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붕괴론의 대두와 함께 한때 민단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⁴

³³ 조총련계 교포들이 민단계 교포들에 비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민단계 교포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하여, 조총련계 교포들은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저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이 전개되면서 민단무용론은 약화되었고, 새로운 민단의 활로 및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2) 조총련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조련」이 폭력적인 극좌노선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함에 따라,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1950년 4월 24일 「조선인단체협의회」를 결성한 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조직재건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51년 1월 9일 전국적 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 정식 발족되었다.³⁵ 한국전쟁의 영향속에서 결성된 「민전」은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의 결집체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갔다.

1953년 11월 11일 「민족대표부」의 주도아래 개최된 제4차 「민전」 전국대회 이후부터 중앙간부의 다수가 일본공산당의 당원이 됨에 따라,³⁶ 「민전」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는 「조련」 때보다 더욱 긴밀해졌고, 아울러 「민전」은 일본공산당의 혁명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련」이 해산된 후 재일한인 좌파세력들은 일본 공산당의 영향력으로써

³⁴ 북한이 붕괴되면 이어서 조총련도 와해되고, 따라서 조총련의 상대인 민단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인식이 김영삼 정부의 재일교포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³⁵ 「민전」의 결성이 지연된 것은 한국전쟁의 전황과 관계가 있다. 즉 「조련」계 인사들은 1950년 9월 14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전기로 전황이 북한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11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북한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세화대를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발족시킨 것이다.

³⁶ 「민전」시기까지만 해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국 일당의 원칙”이 엄존하였으므로, 재일한인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공산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야 했다.

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면서도,³⁷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에서 「민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일본공산당이 「민전」 결성 1개월 후인 1951년 2월에 개최된 제4차 전국협의회에서 무력투쟁을 행동방침으로 결정하자 「민전」은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전」의 활동은 격렬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격한 투쟁은 대외적으로 이전의 「조련」계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대내적으로 일본 공산당원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치룸에 따라 조직의 약체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민전」의 내부에서는 일본공산당의 극좌 폭력노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아울러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일본공산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전」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일본 공산당 대신에 북한으로의 경사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대일본 접근과 더불어 「민전」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확대되어져 갔다. 북한은 국제환경에서의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³⁸와 일본에서의 대공산권 유화적 정권의 등장으로³⁹ 대일본접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⁴⁰됨

³⁷ 일본 패전 후, 「조련」은 일본 공산당과는 당 재건 때부터 일심동체로 활동을 해왔는데 일본당국은 「조련」과 일본 공산당의 해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련」에 대해서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즉 일본당국은 「조련」에 대해서 해산 및 재산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데 비하여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는 중앙간부들의 공직에서의 추방, 당 기관지 「적기」의 무기한 발행정지, 점령군 총사령부의 「레드 퍼지(red purge)」 지령에 따른 신문·방송·통신분야 등에서의 공산당계 인사 약 14,200명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조련」의 간부들은 일본 당국에 대해서 민족차별에 따른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즉 「조련」의 구간부들은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이탈된 새로운 조직체의 결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³⁸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평화공존 노선을 주창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제환경은 동서냉전적 상황으로부터 평화공존을 위한 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³⁹ 1954년 1월 일본국내에서는 친미적인 요시다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외정책은 대미의존정책으로부터 자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⁴⁰ 배정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에 따라 일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아울러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민전」으로 하여금 일본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지도노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파가 「민전」의 주류인 「민족대표부」파에 대하여 정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제19차 「민전」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민족주의파가 대세를 장악함과 더불어 「민전」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의 주도아래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 24일 북한의 지원아래 치루어진 제6차 「민전」 전체대회를 통하여 「민전」과 「조방위」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동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결성되었다. 북한과 「민족주의」파의 주도아래 「조총련」이 출범하였다는 것은 해방 후 재일 한인사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규제해 왔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대원칙인 ‘일국일당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일 한인좌파세력들은 해방 후 일본공산당과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인적·조직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일본정책 및 재일교포 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에 북한이 대일본 유화적 접근 및 재일교포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재일교포사회의 좌경화를 가속화하였고, 아울러 일본사회 및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는 「조총련」의 조직적 발전과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고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해외 전위조직을 확보한 것이다.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노선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⁴¹ 따라서 조총련은 도

第5卷 (서울: 統一院, 1994), pp. 133-213.

⁴¹ 조총련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주관되었다.

교에 있는 중앙본부가 지방조직을 통괄하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중앙조직은 중앙대회(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지방조직은 일본의 행정구역에 준해서 도(都)·도(道)·부(府)·현(縣) 본부 49개소, 지부 320개소, 분회 2,000개소와 7개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총련은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성별 활동과 여론주도를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여러 단체들을 두었다.

1957년에 조직 정비를 완료한 조총련은 재일 한인사회의 세(勢) 확대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권리의 옹호, 민족교육의 추진, 북조선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정치목표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총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사회 및 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총련의 민족교육사업과 금융사업은 조총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업적인데, 조총련은 민족학교와 금융조합을 통하여 재일한인들의 결집을 도모하였고, 조직의 확대·발전을 추구하였다.⁴²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3·4세의 젊은 세대들은 혁신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교육

말하자면, 조총련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인 한덕수의 지휘아래 한덕수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8,500명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조총련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 3월 결성된 ‘학습조’는 비밀조직으로서 ‘김일성주의’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고 ‘조국혁명=조국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핵심적인 ‘혁명투사’조직이다. ‘학습조’는 북한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였다.

⁴²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북한지지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일본태생의 한인 2세, 3세들을 위하여 한글교육과 역사,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조총련계 한인들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의 자녀들도 적지 않게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다녔다. 또, 조총련계 금융조합은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민족차별과 불리한 대부조건에 고생하던 재일한인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데, 조총련계 한인뿐만 아니라 민단계 한인들도 조총련계 금융조합을 이용하였다.

사업 및 출판·문화사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조은 도쿄 신용조합의 파산 등 금융사업의 몰락으로 상공인들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조총련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적, 이념적 기반의 침하와 더불어 조직 몰락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총련 중앙본부는 위기의식 아래 조직의 사수·보존을 위해 2003년 10월 개최된 ‘전국 산하단체·사업체 책임자 회의’를 통해 ‘7개월 운동’을 전체 산하단체에 하달하였다. ‘7개월 운동’ 관련 지침에서는 조총련 조직의 사수·보존 및 제(諸)활동의 강화를 위해 신세대 조직원 중심의 조직 활동 전개와 동포권익 옹호활동의 강화를 2대 중심 운동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신세대 조직원 영입, 민족교육사업 강화(학생 유치활동 등), 지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동포생활 봉사활동(기존의 『동포생활상담 종합센터』 활용) 강화 등을 중점 시행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결속 및 재건을 위해 ‘7월 운동’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조총련내 개혁파는 맹목적인 북한 추종노선을 비판하고 재일한인들의 실생활에 역점을 두는 개혁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2004년 2월 17일 ‘총련의 재생을 바라는 네티트 포럼21’을 개설하였다. 즉,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조총련 비판 및 개혁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현직 활동가와 상공인 수십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04년 5월 28~29일 개최된 제20차 전체대회에서는 재일한인들의 현실적 요구와 지향에 맞추기 위하여 강령 개정의 단행과 더불어 재일한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전환을 표명하였다. 즉, 조총련 중앙본부는 제20차 전체대회에서 최근년간 조총련 및 조총련계 한인사

회가 종래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뒤, 재일한인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직이 되도록 현실적인 동포들의 권익옹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총련 사업을 '새 세대의 애국애족운동' 및 '각계각층의 재일한인들을 망라한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강령개정을 단행하였다. 조총련의 제20차 전체대회에는 사민당은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민주당의 후지이 간사장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이와 같은 제20차 전체대회를 조직 사상적 강화 및 재일한인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2005년의 '조총련 결성 50돌'의 기념사업을 전조직적·동포사회적으로 치루기 위해 조직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 중앙본부는 조직 강화를 위한 새 세대의 민족성 계승을 지향하여 민족문제체육 사업을 '폭넓은 동포운동'으로, 민족교육사업을 '전 기관, 전 동포가 돕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일본 사회에서의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 한국대중문화의 인기 급증 및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조총련계 한인들이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총련계 한인들도 '조선적의 조선'을 북한이 아닌 '식민지 이전의 조선'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며, 무국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의 조직 및 사상 강화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조총련의 조직 침하는 계속될 것이다.

라. 대일 통일역량 평가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한·일관계의 경제적 차원 및 안보적 차원에 의해서 매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은 경제적 차원에서 일본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동남아와 동북아 경제의 첫 결합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더불어 ASEAN+한·중·일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확대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⁴³ 동북아 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고 점을 중시하면서 동북아 경제권의 구축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동북아 구상은 한국과의 FTA 체결 등 전향적 경제협력,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등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 투자에 있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인 일본은 한국 및 한반도의 전략정세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에는 중요한 직·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다.⁴⁴ 1997년 9월의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제정과 더불어 미·일의 군사협력 범위가 일본 본토 중심에서 주변지역 유사시까지 타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한반도 긴급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한국 및 미국과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21세기 신 군사전략과 더불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⁴³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⁴⁴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GPR: Global Posture Review)가 전개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전력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및 전후결산 차원의 북한과 국교정상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에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정책 교류 및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경우, 한·일 양국의 유사 부서 및 기관 간에 정책네트워크의 형성과 더불어 교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국정원은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국·국제정보총괄관 등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정책협의를 하며, 국방부는 방위청을 파트너로 삼아 정책논의 및 교류를 행하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해당부서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국제정보총괄관, 경제산업성, 방위청 등을 상대로 하면서 정책논의 및 교류를 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경우, 양국의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교류 및 정책연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일 양국 워크숍 및 세미나, 국제심포지움 등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하여 정보 및 의견 교환, 양국 정부의 정책에 관한 지지·비판 등의 논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민단을 비롯한 재일한인사회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책홍보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강연, 세미나 등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민단체 재일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통일부 등 한국의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워크숍을 갖는 프

로그래도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 기관들의 활발한 상호교류, 일본내 재일 한국사회의 존재에 따른 지지기반의 확보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일본내 통일역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겨울연가’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한류’ 붐은 일본내 한국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의 한국의 통일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미전략 및 동아시아전략, 대북전략 등에 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한·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개발과 함께 설득논리를 전개하여야 하는데, 아직 이와 같은 한국측의 전략적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대일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대일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실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1965. 12. 18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지지	상
경제관계	- 교역(2003년): 535억 달러, 190억 달러 교역 적자(한국의 총 무역흑자는 150억 달러) - 투자(1962~2004. 6): 한국의 대일 투자 9억 8,800만 달러(735건), 일본의 대한 투자 144억 달러(7,975건)	중
고위인사교류	양국 정상회담·외무장관 회담 정례적 개최	상
학술교류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간 교류 활성화	상
한인동포 네트워크	민주평통 일본자문위원 476명, 민단 및 조총련 활동	상

3. 캐나다

미주대륙 북부에 위치한 캐나다는 면적이 약 997만km²로서 한반도 면적의 약 45배이고 인구는 3,149만 명이며 수도 오타와는 약 100만 명의 도시이다. 주요 민족은 영국계(28%)와 프랑스계(23%)이며, 기타 독일계, 이태리계, 중국계 등이 있다.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연방정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주민 중에서 영어 사용자가 59.2%이고 프랑스어 사용자는 23.3%이다. 종교는 카톨릭이 45.7%, 프로테스탄트가 36.2%이다.

1867년 7월 1일 국가가 성립된 캐나다는 4주의 연합체로 구성된 입헌군주국으로서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에 속하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여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당, 보수당, 퀘벡블록, 신민주당 등이 있다.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의 클라크슨(Adrienne Clarkson) 총독은 1999년 10월 7일, 마틴(Paul Martin) 수상은 2003년 12월 12일 각각 취임하였다.

2002년 잠정집계로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8,364억 달러, 1인당 GDP는 26,559 달러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목재, 니켈 등의 주요 자원을 갖고 있고, 2002년 무역액은 5,320억 달러로서 수출 2,831억 달러, 수입 2,48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⁴⁵

다음 절에서는 한반도와 상기와 같은 캐나다의 관계를 캐나다·한국 관계와 캐나다·북한관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⁴⁵ “캐나다 약식개황”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canada.htm>.

가. 한반도관계 개황

(1) 캐나다 · 한국관계

한국과 캐나다는 장기간에 걸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와 캐나다가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구한말의 교육과 의료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 이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정작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코필드(Frank Schofield, 1889~1970) 박사이다. 수의학 박사인 그는 1916년 선교차 한국에 와서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고 1920년 캐나다로 추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1958년 국민으로 초청하였고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최고훈장을 1968년 수여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이다.⁴⁶ 이외에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 교육에 공헌한 에이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 박사, 한국의 결핵퇴치에 일생을 바친 헐(Sherwood Hall, 1893~1988)박사, 한국을 서양에 소개하고 한영사전을 만들며 『천로역정』을 번역한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공식적인 관계는 1947년 남북한 자유선거 감독을 위해 캐나다가 UN한국임시위원단에 참가한 때부터 시작하였고, 캐나다는 1949년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UN 파견국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인 26,791명(육군 3개 보병대대, 해군 구축함 3척, 공군 1개 비행중대)을 파견하였고, 516명의 희생자를

⁴⁶ <<http://www.korea.gc.ca/political/schofield.e.html>>.

났다. 한·캐나다 양국은 1963년 1월 1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국은 1964년 10월 2일 주캐나다 상주공관을 그리고 캐나다는 1973년 10월 5일 주한 캐나다 상주공관을 각각 설치하였다.⁴⁷ 이후 양국은 아·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였다.

정치면에서는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의 캐나다 공식방문 및 1981년 9월 트뤼도(Pierre E. Trudeau) 수상과 1986년 5월 멀로니(Brian Mulroney) 수상의 한국 공식방문 등 주요 인사 교류가 있었다.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가 1983년 6월 서울에서 이상옥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코피손(Copithorne) 캐나다 외무부 아·태 부차관보 간에 개최된 이후 1989년 11월까지 제5차 회의가 열렸다.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무역통상협정」(1966.12), 「낙농차관협정」(1967.10), 「소맥원조협정」(1970.3), 「경제기술협력 각서」(1971.4), 「원자력협정」(1976.1), 「이중과세방지협정」(1980.12), 「한·캐나다 항공협정」(1989.9) 등 다양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특히 캐나다 원자료가 도입되어 1983년 월성 1호기가 준공되었다. 또한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 41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캐나다 양국간 교역액이 1986년 19억 5,700만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무역흑자도 1965년 9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6년 5억 3,84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국간 교역액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1986년의 경우 3.6%와 2.2%를 각각 차지하였다.

⁴⁷ <<http://www.korea.gc.ca/political/historical.roots.k.html>>.

<표 II-5>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65	1969	1973	1977	1981	1983	1985	1986
수출액	2.5 (1.4)	15.1 (2.4)	124.9 (3.8)	298.8 (3.0)	482.2 (2.3)	628.0 (2.6)	1,228.7 (4.1)	1,247.7 (3.6)
수입액	1.6 (0.3)	22.3 (1.2)	82.5 (1.9)	149.6 (1.4)	530.7 (2.0)	444.4 (1.7)	630.2 (2.0)	709.3 (2.2)
무역수지	0.9	-7.2	42.4	149.2	-48.5	183.6	598.5	538.4

주: 괄호안 숫자는 한국의 총 수출입액 중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이영선,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 한국의 시각,” 『캐나다연구』, 제1집 (1989), pp. 136-137.

냉전종식 이후 한·캐나다 양국은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또한 같은 아·태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의·협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차원에서도 서로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와 관련, 캐나다는 정책목표와 방향에 있어 사전과 사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은 ①아·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 지속, ②대외교역관계 다변화, ③북한문제에서 공동보조 등의 차원에서 캐나다정책을 수행하고 있다.⁴⁸

한편 캐나다는 다음과 같은 한반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아·태권 진출 전략상 협력파트너로서의 한국: 캐나다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 80%의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을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평화통일정책 및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입장 적극지지: 최근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⁴⁸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c_generall.htm>.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양국간 상호 증대하는 제반 관계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는 남한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여 냉전시대 대치국면의 마지막 남은 지역인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셋째, 경제통상관계 강화에 우선순위 부여: 캐나다는 한국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및 1994년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출범 이후 대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하면서 농산물, 정보통신, 원자력, 환경 분야에서의 진출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산업화 능력을 접목하는 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넷째, 비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에도 기여: 캐나다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문제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0년 7월 클라크(Clark) 외무장관이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를 제안한 바 있고, 캐나다는 한국측 구상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에 대한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PKO와 방산 등 군사분야와 TV, 영화산업, 청소년 교류 등 문화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희망하고 있다.⁴⁹ 냉전종식 이후 한·캐나다관계를 정치와 경제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치면

한·캐나다 양국은 주요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1991년 7월 노태우 대통령과 1995년 10월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 공식방문,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방문 등이 있었다. 캐나다측에서는 1994년 4월 Ramon Hnatyshyn 총독의 국민방문, 1997년 1월 Jean Chretien 수상의 공식방문, 2003년 10월

⁴⁹ 외교통상부, 『캐나다 개황』 (1999.6), pp. 122-123; <<http://www.korea.gc.ca/political/regional.k.html>>.

Dan Hays 상원의장의 방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간에는 1995년 1월 「범죄인인도조약」, 2월 「형사사법공조조약」, 5월 「정보통신협력 양해각서」, 9월 「환경협력 양해각서」, 1996년 5월 「한·캐나다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1999년 8월 「군사비밀 정보교환 및 보호협정」 등의 조약과 각서들이 체결되었다. 1983년 6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은 한·미·일·캐나다·호주간 「5자 정책기획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1989년 캐나다측 제의로 미·일·캐나다·호주 간에 구성된 것으로 제3차 앵커리지 회의 시 한국의 추가참석이 합의되어 한국은 1992년 10월 시드니 제4차 회의부터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⁵⁰

1992년 12월 김영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었을 때 캐나다 정부는 30년 만에 한국 최초의 민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한·캐나다 상호관계는 1993년 11월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수상과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하에 체결된 ‘특별 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⁵¹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창설된 직후 이 기구에 가입하였고 1998년 12월까지 375만 캐나다달러(약 268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1995년 10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캐나다 수상은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는 ‘한·캐나다 포럼’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Chretien 캐나다 수상은 1997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519명의 대규모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사절

⁵⁰ 위의 책, p. 128.

⁵¹ ‘한·캐나다 특별 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경제면 참조.

단에는 9명의 주지사, 유콘지역 지도자들, 주요 시장들, 외무부 장관, 아·태 국무장관 및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산업계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한국과의 '특별 동반자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캐나다 양국은 한국의 IMF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캐나다 국민방문, APEC과 OECD 등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 확고한 정치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 경제면

한·캐나다 양국은 1991년 이후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를 유지하여 오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1993년 11월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특별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한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견국가인 양국이 양자문제(시장접근, 산업협력, 개발원조, 기술개발 및 공동상업화, 투자, 제3국 공동진출) 및 다자문제(WTO, OECD, APEC, NAFTA 관련)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1994년 4월 Roy MacLaren 통상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간 '특별 동반자관계 실무그룹'(Special Partnership Working Group)이 발족되었는데, 양측 외무부 차관보를 공동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과장을 반원으로 구성되어 1994년 5월부터 서울과 오타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⁵² 이를 통해 양국 간에 1995년 10월 「산업기술협력 약정」, 1999년 7월 「통신장비 조달협정」등이 체결되었고, WTO, OECD, APEC 본부소재지의 양국 공관을 접촉창구로 지정하여 다자기구에서의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체제가 구축되었다.

⁵² 위의 책, pp. 123-125.

지난 몇 년 간에는 양국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부수상겸 환경부장관인 Sheila Copps가 1995년 9월 캐나다의 환경친화기술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방문단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하였다. 같은 해 10월 오타와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캐나다 수상은 정보·통신, 환경, 생명공학 등의 첨단기술 및 제3국 지원업무의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기업들의 상호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캐나다 산업기술협력 위원회」(Canada-Korea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mmittee)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00년까지 양국간 교역량이 100억 달러에 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선언을 채택하였다.⁵³ 1997년 캐나다 수상의 방한 시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캐나다 국제개발국」(CIDA) 간의 상호협력 도모, 농업분야 협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에너지·자원협력 분야에서는 캐나다 원자로의 도입으로 1983년 준공된 월성 1호기에 이어 1997년 월성 2호기, 1998년 월성 3호기, 1999년 월성 4호기가 각각 준공되었다.

냉전종식 이후 한·캐나다간의 교역액은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41억 달러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액이 IMF 금융위기로 1998년 35억 달러, 1999년 34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01년 39억 달러, 2002년 42억 달러, 2003년 45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1999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흑자를 보여 2003년에는 약 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⁵³ <<http://www.korea.gc.ca/political/bilateral.relation.k.html>>.

<표 II-6>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액	15.1	15.5	16.3	24.3	20.4	23.4	26.8
수입액	26.0	19.7	17.9	21.0	18.2	18.5	18.6
무역수지	-10.9	-4.2	-1.5	3.2	2.2	5.0	8.2

출처: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canada.htm>, p. 2.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품은 TV, VCR 등 전자제품, 차량 및 차량부품, 의류, 신발 및 섬유제품, 기계제품, 자동차, 철 및 철강 등이다. 반면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및 천연연료 자원, 펄프, 유기화학물, 시리얼, 알루미늄 제품, 철 및 철강, 비료, 에너지 장비, 기계, 통신 장비 및 우주항공 제품 등이다. 이중 석탄과 철·철강이 대한국 수출액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시장은 캐나다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 즉 농업제품,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송, 방산, 우주항공, 컴퓨터, 전자, 통신 및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캐나다는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시장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통신시장 단독만으로 그 가치가 40억 달러에 이르고 곡물과 기름원료, 육류, 생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는 농업제품 시장을 약 1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⁵⁴

투자면에서, 1980~2003년 6월 기간 중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197건, 18억 4,300만 달러로서,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총액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1962~2003년 기간 중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298건, 29억 9000만 달러이고, 이는 주요국의 대한국 총 투자액의 3.2%에 불과하다.⁵⁵ 캐나다는 G8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사업비용

⁵⁴ <http://www.korea.gc.ca/political/ck_trade.k.html>.

⁵⁵ 통상교섭본부, 『우리나라 경제통상 통계』 (2003.11).

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고 통신, 생명공학,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이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면 양국 간에 가시적인 경제적 및 기술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2) 캐나다·북한관계

(가) 캐나다·북한 외교관계 수립과정

캐나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이나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의 비정부기구(NGO)들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 국내 13개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1983년 결성된 인도주의 단체인 「캐나다식량은행」(CFB)은 정부 및 민간 모금액을 취합하여 1996~2000년 기간 중 총 4,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고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한 바 있다.⁵⁷ 이외에 몇몇 캐나다 대학의 학자들이 1990년 이후 북한 파트너들과 접촉을 하였다. 이러한 비정부 기관들 간의 연결들이 캐나다와 북한 양국간 접근을 촉진시켰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1998년부터 엑스워드(Lloyd Axworthy) 캐나다 외무장관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베이징 주재 양국 대사관들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캐나다 사절단이 2차례 방북하고 북한의 공식 및 비공식 대표단이 3차례 캐나다를 방문하여 상호

⁵⁶ <http://www.korea.gc.ca/political/ck_trade.k.html>.

⁵⁷ “주류사회 민관, 북한돕기 앞장”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1.1.25).

이해 구축 및 지역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방콕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7월 21일 회동한 크레티엔(Chretien) 캐나다 총리를 포함하는 G-8 정상들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김대중·김정일 양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긴장을 축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도록 격려하며 한국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에 의해 보여진 건설적인 태도를 환영하는 『한반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⁵⁸

이러한 결과 7월 26일 방콕 ASEAN 지역포럼(ARF)에서 캐나다와 북한 간에 역사적인 최초의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엑스워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평화, 안보, 교역 및 투자, 경제발전과 문화교육 관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한 주제들을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식인정하고, 즉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양국 외무장관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엑스워드 외무장관은 ARF에 대한 북한의 첫 참석을 환영하고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외교관계 수립국가의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환영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⁵⁹고 밝혔다. 북한 외무상은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캐나다와 이 지역 나라들과의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⁶⁰

⁵⁸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announces recogni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llowing bilateral talks in Bangkok” <<http://webapps.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July 26, 2000, No. 184)>.

⁵⁹ “캐나다, 북한 승인,” 『한겨레』, 2000년 7월 27일.

⁶⁰ “조선과 캐나다 외무장 사이의 상봉결과에 관한 보도문,” 『조선중앙통신』, 2000

이후 윌슨(Lois Wilson) 캐나다 여성 상원의원과 폴 에번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 에러 가트너 주북한 NGO 대표 등 그동안 북한을 몇 차례 방문했던 인사들이 9월 16~23일 평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 및 학계 인사들과 만나 비정부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확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⁶¹ 또한 양국은 9월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회담을 진행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결과 맨리(John Manley) 외무부 장관은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하여 2001년 2월 1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서한을 교환하고 마침내 2월 6일 캐나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하였다. 맨리 외무부 장관은 “외교관계 수립은 캐나다와 북한이 의사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상호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공식 채널을 마련할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캐나다는 평양과의 긴밀한 관계가 지역안보와 비확산 및 인도적 도전들에 기여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양국관계가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들에 기초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및 국제적 관행들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⁶² 이로써 캐나다는 북한의 139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특별보도를 통해 “국가주권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염원으로 캐나다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⁶³고 발표하

년 7월 27일.

⁶¹ “캐나다 상원의원 일행 평양 도착,” 『한겨레』, 2000년 9월 17일; 『조선중앙방송』, 2000년 9월 17일.

⁶²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announce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ebapps.dfaic-gc.ca/minpub/Publication> (February 6, 2001, No. 17).

⁶³ 『조선중앙방송』, 2001년 2월 6일.

었다. 캐나다·북한 간 수교와 관련, 한국의 이남수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환영성명을 내고 “정부는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 남북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리 엘렌 컨트리먼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⁶⁴

상기와 같은 캐나다·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는 캐나다 정부의 대북정책,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정책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캐나다를 국민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7월 6일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 캐나다와 북한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둘째, 캐나다의 대북정책 목표는 대북관계 개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냄으로써 그에 따른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자신에 대한 비위협적인 태도와 미국 집권층에 대한 접근로로의 활용, 인도적 지원의 역사 등 때문에 캐나다를 그동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왔다.⁶⁵ 특히 지속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은 캐나다로부터 식량과 의류품 등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보하고 투자

⁶⁴ “북한-캐나다 수교,” 『한겨레』, 2001년 2월 7일.

⁶⁵ “Canada urges DPRK to relinquish nuclear Plans,” CanKor - 24 January 2003 - Special Edition.

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1년 12월 캐나다에 투자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수교이후 캐나다와 북한간에는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다. 먼저 하워드 바로치 주중 캐나다 대사가 초대 북한 대사로 2001년 2월 27일 방북하여 이튿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향후 북한에서 경제개발 및 무역 관련 목표를 추진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빈국에 대한 지원 등 ‘캐나다적 가치(Canadian Values)’를 증진시키는 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⁶⁶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상주대사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북한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8월에는 공석용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하였고, 12월에는 바로치의 후임인 조지프 캐런 주중 캐나다 대사겸 주북한 대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의 노동당·외무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인권, 군축, 테러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이들 문제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 캐런 대사는 북한의 무역성 관리로부터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포함한 경제관계 확대를 제의받았다.⁶⁷

북한은 2002년 6월 박길연 주유엔 대사를 주캐나다 겸임대사로 발령하는 한편, 8월 오타와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싶다는 의향을 캐나다 정부에 전해 왔다. 이에 따라서 북한 당국의 선발팀이 약 3개월 동안 오타와에서 대사관 개설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최초로 각료

⁶⁶ “하워드 바로치 초대 주북한 대사 신임장 제정”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1.3.1).

⁶⁷ “북, 캐나다에 투자협정 제의,” 『한겨레』, 2001년 12월 16일.

로서 킬고어(David Kilgour) 아·태담당 국무장관을 10월 23일부터 북한에 파견하여 캐나다 원조기관인 'GAIN(Global Aid Network) 캐나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북한측과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GAIN 캐나다'는 75명의 북한 학생들에게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었다.⁶⁸ 이로써 캐나다와 북한 관계는 수교이후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후 국제사회는 우려와 함께 충격과 경악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캐나다 정부도 10월 17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킬고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였다.⁶⁹

(나) 북핵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과 정책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시인 직후 킬고어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게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IAEA의 만장일치 결의문을 11월 29일 완전 지지하였다. 북한이 IAEA 결의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동결된 핵시설들의 봉인과 안전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제거하자, 그레엄 외무장관은 12월 23일 이러한 사태발전은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 한반도 안정에 대한 매우

⁶⁸ "Canadian Cabinet Minister to Visit North Korea," *Hankook Ilbo*, October 11,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⁶⁹ "N.K's Nuke Plan Draws Consternation Abroad," *Chosun Ilbo*, October 19,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심각한 위협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프로그램 재동결을 촉구하였다. 그는 북한이 NPT, IAEA에 핵시설 감시를 허용하는 북한과 IAEA간의 포괄적인 안전협정, 북한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부과하는 1994년의 북·미간 기본합의문,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에게 즉각적으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투명하며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다른 핵무기 개발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는 캐나다가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하여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⁷⁰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의사 표명과 관련, 그레엄(Bill Graham) 캐나다 외무장관은 같은 날 이를 개탄하고 평양이 결정을 번복하여 IAEA와의 안전협정을 포함한 모든 핵 비확산 의무에 충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이 조치가 수행된다면 지역긴장을 고조시키고 평양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⁷¹ 한 고위 캐나다 외교관이 1월 23일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45분간 회담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하는 등 캐나다 정부는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 의무에 복귀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수교 및 북한 고위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⁷⁰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Graham calls on DPRK to resume freeze of its nuclear program” <<http://webappa.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검색일: 2002.12.23).

⁷¹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deplores DPRK withdrawal from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http://webappa.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검색일: 2003.1.10).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대표자가 캐나다 요크(York) 대학교 인간안보연구소 연구원이며 「캐나다·북한 협회」(Canada-DPRKorea Association) 회장인 웨인가트너(Erich Weingartner)이다. 그는 “우리들은 너무 소심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지도를 따르고 있고 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오타와에 있다. 모험을 하거나 관련되는 것에 자원을 투입하려 하지 않는다. 캐나다가 더욱 적극적으로 되려 한다면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들은 북한에서 훌륭한 명성을 갖고 있고 신뢰받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인적 접촉들이 구축되어 왔다. 북한은 우리를 알고 있고 감사한다. 우리는 최고위 수준에서 관계를 갖고 있다”⁷²고 주장한다. 그는 북·미 관료들 간의 협상을 주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기해결을 위해 캐나다가 시도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조치들을 열거하기도 하였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웨인가트너의 주장에 회의적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교의 아시아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에반스(Paul Evans)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북한과 우리의 외교적 커넥션의 본질은 매우 얇다. 활동의 차원과 대화의 양은 캐나다의 북한 인정 이후에도 거의 증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잡(Brian Job) 국제관계센터 소장도 “캐나다는 평양의 대량과괴무기 문제에서 ‘어떠한 지렛대’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명백히 하였다고 말하고 캐나다가 북한에 외교적 접촉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아직 있다고 밝혔다.⁷³

⁷² “Canada urges DPRK to relinquish nuclear plans,” CanKor - 24 January, 2003 - Special Edition.

현재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핵문제가 북·미간 직접 대화나 주변국들의 참여하에 외교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캐나다는 이 협상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제한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레엄 캐나다 외무부장은 안정을 복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외교협상을 통한 것인데 이는 북·미간 직접 대화 및 중·러·일과 같은 다른 중요한 국가들의 제3자 외교를 포함하며 캐나다는 외교협상의 촉진자로서 북핵문제에 제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1월 캐나다 외교관 스트롱(Maurice Strong)이 북·미간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엔의 특별 사절로 북한에 파견되었다. 그레엄 장관은 “북한이 미국 및 국제공동체에 대해 일종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 종사하는 한 북한과의 관계를 증가시키거나 강화하지 않을 것”⁷⁴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 위기는 베이징에서 북·미·중간3자 회담(2003.4.23~25)과 3차에 걸친 북·미·중·한·일·러간 6자회담(8.27~29; 2004.2.25~28; 6.23~26)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와 남한의 핵물질실험 사건에 대한 북한의 완전해명 요구⁷⁵ 등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4년 7월 취임한 페티그류(Pierre Pettigrew) 캐나다 외무장관은 1994년 이래 10년 만에 반기문 외무장관이 한국 외무장관으로 캐나다를 9월 26~28일 방문하는 것을 맞이하여 “반 장관의 방문은 핵비확산과 무역자유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관해 긴밀한 우방국과 견해를 교환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⁷³ 위의 글.

⁷⁴ <http://www.mapleleafweb.com/education/spotlight/issue_26/c_perspective.html> (검색일: 2003.2.4), Policy to North Korea.

⁷⁵ 북한은 2004년 9월 16일 “남조선 비밀 핵실험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에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없다”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6국이 9월 중 열기로 합의한 4차 6자회담은 무산되었다. 『중앙일보』, 2004년 9월 17일.

캐나다는 북한을 6자회담에 관여시키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⁷⁶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의 상기와 같은 입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에는 북한측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인사들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세계문제 연구소내 인간안보센터의 맥(Andrew Mack) 연구원은 첫째, 1998년 미공군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모의 연습하는 등 수년간 한국군과 미군은 북측에 있는 공동의 공산주의 적에 대한 전쟁을 위해 연습해 왔기 때문에 평양은 미국에 의해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 둘째, 워싱턴은 또한 북한에 핵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규정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소련붕괴 이후 모스크바가 북한에 동맹국이 아니고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은 북한의 ‘적’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로서 역할을 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유리한 한국군 및 미군과의 대결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넷째, ‘핵카드’는 또한 상당한 정치적 지렛대의 원천이므로 핵 난국은 기술적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요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⁷⁷

또한 캐나다 『토론토 스타스』(Toronto Stars)지의 컬럼니스트인 워컴(Thomas Walkom)은 첫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대해 북·미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둘째, 북한은 극심한 과대망상의 국가로 항상 묘사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고 김정일의 스탈린식 정권은 이라

⁷⁶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South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Visits Canada” <<http://webapps.dfaic-maeci.gc.ca/minpub/Publication>> (검색일: 2004.9.27).

⁷⁷ Andrew Mack, “DPRK not to blame for nuclear treaty failure,” CanKor - 24 January, 2003 - Special Edition.

크 이후 부시 미 행정부 공격의 다음 목표가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옳을지 모른다는 점, 셋째, 북한의 관점으로부터 세계를 생각해 볼 때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침략적인 힘’의 독트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무장을 하려는 것이며 분별력(sense)있는 국가라면 어떠한 국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⁷⁸

(다) 캐나다 · 북한 경제관계

캐나다 ·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교역면에서 볼 때, 1997년 857만 캐나다달러이었던 캐나다의 대북한 수출이 2003년 3,001만 캐나다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캐나다의 2003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8%, 84위이다. 또한 1997년 13만 8,000 캐나다달러이었던 캐나다의 대북한 수입은 2003년 9만 1,000 캐나다달러로 감소되었고 캐나다의 2003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 191위이다(<표 II-7> 참조).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목은 목재 및 농수산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7> 캐나다의 대북한 교역 추이

(단위: 1,000 캐나다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년 총수출입중 비중(%)
수출 (84위)	8,574	5,375	3,007	22,869	4,753	21,477	30,010	0.008
수입 (191위)	138	692	233	1,209	163	66	91	0.000
합계	8,712	6,067	3,240	24,078	4,916	21,543	30,101	

출처: International Trade Canada, “Merchandise Trade by Country” <http://www.dfait-macci.gc.ca/eet/cimt/2003/pfact_annual_trade_2003-en.asp>.

⁷⁸ “Who can blame DPRK?” by Thomas Walkom, *Toronto Stars*, January 14, 2003.

캐나다와 북한 양국 간의 자세한 투자현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북한이 캐나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북한대사를 겸하고 있던 캐런 주중 캐나다 대사는 2001년 12월 8~10일 방북 시 북한의 무역성 관리로부터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포함한 경제관계 확대를 제의받았다.⁷⁹ 현재 북한내 해상 3곳과 육상 1곳 등 4개 지역의 석유탐사에 5개 외국기업이 참여중인데 캐나다 업체는 1998년부터 서해의 평양 북쪽 안주분지에서 작업 중이다. 평양 남쪽 서한만 분지에서는 일본 및 독일 업체가, 동해의 원산 부근 동한만 분지에서는 호주 업체가, 그리고 육지인 함북 나진지역 해룡분지에서는 싱가포르 업체가 각각 석유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⁰

캐나다 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 위하여 설치된 KEDO에 1995~2002년 기간 중 약 460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또한 1997~2002년 기간 중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약 4,3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고, 이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지원 2,200만 캐나다달러와 캐나다 식량곡물은행(CFGB) 기여분 2,100만 캐나다달러로 구성되어 있다.⁸¹

나.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

(1) 『요크 국제안보연구센터』(York Centr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YCISS)

YCISS(<http://www.yorku.ca/yciss>)는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요크

⁷⁹ “북, 캐나다에 투자협정 제의,” 『한겨레』, 2001년 12월 16일.

⁸⁰ “5 Foreign Firms Looking for Oil in North,” *Kukmin Daily*, September 25,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⁸¹ 외교통상부, 『캐나다 개황』 (2003.7), p. 119.

대학교의 연구소로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되었다. 현재 센터소장은 디위트 (David B. Dewitt) 요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 4가지는 분쟁과 안보 문제의 비전통적 분석, 전략연구, 안보의 정치경제,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및 동아시아와 중동 안보관계를 포함하는 지역분쟁이다. YCISS의 주요 기능은 센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또는 외부기관이나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문제 관련 회의 및 워크숍을 캐나다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것, 캐나다 국내외의 외교 및 국방정책 관련 기관에서 YCISS 연구원들이 강연하는 것, 각종 연구와 회의의 결과물을 발간하는 것 등이다. YCISS 연구원들은 한국에 있는 외교 및 국방 관련 기관들에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CISS는 캐나다 내에 2개의 아·태 안보관련 비정부기구, 즉 『북태평양 협력안보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NPCSD)와 『캐나다 아·태 안보컨소시엄』(Canadian Consortium on Asia Pacific Security: CANCEPS)의 설립 및 1개의 국제적 비정부기구, 즉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의 설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NPCSD는 냉전종식 직후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YCISS가 캐나다와의 관계가 비교적 약한 아·태지역의 군축, 군비통제, 국제안보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1990년 발족시킨 다자안보대화이다.

이는 약 2년 6개월간 지속되다가 CANCEPS로 대체되었다. CANCEPS는 캐나다가 관련되는 아·태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간행물 발간, 대중적 인지의 증진에 목표를 둔 비영리 협회로서 캐나다 외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CANCEPS Bulletin을 연 4회, 아·태 안보문제에 대한 Working Papers인 CANCEPS Papers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CSCAP은 1992년 11월 서울에서 아·태 10국 대표들이 역내 신뢰구축과 안보 협의 및 협력을 위한 기구의 창설에 합의하여 1993년 6월 칼라룸프르에서 정식 발족한 다자간 국제적 비정부기구이다.

YCISS 구성원들은 센터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상이한 직급을 갖고 있다. 전임연구원(Faculty Associates)은 full-time으로 근무하는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들로서 7명이다. 제휴연구원(Affiliated Faculty)은 요크 대학교내 다른 곳에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센터 업무에 관계하고 있는 교수들로서 11명이다. 연구원(Researchers)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들로서 17명이다. 객원연구원(Research Associates)은 박사이후 과정자 및 타 기관의 방문연구원과 같이 센터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7명이다. 외부연구원(External Associates)은 학술단체, 정부,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센터에 관계하는 개인들로서 35명이다. 행정실(Administration)에는 센터 소장 외 4명이 소속되어 있고, 센터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는 17명이 있다.

YCISS의 주요 간행물들은 단행본과 특별보고서 및 Working Papers이다. 특별보고서로는 과거에 NPCSD Series, 다자기구와 세계안보 시리즈(a series on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Global Security: MIGS) 등이 출간된 바 있고 현재에는 CANCAPS Papers, CANCAPS Bulletin이 연 4회 발간된다. Working Papers로는 아·태 안보문제를 다루는 CANCAPS Papers가 발간되며 이외에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YCISS 내 동아시아와 한반도문제 관련 주요 연구원 및 발간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Unconventional Secur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A Preliminary Assessment

- Robert E. Bedeski, CANCAPS Paper No. 8, August 1995.
- Perspectives on Asian Pea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Professor David B. Dewitt, CANCAPS Paper No. 28, March 2002.

 - Constructing Cooperation: Towar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ichael J. Finnegan, CANCAPS Paper No. 18, July 1998.

 - Great Expectations: Canada and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Chrétien Government
J.D. Kenneth Boutin, CANCAPS Paper No. 17, October 1997.

 - Identifying Roles and Setting Priorities for Canada Within the Emerging Asia Pacific Regional Order: A 'Bottom-Up' Approach to Policy Design and Evaluation
Brian J. Bow, CANCAPS Paper No. 16, October 1997.

 - Why Multilateralism Has Failed in North-East Asian Security Relations: The Role of Realpolitik
Sergei Goncharov, NPCSD Working Paper No. 19, October 1992.

(2) 요크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캐나다 토론토 소재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의 인문학부 동아시아학과(East Asian Studies: http://www.arts.yorku.ca/advising/degrees/abstracts/eastasien_studies.html)에서는 동아시아 문명과 민족, 지리,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한·중·일 언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재니스 김(Janice Kim) 조교수가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3)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와 「한국연구센터」

캐나다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아시아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 <http://www.asia.ubc.ca>)는 1961년 설립되어 캐나다에서 아시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언어 중심의 연구를 행하고 있다. 한국어문학은 킹(Ross King) 부교수와 풀턴(Bruce Fulton) 부교수, 한국 역사와 문화는 베이커(Donald Baker) 부교수 등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킹(43세) 교수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에서 러시아 고려인들의 방언연구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역사와 방언학, 한국어 교육, 러시아 고려인의 언어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는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0년 한글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또한 2000년부터 미국 미네소타에서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⁸²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Asian Research)의 한 부분으로 있는 「한국연구센터」(Center for Korean Research)는 밴쿠버 한인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포항제철, 삼

⁸² “Canadian Professor in the Korean Language Studies of UBC Visited Korea,” *JoongAng Ilbo*, November 7,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미그룹 등의 재정지원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소장은 베이커 부교수이고 한국연구 책임자는 정치학과와 박경애 박사⁸³이다. 「한국연구센터」는 학제간 접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연구를 수행, 조정,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 및 캐나다-한국문제에 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관심 유도,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프로젝트의 발전, 학제간 연구세미나·워크숍·프로젝트·강연 및 회의 조직, 학자교류 촉진,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로의 진출기회 확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재캐나다 한인사회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포럼으로서 기여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구성원은 센터소장을 포함하여 11명이고 대부분이 이 대학교 소속 아시아학과, 인류사회학과, 역사학과, 정치학과 교수들이다.

(4) 맥길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 동아시아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http://www.arts.mcgill.ca/programs/eas>)에서는 한·중·일의 문화, 언어, 문학, 시사, 사회경제 등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김명희(Myunghee Kim) 석사가 한국어, 토마스(James Philip Thomas) 박사⁸⁴가 한국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을 강의하고 있다.

(5) 캘거리 대학교 동아시아학 과정

캐나다 캘거리 소재 캘거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 커뮤니케

⁸³ 박경애 박사의 한국관련 주요 업적에 대해서는 <<http://www.iar.ubc.ca/introduction/kpark.htm>> 참조.

⁸⁴ 토마스 박사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http://www.arts.mcgill.ca/programs/eas/korea/thomas.html>> 참조.

이선 및 문화 학부(Faculty of Communication and Culture)는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 <http://www.ucalgary.ca/pubs/calendar/current/What/Courses/EAST.htm>)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언어·환경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6) 토론토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캐나다 토론토 소재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동아시아학과(East Asian Studies: <http://www.chass.utoronto.ca/eas>)는 1968년까지 대학교박물관이었던 왕립 온타리오박물관의 극동부서로부터 발전되었다. 1976년 학과장이 된 브라운리(J. S. Brownlee) 교수가 한국학 정규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동아시아학과에서는 한·중·일의 과거 및 현재 역사와 문화, 언어, 문학, 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시미드(Andre Schmid) 부교수가 학과장이고 12명의 명예교수, 10명의 부교수, 10명의 교수, 5명의 조교수, 6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한국과 관련해서는 시미드 부교수⁸⁵가 근대 한국 및 동아시아 역사, 송제숙 조교수가 현대 한국사, 김(Y. G. Kim) 조교수가 한국어문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7) 워터루 대학교 동아시아연구 프로그램

캐나다 워터루 소재 워터루 대학교(University of Waterloo)는 학제간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연구(East Asian Studies: <http://www.adm>.

⁸⁵ 시미드 박사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http://www.chass.utoronto.ca/faculty/Faculty_Schmid-A.html> 참조.

uwaterloo.ca/ infoucal/COURSE/course-EASIA.htm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중·일의 문화, 언어, 종교 및 캐나다 거주 3국 교포역사 등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책임자 크로스리(J. Crossley) 박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교수, 1명의 조교수, 4명의 강사가 있다. 한국어는 김(Y. Kim)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다. 한인단체

한민족 최초로 캐나다를 방문한 사람들은 1902년 고종 때 의양군 이재각과 수행원 3명이었다. 이들은 영국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 참석차 배편으로 인천-일본-캐나다 서부 밴쿠버에 도착한 후 기차로 대륙횡단을 하여 동부 퀘벡에서 다시 배편으로 영국에 도착한 것이다. 캐나다 최초의 한인 거주지는 1905년 캐나다로 영문학을 수학하러 유학을 간 김 일환씨였고 이후 일부 유학자들이 신학, 의학 등을 공부하러 갔다. 1950년대에는 캐나다 선교부와 선교사들의 인맥으로 다수의 유학생들이 캐나다로 갔다. 1963년 한국과 캐나다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1966년 캐나다 정부가 개방이민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한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덴마크, 독일, 브라질 등 제3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하였다. 1965년 토론토 지구 한인회가 이미 창립되었고, 이어 토론토 한인 상인협회,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몬트리올 한인 실업인협회 등이 설립되었다.⁸⁶

캐나다 연방통계청 인구조사 센서스가 2003년 1월 21일 발표한 ‘2001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거주 한인은 2002년 5월 현재 총 10만

⁸⁶ “캐나다 한인이민사 100년” <http://research.korean.net/global/docs/docs/r_board_detail.html> (검색일: 2003.3.24).

1,715명으로 전체 인구의 0.33%를 차지하고 있다.⁸⁷ 반면 한국 정부는 2004년 4월 현재 일시 체류자를 포함한 캐나다 동포를 약 17~1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조성준(67세)씨는 정치인으로서 토론토시 4선 의원이다.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산하에는 24개 지역한인회(British Columbia 4개, Alberta 3개, Saskatchewan 3개, Manitoba 1개, Ontario 9개, Quebec 1개, New Brunswick 1개, Nova Scotia 1개, New Foundland 1개)가 있고 지역한인회와 총연합회 및 공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봉사상 시상, 캐나다 정부 지도자들과 한인사회의 관계 증진, 탈북난민 지원, 한국전 참전 캐나다부대와 연례회의 개최, 세계한민족 대표자회의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⁸⁸ 이외에 주요한 한인동포단체로는 1977년 창립된 캐나다 한국문인협회와 토론토 한인 YMCA, 1985년 창립된 캐나다 한인여성회 등이 있다. 특히 1997년 토론토에 창설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캐나다’는 3년 동안 20만 달러를 넘는 모금을 하였고, 모금액은 캐나다 식량곡물은행(Canadian Foodgrains Bank)을 통해 캐나다 정부로부터 4배의 매칭펀드를 더해서 북한에 전달되었다.⁸⁹ 캐나다 한인학교협의회는 캐나다의 한국어학교 교사와 교육관계자가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거주 동포 중에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와 북한간의 민간차원 교류단체인 「캐나다·북한 협회」 관계자 및 국제태권도연맹(ITF) 관련 체육인

⁸⁷ “캐나다 한인인구” <http://research.korean.net/global/docs/docs/r_board_detail.html> (검색일: 2003.1.23).

⁸⁸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http://www.koreancan.org>>.

⁸⁹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kotown.com>>.

들이다. 『캐나다·북한 협회』는 2002년 북한이 7월 1일을 ‘캐나다 데이’로 지정함에 따라서 웨인가트너 총무, 정재열 부회장 등 5명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또한 ‘북한에 과학·기술 서적 보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수백 권의 전문서적을 김책 공업대학 등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인해 북한에 방문단을 파견하지 않았다.⁹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태권도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양분되어 있다. 2002년 6월 최홍희 ITF 총재가 평양에서 사망함에 따라서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승계하였고, 그는 2003년 10월 캐나다를 방문하였다. 장웅 총재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고 최홍희 추모컵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고 캐나다내 ITF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1명의 태권도관장에게 캐나다 총책을 맡겼다.⁹¹

라. 대캐나다 통일역량 평가

캐나다는 인구가 약 3,100만 명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적으나 국토가 한반도의 약 45배, 1인당 GDP가 26,559 달러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G8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활발히 개최되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들이 공식 또는 국민방문을 하였고, 캐나다 측에서도 여러 명의 총독과 수상들이 방한하였다. 또한 양국간에는 1983년 이후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1992

⁹⁰ “캐·북협회 ‘북한 방문단 파견 않기로’”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3.6.12).

⁹¹ “북한 장웅 IOC위원 토론토 방문”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3.10.6).

년 이래로 한·미·일·캐나다·호주간 『5자 정책기획협의회』의 일원이다. 이러한 한국·캐나다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KEDO에 참여하고 약 46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1년 2월 6일 캐나다가 북한과 수교한 것도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김대중 대통령과 캐나다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또한 캐나다가 북핵문제를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그러한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경제면에서도 1993년 합의된 ‘특별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한국은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은 정보, 통신,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캐나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한국·캐나다 양국간 교역액은 45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투자면에서도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1980~2003년 6월까지 18억 4,300만 달러,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1962~2003년 29억 9,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이에 상응하는 교역과 투자를 서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캐나다내 동아시아 및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교 및 전문가들이 일부 있다. 주요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 관련 연구소는 요크 대학교의 『요크 국제안보연구센터』이고, 한반도와 관련 활발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와 『한국연구센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일부 기관과 학자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캐나다 내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더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거주 다수의 한인동포들이 주요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강의하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성준씨는 정치인으로 토론토시 4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연구센터의 박경애 박사는 캐나다·북한간 수교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대캐나다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실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1963. 1. 14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상
경제관계	- 교역(2003년): 45억 달러, 약 8억 달러 교역흑자 - 투자: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1962~2003) 29억 9,000만 달러,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1980~2003) 18억 4,300만 달러	중
고위인사교류	양국 정상회담·정책협의회 정례적 개최	상
학술교류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간 교류	중
한인동포 네트워크	민주평통 캐나다자문위원 148명,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상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와 평가:
지역별



1. 중동지역

가. 중동지역 개관

중동지역은 크게 다섯 개 그룹으로 구별되는 국가군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아라비아 반도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을 포함한다. 둘째, 이른바 핵심 중동지역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들 수 있다. 셋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가 중동지역에 속한다. 넷째, 비아랍국가들로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된다. 다섯째, 코모로, 지부티,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등 사하라 남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⁹² 이러한 중동지역 24개 국가 중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을 제외한 20개 국가가 스스로를 ‘아랍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기구인 아랍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아랍민족이 중동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랍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지역에는 4개 비아랍국 이외에도 쿠르드족, 베르베르족, 아르메니아인 등 여러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슬람 시아파, 기독교, 유대교 등이 소수파 종교로 신봉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다양한 민족적, 종교적 차이는 크고 작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자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권 경쟁은 중동지역의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국제적 분쟁으로 더욱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⁹² 김용찬, “중동의 민족현황과 민족문제,” 『민족연구』, 제10호 (2003.3.1), p. 11 참조.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중동지역은 대부분 영국, 프랑스,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 내지 준식민지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동국가들은 점차 근대국가를 수립하였다. 오스만 터키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한 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예멘이 독립하였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이란에서는 팔레비 왕조가 탄생하였다. 한편, 유대인들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왔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시오니즘 운동이 확대되어가자 팔레스타인지역을 둘러싼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민족분쟁이 시작되었다.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레바논과 시리아가 독립하였다. 1948년 5월에는 유엔의 결의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이 건국하였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이집트·시리아·이라크·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레바논 등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제1차 중동전에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패배하였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향에서 추방되어 주변 아랍 각 지역으로 유랑하는 난민이 되었고, 아랍권내에는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아랍민족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⁹³ 서구 제국주의에 반발하여 사회주의 성향을 표방한 이집트·시리아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56년 제2차, 1967년 제3차,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아랍민족주의 운동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4차례의 전쟁을 치르고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아랍민족주의 운동은

⁹³ 유정렬, 『중동: 정치와 그 현실』 (서울: 어문각, 1985), pp. 13-64 참조.

쇠퇴해졌다. 1977년 11월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평화협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78년 9월 카터 미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스라엘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동평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이집트는 실리위주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국내문제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고 중동정세는 일단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체결로 반미·반이스라엘의 이념적 유대가 약화된 아랍 국가들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친소 강경파, 친미 온건파, 중립파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슬람국가들의 내부 분열은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하여 팔레비 정권이 몰락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정권이 수립되면서 표면화되었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이란의 혁명에 따른 혼란을 이용하여 국경지역의 영유권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회교혁명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란의 주요 도시를 선제공격하였다. 이란과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의 전쟁을 계속하였지만 뚜렷한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 후반기에 들어 미·소간의 경쟁이 종식되며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됨에 따라 친소 아랍 국가들은 그들의 국내외정책을 수정하였다. 남예멘은 1989년 개방·개혁에 착수하여 헌법에서 사회주의 일당독재 규정을 폐지하고 복수정당제를 허용하였다. 사회주의를 포기한 남예멘은 1990년 5월 북예멘과 통일을 달성하였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역사적 영토주권을 내세워 쿠웨이트를 침공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1991년 1월 반격에 나서면서 걸프전이 발발하였다. 걸프전은 이라크의 패배로 한 달 만에 종결되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패배한 후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레바논·요

르단·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참여하는 중동평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적대관계는 1991년 평화교섭을 개시한 이래 완화되었다. 1993년 9월 이스라엘과 시리아·레바논·요르단·PLO는 유대국가의 생존권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서안(West Bank)·가자 지구에 5년간에 걸쳐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정부를 단계적으로 설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분쟁은 일단 종결되었다.

걸프전 이후 중동지역의 정치질서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태에서 ①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이중 봉쇄, ②평화와 영토의 교환(Land for Peace) 원칙에 입각한 아랍·이스라엘간 평화 협상, ③중동·북아프리카 경제회의, 걸프협력이사회(GCC) 등을 통한 지역협력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⁹⁴ 1999년 7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주선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라크 이스라엘과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이의 팔레스타인 분쟁의 최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결렬되었다. 그 후 중동지역 정세는 다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상호 대립 격화, 알제리·이집트·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증대, 이란·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장기화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였다.

현재 중동지역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사태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01년 10월 미국·영국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강화되자 일부 아랍 국가에서 빈 라덴의 입장에 동조하는 반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사회 불만 기층세력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⁹⁴ 외교통상부, 『1998년도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1999), p. 106 참조.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였다. 9·11 테러 사태로 인해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국가들의 정부는 반정부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카타르, 바레인 등 개방적인 왕정국가에서는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논란 와중에서 미국 및 영국은 2003년 3월 20일 대이라크 군사조치를 전격 개시, 이라크 전역을 장악하고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적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7월 13일 25인의 과도통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반미 저항세력의 공세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무장투쟁이 격화되어 폭탄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 몰락은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에게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을 하도록 자극을 주었으나, 이란의 핵개발 강행은 중동지역의 또 다른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주요국 정세

(1) 이집트

1914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나, 1923년 왕국으로서 형식적인 독립을 획득하였다. 1936년 영국군은 수웨즈 운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철수했다. 1948~49년 제1차 중동전쟁에서 패배하자 아랍 지식인들은 근대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 7월 나세르(Gamal Abdel Nasser)를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이 쿠데타에 성공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나세르는 국내적으로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에 접근하였다. 이집트의 군사혁

명정부는 1955년 소련과 무기구입 비밀협정을 맺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이 결성한 반등회의에 참가한 후 나세르 대통령은 이집트의 비동맹·중립주의를 제창하고, 아랍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하였다.

1956년 나세르는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선포하였다. 이에 영국·프랑스·이스라엘군이 연합하여 수에즈 운하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⁹⁵ 이집트는 시리아·요르단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고 소련으로부터 무기지원을 받아 저항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이집트는 소련과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도 패배하여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를 점령당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연속적인 패배로 인해 아랍권 내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1970년 9월 나세르가 사망하고 안왈 사다트(Anwar el-Sadat)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사다트 대통령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집트내의 소련 군사고문단을 추방하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후 이집트는 아랍 각국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였다. 1979년에는 이스라엘과 단독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가 아랍 국가들로부터 소외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반대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고, 결국 1981년 10월 이슬람 과격파 조직 지하드에 의해 피살되었다.

사다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무바라크(Mohamed Hosni Mubarak)

⁹⁵ 홍순남, “중동정세와 국제정치환경,” 홍순남 외 공저, 『중동의 정치 경제: 페르시아만 안보와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87), pp. 11-37 참조.

대통령은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슬람 과격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다트의 친미 노선을 계승하여 미국 주도의 중동 평화교섭에서 아랍·이스라엘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집트는 반이라크 아랍군을 주도하면서 다시 아랍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걸프전에서 연합군측을 지지한 이집트는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원조 및 외채탕감을 받는 등 외교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온 무바라크 대통령은 1999년 9월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4선 연임에 성공하여 2005년까지 재집권하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수에즈 운하 통행세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1932년 전통적인 사우드 왕가의 일족인 이븐 사우드(Ibn Saud)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건국 후 1938년 유전이 발견되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계 자본에 의해 본격적인 석유 생산이 이루어졌다. 석유 수출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대하자 1964년 즉위한 파이잘(Faisal) 국왕은 각료회의를 창설하고 국가기본법 제정하는 등 개혁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근대 국가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제군주제 국가로서 의회가 존재하지 않고 국왕자문회의가 형식적으로 의회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국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정당과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⁹⁶

보수 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예멘의 왕당파와 공화파 사이의 내전을 계기로 이집트와 군사적 대립을 겪었다. 그러나 1967년 이집트와 화해한 후 이집트가 주도하는 반이스라엘 전쟁을 지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원조에 불만을 품고, 친 이스라엘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외교정책을 선포하여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1975년 3월 파이잘 국왕이 피살되고 칼리드(Khalid) 국왕이 즉위하였다. 칼리드의 통치하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아랍권의 정치 및 국제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칼리드 국왕은 1979년 수니파 이슬람 교도들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받은 시아파 주민들의 반란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⁹⁷ 1982년 6월 칼리드 국왕이 서거하자 파아드(Fahd bin Abdul Aziz) 왕세자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파아드 왕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기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1988년 전쟁 종결을 중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란·이라크전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사우디아라비아는 1981년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걸프협력이사회(GCC)를 설립하고 경제·산업·군사 정책을 조율해 오고 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반이라크 국제연대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걸프전이 발발한

⁹⁶ 외교통상부, 『GCC국가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pp. 42-50 참조.

⁹⁷ 하시모토 고헤이(橋本光平) 저, 김은진·김소운 번역, 『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서울: 가람기획, 2002), pp. 238-243 참조.

후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였다. 1991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주도의 중동평화협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다자간 협상 등에 참여하였다. 걸프전 이후 각계의 민주화·현대화 요구가 증가하자 1992년 정부 조직을 일부 개혁하였다. 1995년부터 파아드 국왕이 뇌졸중으로 집무가 불가능해지자,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 왕세자가 대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정세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압둘라 왕세자는 파아드 국왕이 표방한 친서방, 친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랍·이슬람 우선주의, 보수 아랍민족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아랍 국가들의 지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2001년 9·11 뉴욕 무역센터 및 미 국방부 테러사건에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 다수 개입되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5월 국내적으로도 테러 사태를 겪게 되었다. 한편, 테러 사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증가하자 2003년 8월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하였다.

압둘라 왕세자는 테러척결을 주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왕실 일부 및 보수 세력들의 반발 등으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여 30%가 넘는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 및 보석상 등의 자국민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주의 반발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3) 이스라엘

유럽 각국에 흩어져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은 1917년 영국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 외상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조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선언에 자극을 받아 제1차 세계대전 후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대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국가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국의 통치가 종료되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독립 직후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이라크 등 아랍 5개국이 침공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격퇴하고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스라엘은 그 후 1956, 1967, 1973년 4차례에 걸쳐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으나 모두 승리하여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 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1978년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단계적으로 반환하였다. 이집트와 평화협정 체결로 남쪽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 이스라엘은 1982년 6월 레바논을 침공하여 레바논 남부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거점을 분쇄하였다.⁹⁸

이스라엘은 의회민주제를 유지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나 실권은 없다. 내각은 의회의 실제 대표인 수상이 구성한다. 이스라엘의 주요 정당으로는 민족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리쿠드(Likud)당과 사회 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당이 있다. 양대 정당 모두 역사상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쿠드

⁹⁸ 외교통상부, 『이스라엘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2), pp. 8-35 참조.

당과 노동당은 여타 중소정당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수립해 오고 있다. 1984년 총선 이후 리쿠드당과 노동당의 연립내각이 형성되었다. 1988년에는 리쿠드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 들어섰고, 1992년에는 노동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다. 리쿠드당과 노동당은 중동 평화협상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리쿠드당은 점령지 반환은 일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은 평화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부분적인 영토 반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걸프전 이후 팔레스타인측과 화해를 모색해 온 노동당의 라빈(Yitzhak Rabin) 수상은 1993년 9월 ‘PLO·이스라엘 상호 승인 및 팔레스타인 잠정자치 원칙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평화합의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1995년 8월 미국의 중재로 아라파트 PLO 의장과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정부 구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5년 11월 라빈 수상은 PLO와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극우파 유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자행됨으로써 평화협정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6년 리쿠드당 당수 네타냐후(Binyamin Netanyahu)가 수상에 당선되어 우파 중심의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팔레스타인측과의 평화협상이 중단되었다.

1999년에는 노동당의 바라크(Ehud Barak)가 수상으로 선출되어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바라크 수상은 2000년 5월 레바논 남북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을 철수하고, 7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주선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귀속 문제와 팔레스타인 지위문제 등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9월 극우 민족주의자인 샤론(Ariel Sharon) 당시 이스라엘 리쿠르당 총재의 이슬람 성지인 마운

트렘플 방문을 계기로 유혈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민중봉기로 유혈사태가 커지자 바라크 총리가 사임하고 2001년 2월 샤론 리쿠드당 총재가 새로운 수상이 되었다. 샤론이 총리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은 강경책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9·11 테러참사 이후 샤론 수상은 PLO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아라파트 의장을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2003년 1월 총선에서 승리한 리쿠드당은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에 반대하는 국민동맹과 국민종교단, 중도파 시누이당 등과 연합내각을 구성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반이스라엘 조직에 대한 무력 진압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에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2003년 5월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 등의 대표로 구성된 중동 4자 협상단은 이스라엘 정부에 팔레스타인과의 유혈충돌을 종식시키고,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권유하는 중동 평화협상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이래 팔레스타인의 테러 재개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지도자 표적 살해 등 대립이 심화되어 중동 평화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까지는 첨단 농업에 의존한 경제발전이 주종을 이루었다.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분야의 발전은 미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생명공학과 전자기기 등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이스라엘 경제는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인근 아랍국가와의 오랜 분쟁 상태 및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과다 지출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01년 이후 경제성장이 침체되어 인플레이와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으로 인하여 경제가 더욱 위축되었으나 점차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4) 이라크

이라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 1932년 이라크 왕국으로서 독립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군소 정당들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지극히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불안을 겪게 되자 이집트의 나세르 군사혁명에 영향을 받은 카심(Abdul Karim Qasim) 장군이 1958년 7월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국 정권을 수립하였다. 카심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친소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군부 온건파 반발, 키드족 반란, 나세르주의자 반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1963년 11월 청년장교단과 바트(Baath)당의 혁명으로 카심 정권이 붕괴되고 아레프(Abd Al-Salam Aref) 대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66년 4월 아레프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동생 아레프(Abd Rahman Aref)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1968년 7월 바트당이 주도한 정변이 발생하여 아레프가 축출되고 바크르(Ahmed hassan Al-Bakr)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⁹⁹ 당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혁명지도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바트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후세인은 1972년 영국이 권익을 가진 이라크 석유를 국유화하고, 석유수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면서 바크르 대통령의 신임을 획득한 후세인은 1979년 7월 바크르 대통령이 사직하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혁명평의회 의장과 군 총사령관을 겸직하여 전권을 장악하였다.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혁

⁹⁹ 외교통상부, 『이라크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pp. 11-36 참조.

명이 발생하였다. 이라크 국민의 반수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 이슬람교도이므로, 이란 혁명에 동조하여 후세인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한편, 이란 혁명이 자국에 파급될 것을 우려한 걸프 연안국들은 이라크에게 이슬람 혁명을 봉쇄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후세인 대통령은 이란 혁명과정의 혼란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획득하고자 1980년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공했다. 그러나 전쟁은 장기화되어 1988년 8월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란과의 전쟁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그 후 국내정세의 불안과 경제난이 계속되자 후세인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 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한 달 만에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2월 28일 정전을 선언하였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정규군이 궤멸됨으로써 군사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후세인을 정점으로 한 통치체제는 붕괴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경제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해 크게 침체되었다.

유엔은 걸프전이 종결되자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을 창설하였다. 유엔무기사찰단은 1998년까지 250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여 톤의 화학무기 연료 등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 이라크 정부의 방해로 실질적인 사찰이 불가능하게 되자 전면 철수하였다. 그 후 이라크는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유엔의 무기사찰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9·11 테러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경고하며 무기사찰을 수용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미국과 영국은 2003년 3월 20일 이

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7월 13일 25인 위원으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그 후 이라크 주둔 미군은 12월 13일 후세인 대통령을 체포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저항세력에 의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는 2005년 3월 15일까지 제헌의회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헌법에 의한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인 이라크가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석유 생산을 정상화할 경우 중동지역의 주요 시장으로 다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며 향후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5) 이란

1921년 왕으로 등극한 레자 샤 팔레비(Reza Shah Pahlavi)는 군대와 관료제를 혁신하여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란 사회를 근대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레자 샤의 근대화 정책은 봉건적인 토지 소유제를 타파하지 못함으로써 봉건적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친독일 성향을 보여 온 레자 샤는 소련과 영국의 압력하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1941년 모하마드 팔레비(Mohammad Reza Pahlavi) 황태자가 제2대 국왕에 즉위하였다. 1951년 수상에 임명된 모사데크(Mohammed Mossadeq)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유전을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1953년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

여 모사데크를 축출하였다. 그 후 팔레비 왕은 주요 정당을 해산하고 비밀경찰을 통해 반대파를 탄압함으로써 절대왕권을 수립하였다. 1968년 팔레비 국왕은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부여 등 근대화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정책의 실패로 1978년 반정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79년 2월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를 중심으로 한 혁명이 성공하여 팔레비 국왕은 해외로 망명하였다.¹⁰⁰

1979년 4월 호메이니는 이슬람혁명위원회를 통하여 전권을 장악하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선포했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의 통치체제는 신정정치(theology)의 이원적 통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종교지도자인 최고지도자에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대통령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체제는 기간산업·무역업·금융업 등이 국영화되어 이슬람 율법에 의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슬람 혁명정부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부가하였다.

1980년 1월 새로운 헌법에 의해 바니사드르(Bani Sadr)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혁명기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정상적인 국가기구에 의한 통치를 모색하였으나, 성직자 중심의 이란 공화당 출신인 수상 라자이(Rajai)와 대립하여 1981년 7월 실각하였다. 한편, 1980년 9월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다. 전쟁기간 중 이슬람혁명세력은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그러나 1989년 6월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9월 유엔의 중재로 이라크와의 전쟁이 종결되자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 형태로 복귀하기 시작하였다.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 온건파인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¹⁰⁰ 외교통상부, 『이란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pp. 21-42 참조.

Khamenei)가 최고지도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에는 라프산자니(Ali Akbar Hashemi-Rafsanjani)가 취임하였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각기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체제 유지라는 공동 목표아래 단합하여 쌍두체제를 이루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즉, 하메네이는 이슬람 혁명의 수출을 주장하는 과격파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라프산자니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재건을 모색하였다. 1992년까지 이슬람 과격파들이 의회의 다수파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점차 의회의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다.

1997년 5월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하타미(Hojjatoleslam Seyyed Mohammad Khatami)가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젊은이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1999년 2월 지방의회선거에서까지 개혁세력이 압승하자 보수세력은 개혁지향적인 언론을 폐간하는 등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이에 전국적인 학생 소요가 발생,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개혁세력이 국회의석의 70%를 차지하여 압승하였다. 2001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하타미는 개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2002년 9월 선거법 개정안 및 대통령 권한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수계 중심세력의 하나인 헌법수호위원회는 2003년 5월 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권한 강화 법안을 거부하여 개혁추진에 타격을 주었다. 현재 하타미 대통령은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군·경찰·사법·공안 기구 등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의 견제로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이슬람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란 정부는 대외개방 및 다원주의 가치

를 강조하며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적대적 대이스라엘 정책, 테러와의 연관성, 인권, 대량파괴무기 획득 기도 등을 이유로 대이란 봉쇄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북한·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였다. 2003년 들어 미국은 이란의 테러 비호와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라크보다 더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자, 이란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의혹,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향후 이란의 정치·경제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세계 제2의 가스 매장국이며, OPEC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의 석유생산국이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은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란은 최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6) 리비아

1912년부터 리비아 영토는 부분적으로 이탈리아의 식민화하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전 영토가 식민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점령되어 분할 통치되었다. 1951년 리비아는 이드리스(Muhammad Idris)를 국왕으로 하는 연방왕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리비아는 독립과 더불어 정치·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리비아인들은 신생 연방국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촌락과

부족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 지역간 대립이 수시로 표출되었다. 리비아는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1950년 후반에서 1960년대 초 미국과 영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 및 군사원조를 받았다.¹⁰¹

1950년대 중반부터 유전개발이 시작되어 1960년에는 35개의 유전이 개발되었다. 석유개발과 함께 재정이 증가하자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3년 국가체제를 연방국가에서 단일왕정국가로 전환하였다. 석유수입 증대로 서방국가들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리비아의 대외적 발언권도 향상되었다. 리비아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대해 군사기지 철수를 요구하여 1996년 초 영국군이 대부분 철수하였다.

1967년 6월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리비아는 심각한 정치적 소요를 겪었다. 이집트의 선전책동에 자극된 항구 및 석유 노동자, 학생들은 미국·영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유대인 사회를 공격하였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1969년 9월 카다피(Muammar Al Qadhafi) 대령을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 그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공화국의 실권을 장악한 혁명평의회는 아랍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반이스라엘 노선을 표방하고 이슬람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1970년 영국군과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석유산업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1977년에는 혁명평의회를 해체하고 Jamahiriya(인민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평의회 대신 의회 역할을 수행하는 총인민회의가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으며, 카다피는 총인민회의 총서기국 서기장으로서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1979년 3월 카다피는 서기

¹⁰¹ 외교통상부, 『리비아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7), pp. 22-50 참조.

장직을 사임했으나 ‘혁명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국가 원수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 최고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아랍사회주의연합이 유일 합법정당이며, 총인민회의와 각종 서기국 선임은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1969년 군사혁명 이후 리비아와 소련 등 사회주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특히 1979년 리비아가 인민 사회주의를 선포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1981년 미국은 리비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개시하였다. 그 후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증폭되자 1986년 3월 미군 폭격기는 리비아의 미사일 기지 및 해군기지를 폭격하였고, 4월에는 미 해군기가 카다피궁을 폭격하였다. 미국은 리비아가 국제 테러리즘을 조장·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988년 미국 팬암(PAN AM)기 폭발과 1989년 프랑스 UTA기 폭발사건에 리비아 정보기관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부터 리비아의 해외자산 동결, 국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경제제재를 결의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1991년 10월 카다피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경제제재와 석유가격 하락 등으로 리비아는 경제난을 경험하였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경제가 침체되자 카다피는 과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기치아래 시행하던 반정부단체 및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을 점차 포기하였다. 1998년부터 리비아는 온건한 실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9년 4월에는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리비아인 혐의자 2명을 네덜란드 특별법정에 인도함으로써 유엔의 제재가 정지되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리비아는 불량국 이미지를 개선

하기 위해 IAEA의 사찰에 협력, 2004년 3월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완료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조직 확대 개편, 경제 제도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서방 주요국과의 관계개선도 도모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7) 예멘

오스만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북예멘 지역에서는 1918년 사나를 수도로 한 회교군주국이 수립되었다. 북예멘은 독립을 달성한 후 남예멘을 통치하고 있던 영국군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무력 통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왕국의 봉건적 통치하에서 정치·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북예멘은 남북예멘 통일을 주도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예멘 지식인들은 북예멘 봉건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며 왕권에 도전하였다. 1962년 9월 16일 이집트 나세르 군사혁명정부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를 신봉하게 된 젊은 장교들이 군사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선포하였다.¹⁰²

북예멘 공화정부 수립을 계기로 남예멘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사회집단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항구 도시인 아덴에서는 부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세력이 파업 등의 시위를 통해 독립운동을 추진하였고, 남예멘 내륙지역에서는 좌파계열 지식인들이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영국군과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익 민족주의 세력을 누르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민족해방전선은 1967년 11월 30일 영국과 독립협정을 체결하고

¹⁰² 한국예멘교류센터, 『예멘』 (서울: 종합경제사회연구원, 1996), pp. 11-19 참조.

남예멘에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였다.

1972년 9월 남북예멘 군대의 대규모 국경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곧 아랍연맹의 중재로 동년 11월 26~28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 1979년 2월 국경분쟁이 재발하였다. 이번에도 곧 아랍연맹의 주선으로 남북예멘은 동년 3월 28~30일 쿠웨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1972년에 체결한 통일원칙을 재확인하였다. 1981년 12월 2일 아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남북예멘은 1984년부터 석유를 발굴하기 시작하였는데, 석유매장량은 북예멘 지역에 10억 배럴, 남예멘 지역에 35억 배럴,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88년 5월 남북예멘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국경지대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합의하였다. 1990년 4월 19~22일 남북예멘 지도층은 사나에서 회동하여 통일 후 정치권력을 동등하게 안배하기로 합의하고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예멘의 정치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1의 동등한 비중을 주고 통합한 것으로 대등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예멘이 정치권력을 대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남예멘측이 통일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양측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정부의 조직은 과도하게 비대화되었고 정책결정체계는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1993년 4월 총선거 이후 신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을 둘러싼 남북예멘 정치인들의 이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통일이예멘은 재분단의 위기를 겪었다. 남예멘 지도부는 1994년 5월 아덴을 수도로 한 새로운 예멘민주공화국을 창

설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7일 북예멘군은 아덴을 함락하고 남예멘 지도층은 해외로 도피하였다. 합의통일 이후 정치적 불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재분단의 위기를 겪은 예멘은 결국 무력으로 통일을 완결하게 되었다.

1994년 내전을 겪은 후 예멘 정국은 보수적인 지배연합을 중심으로 안정을 회복하였지만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재정적자는 심화되었다. 8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에 시달린 예멘정부는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경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힘입어 예멘 경제는 1995부터 2000년 사이에 연평균 6.4%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다. 한국·중동국가 관계

한국은 1957년 중동지역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터키와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 후 1961년 12월 이집트와 영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62년 4월에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당시 미국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친서방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던 모로코와 1962년 7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비아랍계인 이란과 1962년 10월 각각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에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타 아랍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¹⁰³ 이에 우리 정부는 비동맹 중립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1969년까지 7년간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 임명을 보류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북예멘·알제리·이집트·시리

¹⁰³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년: 1948-1998』 (서울: 외교통상부, 1999), p. 74 참조.

아·이라크·남예멘 등 6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대중동 외교에서 남한보다 우세한 입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 정부는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Hallstein Doctrine)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소 사회주의 성향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증진시킬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랍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971년 2월부터 이스라엘에 겸임대사 임명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1973년 10월 제 4차 중동전쟁이 종결된 후 아랍 산유국들이 친이스라엘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지하자,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및 이번 전투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랍측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아랍 국가들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¹⁰⁴ 한편,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언하여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과 외교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한국은 1974년 오만과 카타르, 1976년 바레인, 그리고 1979년 쿠웨이트와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아랍 국가들과 점차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로 중동 건설사업에 진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아랍 국가들과도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였다.

중동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 6개국과 추가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80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리비아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81년 레바논,

¹⁰⁴ 유정렬, “제10장 한국과 중동,” 최종기 편저, 『한국외교정책』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pp. 277-301 참조.

1985년 북예멘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아랍국가 중 외교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이집트와는 1961년 이래 계속 총영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과 중동 국가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교류, 경제사절단 및 건설협력단의 왕래 등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88년 중동 각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약 6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1988년 8월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종식되자 한국은 1989년 이란과 이라크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대 탈냉전기에 접어들자 북한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는 약화된 반면, 한국과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우리 정부는 1990년 1월 알제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평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국적군 경비 부담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중동평화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지원도 실시하여 아랍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¹⁰⁵ 한편, 아랍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를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1995년 4월에는 이집트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지역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증진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무바라크 대통령은 남북한 중재역할 의향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정부는 이집트·이스라엘·이란·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들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6·

¹⁰⁵ 송영우, 『한국의 외교』 (서울: 평민사, 2000), p. 345 참조.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된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동지역 국가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였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이라크 지원 및 중동 평화를 위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동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2003년 4월 공병 및 의료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를 이라크 나시리아에 파견하여 이라크 전후 복구와 정세의 안정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라크 난민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재건복구를 위하여 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한국군 자이툰(Zaytun) 부대 2,800여 명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견되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및 협조, 치안질서 유지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군 파병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라크 재건과 민주국가 건설을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라. 북한·중동국가 관계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를 국제정치에서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북한은 소련의 외교망에 의존하여 이집트에 침투하고, 이집트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 아랍국가들에 대한 접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 이집트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58년에는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1958년 알제리민족해방전선이 카이로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즉각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2년 독립할 때까지 알제리민족해방전선에 대해 군사·경제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중동 아프리카지역 혁명세력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의 효시가 되었다. 1963년 3월 북예멘과 국교를 수립하고, 동년

8월에는 이집트와 정식으로 수교하였다. 급진 아랍국가들에 대한 접촉을 확대해 온 북한은 1965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지지하는 대규모 평양시 군중대회를 소집하였고, 다음 해에는 PLO와 정식으로 수교하였다.¹⁰⁶

북한은 1966년 8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천명하고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자주외교기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국제 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들과 친선 및 유대관계를 발전시키고, 모든 지역인민들의 반제 민족해방운동과 독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며, 광범한 반제 반미 통일전선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즉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 25명을 파견하는 등 1976년까지 시리아에 총 1,500명의 군사요원을 파견하였다.¹⁰⁷ 이스라엘 외교정책과 시리아에 대한 지원으로 강경 아랍국가들의 호의를 사게 된 북한은 1968년 이라크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편, 1967년 11월 좌익세력에 의해 남예멘에서 예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북한은 1968년 2월 7일 남예멘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중동지역 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는데 당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들은 북예멘을 제외하고 모두 반제 반식민주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띤 급진적인 아랍민족주의 이념을 신봉한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¹⁰⁶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7), p. 62 참조.

¹⁰⁷ 국토통일원, 『북한의 군사외교 실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3), pp. 49-53 참조.

1973년 10월 6일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을 전후하여 북한과 이집트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다. 이집트는 취약한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은 이집트에 조종사 30명과 정비사 및 미사일 요원 50명을 파견하고, 1,000만 달러 상당의 로켓 트포, 야포, 미그(MIG)기 부품 등을 지원하였다.¹⁰⁸ 4차 중동전 기간 중 북한 조종사들이 전투임무에 가담함으로써 북한과 이집트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었는데, 북한과 이집트는 현재까지 탄도탄 개발에 합작하는 등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시리아에 제3차 중동전 당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제4차 중동전이 끝난 1974년에는 전투기 조종사 2개 중대와 탱크병 500명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1975년 시리아에 군사기술자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방공부대 등의 군사기술을 지원하였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1976년 40명의 미그기 조종사만 잔류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은 반미 반제국주의의 기수임을 자처하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급속히 친밀해졌다. 1974년 1월 북한은 리비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테러리즘에도 협력하게 되었다. 1977년 북한은 리비아에 군사고문단 10여 명과, 대공미사일 기술자 4명을 파견하였다. 1978년 9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이집트가 친미노선을 표방하자 북한은 리비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다. 북한은 1979년 리비아에 조종사 80명을 포함한 정비 보급요원 및 군의관 등 공군요원 280명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리비아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비동맹권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집트가 실리위주로 외교정책을 전환하자 반이스라엘의 이념적 유대를 바탕으로 강경 아랍국가들

¹⁰⁸ 위의 책, pp. 49-64 참조.

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려던 북한은 중동에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됨을 느끼게 되었다.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로 인하여 대중동 외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하자 북한은 점차 이념적 명분보다는 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동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이란에 대해 스커드 B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 군사장비의 수출을 확대하여, 1982년 북한은 이란의 최대 군수물자 공급국이 되었다.¹⁰⁹ 한편, 이라크는 북한이 이란에 대해 군수물자를 수출하자 1980년 10월 북한에 대해 단교를 선언하였다. 이란-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친이란 노선의 선택은 대외적으로 온건노선을 택한 아랍국가들 사이에 북한의 입장을 아주 어렵게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군수물자 수출을 통하여 경감시키고자 강경 아랍국가들에 대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1982년 10월 가타피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리비아와 군사동맹 성격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정보와 전문가들을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한 후 북한은 리비아에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한편, 공군 조종사를 비롯한 수백명의 군사요원을 리비아에 파견하였다. 한편, 1983년 4월에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자 북한은 이집트와 처음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과 이집트는 정상회담에서 장관급공동위원회 정기교환 개최 등의 구체적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은 이란과 1985년부터 미사일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¹⁰⁹ 서재만, “페르시아만 연안국과 한국,” 홍순남 외 공저, 『중동의 정치 경제: 페르시아만 안보와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87), p. 154 참조.

1998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이후 북한과 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소원해졌다. 그러나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군대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걸프전이 발발한 후 이라크가 전쟁의 피해와 국제적 제재로 쇠망해가는 반면, 이란이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북한과 이란 관계는 다시 긴밀해졌다. 북한은 1990년 11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하여 무기수출 및 원유도입 문제에 관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다.¹¹⁰ 1991년 북한은 이란에게 약 100대의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수출하는 한편, 약 1백만 톤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북한은 국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탈냉전의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도 이념보다 실리를 더욱 중시하게 됨에 따라 북한도 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중동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북한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수 아랍 국가들과 통상관계를 증대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리비아에 조선경제협력회사를 설립하고 대학병원 건설 등 중동의 건설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은 한계를 노출하였다.

북한은 현재 이집트·리비아·이란 등과 군사·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의 유대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이집트와 사회 안전·내무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에는 문화·과학·보건 등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이집트의 무기체제가 미국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과 이집트의 군사 협력관계는 약화되었으며, 북한의 낙후된 경제수준으로 인해 경제·통상

¹¹⁰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서울: 내외통신사, 1991.7.1~12.31), pp. 134-135 참조.

등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이집트와 북한 관계는 실질적인 상호협력 측면보다는 상징적,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는 주로 이집트가 과거 북한의 군사지원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리비아의 관계는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이 리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유를 공급받는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03년 2월 현재 리비아에는 북한 건설진출 인력 300여명, 의료요원 750명, 군사요원 300여 명이 상주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리비아와 북한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이란은 1993년 국방장관 및 미사일 부대 장교단을 파견하여 북한과 군사·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였다.¹¹¹ 그 후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도입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이란은 1998년 7월 사정거리 1,300km에 달하는 샤후브(Shahab)-Ⅲ를 실험발사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겪게 된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는 극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쿠웨이트, 바레인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현재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제외한 중동지역 1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¹¹²

¹¹¹ 미국의회조사국, “북한의 중동과의 군사관계에 관한 보고서,” 『국제문제』 (1994.12), p. 126 참조.

¹¹²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 pp. 170-179 참조.

다. 민간차원의 주요 기관과 대중동 협력

중동지역의 저명한 사회과학 연구소로서는 이집트의 Al Ahram 전략 연구소,¹¹³ 요르단의 Al-Urdun Al-Jaid Research Center(UJRC),¹¹⁴ 레바논의 The Center for Lebanese Studies(CLS)¹¹⁵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면 같은 아랍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랍권에 대한 통일외교는 남북한에 대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지역 사회과학 연구소로서 명성을 갖추고 있는 Al Ahram 전략연구소를 통하여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차원에서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은 한·중동 협력포럼(Forum for Korea-Middle East Cooper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9·11 사건,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해 한국과 아랍국가들과의 상호이해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2004년 5월 발족하였다. 관계·학계·언론계·경제계·사회·문화계 등 각계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여 매년 1회씩 중동과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 있어서의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동측 인사들은 주로 Al 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ACPSS: Al Ahram 전략연구소),

¹¹³ ACPSS는 1968년 Al Ahram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이집트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물론 중동지역과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ACPSS의 조직 연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xtra.ahram.org.eg>> 참조.

¹¹⁴ UJRC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ujrc-jordan.org>> 참조.

¹¹⁵ CL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user.ox.ac.uk>> 참조.

American University in Cairo(AUC), 한국·이집트 기업인협회 및 각국 언론사 대표들을 통하여 접촉되고 있다. 사실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중동지역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대학, 연구소, 경제단체, 언론사 등에서 근무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 한인동포 실태

중동지역에 진출한 해외동포 숫자는 많지 않다. 중동지역 해외동포들은 건설사업, 무역중개업, 태권도 사범, 기독교 선교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중동지역 전체에 약 6,500여 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에 1,089명, 리비아 1,012명, 아랍에미리트 983명, 이집트 643명, 이스라엘 584명, 쿠웨이트 553명, 이란 456명, 모로코 354명, 카타르 306명, 요르단 183명이 거주하며 여타 국가에는 100명 이하의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⁶ 이라크 경우는 테러 사건이 빈발함으로써 거의 모두 철수하였다. 그러나 한국 자이툰 부대 장병들이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며 주민들과 신뢰를 쌓게 되면 한국인들의 진출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비록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숫자는 적지만 이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체재국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지역 주요 해외동포 조직¹¹⁷으로는 이집트 한인회(카이로), 리비아 한인회, 사우디아라비아 한인회, 이란 한인회, 이스라엘 한인회, 쿠웨이트 한인회, 모로코 한인회(라바트, 카사블랑카), 아랍에미리트 한인회,

¹¹⁶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7), p. 22 참조.

¹¹⁷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단체조직 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4.4), pp. 675-691 참조.

요르단 한인회 등이 있다.

사. 대중동지역 통일역량 평가

남북한이 분단되고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유엔은 한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다. 유엔에서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성향의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제3세계 비동맹국 가들과의 외교활동을 증시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초까지 대중동 외교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우세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동의 강대국인 이집트·리비아·이란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비동맹회의에서 남북한 문제에 관한 북한측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1980년대에도 북한은 이집트·리비아·이란·시리아 등에 무기를 수출 하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였다.

한편, 중동지역에 대해 경제외교에 주력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리비아 등의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1990년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중동의 외교에서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집트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2002년 부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되었다. 2003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후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서방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집트와 더불어 리비아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적극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비아와 예멘 등의 건설사업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대중동지역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상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중동 24개국 중 23개국 수교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한반도통일 문제에 무관심	하
경제관계	- 교역(2003년): 한국의 총 무역 중 9.7%, 무역적자 183억 달러 - 투자(1980~2003.6): 한국의 대중동 투자 9억 9,000만 달러	중
고위인사교류	-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 중동국가 방문 - 요르단 국왕, 이집트 대통령, 각국 장관 등 방한 - 한·중동 협력포럼 창설(2004.5)	중
학술교류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 간 교류 저조	하
한인동포 네트워크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국가별 한인회 활동 저조	중

2. 중남미지역

우리는 흔히 중남미라고 할 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지리적으로 북미에 속해 있는 멕시코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중남미라는 용어와 그에 소속된 국가는 엄격히 따지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남미보다는 오히려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멕시코를 포함한 33개국 지역 국가들을 중남미라는 범주에 묶어서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중남미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멕시코, 중미, 카리브, 안데스 지역, 남미 남부 원추형 지대 이렇게 5개 지역 2,055만 제곱킬로미터(전 세계 면적의 15%, 한반도의 93.5배)에 걸쳐 있는 33개국을 말한다. 중남미 국가의 인구는 5억 1,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한다. 언어적으로는 서반아어를 사용하는 주요 18개국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과 함께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의 12개 도서 국가, 불어를 사용하는 아이티 그리고 화란어를 사용하는 수리남이 있다. 비록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수가 적지 않지만 이들 나라들은 자메이카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10만 정도인 카리브의 도서 국가들로서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반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은 비록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나 경제 규모면에서 거의 중남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의 전체 GDP는 비록 1조 8,280억 달러(2001년)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은 세계 원유의 11.3%, 철의 17.3%, 구리의 20.5%, 은의 31.8%, 주석의 20.9%, 알루미늄의 16.6%를 생산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가. 중남미 · 한국관계

(1) 중남미와 한국이민

중남미와 한국간의 관계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1,033명의 한국인이 멕시코 유카탄의 에네켁 농장에 4년 계약노동으로 건너간 것이 한국과 중남미의 공식적인 첫 접촉이라 할 수 있다.¹¹⁸ 한인의 멕시코 이민은 1902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주 이후 한국인의 자발적인 이민으로서는 두 번째 케이스이다. 비록 당시 멕시코 한인 이민에 대해 심지어는 속아서 ‘노예’로 끌려갔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으나 실제 그들의 삶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예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이들 이민자들은 당시로서는 일찍 해외로 눈을 돌린 진취적 기상을 지닌 용기있는 자들이었다.

만약 멕시코에 대한 한인 이민이 1회로 거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해방 후 그들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현재 멕시코에서 이들 한인 후손들이 무형의 자산으로서 한국에 미칠 기여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 멕시코 이민이 1회로 그친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이다.

중남미에 대한 한인 이민은 그때 이후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다시 시작되었다. 1962년 「해외이주법」 공포를 계기로 그 해 12월에 브라질에 농업이민 18세대 92명이 이주를 시작한 것이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러한 이민은 그때까지 별관계가 없었던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¹¹⁸ 이민사 관련해서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8); 김원용, 『재미한인 오십년사』 (Reedley, CA: Korean Affairs Institute, 1959); 김기현, “유카탄 한인 이민 초기 에네켁 농장 생활,” 『서어서문연구』, 제28호 (2003년 9월호), pp. 615-633 참조. 그리고 이들의 현재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31호 (2004년 6월호), pp. 327-345 참조.

새로운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이민자들은 원래 목적이었던 농업에 전념하기보다는 도시로 나가 상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한 때 브라질과 한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계획적인 이민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로 인해 브라질을 비롯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으로도 많은 한인 이민이 진출하게 되었다.

(2) 외교관계

한국과 중남미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1959년 10월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 수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 국가로서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 남한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었다. 또한 1950년 6·25전쟁이 발생했을 때 콜롬비아는 비록 자신의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¹¹⁹이기는 했지만 대대병력을 파병하였으며 멕시코는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중남미는 우리에게 대미 관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10월 31일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수교를 한 이래 1960년대에만 20개국과 외교관계를 더 수립하게 된다. 이 때 우리의 중남미 관계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대UN외교를 위한 것이었다. 남북한 간의 대결외교가 한창이었던 당시 나라 수가 많고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지 세력인 중남미의 지지 공고화는 당시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외교적 목표였다. 어쨌든 1960년대까지 중남미는 거의 우

¹¹⁹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배경에 대해서는 차경미,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연구-국내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를 참조.

리 외교의 독무대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은 비동맹 자주외교 노선이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서 대두되고 제3세계 외교가 붐을 이루면서 1970년대부터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배타적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70년 칠레에 아옌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1973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들 나라에 있던 우리 공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이 쿠바와 페루 등 수교국을 늘려감에 따라 중남미에서 우리의 입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남북 대결외교가 시작되었다. 당시 중남미에서 우리 외교의 주목적은 북한과의 수교를 막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생 카리브의 소규모 독립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했다.

(3) 경제교류

1960년대까지 우리와 중남미와의 경제교류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1969년 새우어장 진출을 위해 수리남의 파라마리보에 어업 전진기지를 설치한 것이 우리와 중남미와의 경제교류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 후 파나마 등에 제조업이나 수산업 분야 합작 투자가 있었으나 그 규모는 매우 미약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멕시코 등에 대기업의 해외 지사가 진출했었으나 당시 중남미의 무역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중남미 국가들이 개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우리도 미국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을 펼치면서 한국과 중남미간의 교역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3년 이래 중남미와의 교역은 우리 전체 무역의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투자의 측면에 있어서도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저임과 대미 봉제 수출 쿼터제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체들의 직접 투자도 시작되고 199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자본집약형 투자를 본격 시작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4) 냉전종식 이후 한국과 중남미관계

냉전의 종식은 중남미에 있어 미국식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외에 다른 대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미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냉전의 종식으로 신 자유주의로의 외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 헤게모니도 더욱 공고화되었다.

1980년대 초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전개된 이 지역의 민주화 바람은 1990년 칠레와 1992년 파라과이에서 군부 정권이 막을 내림에 따라 현재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 32개국 모두 최소한 형식상의 자유민주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긴축, 개방, 민영화로 대변되는 자유시장경제 모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중남미 국가에서 적용되었다. 또 그와 함께 지역경제의 블록화도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소속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소속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결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글로벌화의 전 단계로서 역내 무역의 자유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역외 국가의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남미지역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으

로 다가왔다.

1980년대까지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가 주로 냉전질서 하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안보적 성격의 것이었다면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중남미에서의 남북대결 외교도 막을 내리고 1990년대부터는 기존의 우호협력관계에 더해 교역, 투자 등을 통한 실질협력관계 증진이 외교의 주안점이 되었다. 한국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중남미로부터 국가원수급 방문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한국 국가원수의 중남미 방문은 1991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이 처음이었다. 중남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도 변함없이 이어졌는데 1993년에서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칠레는 당시 핵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KEDO 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남미의 변함없는 지지는 한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출마했을 때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 32개국 이 한국을 지지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증대하는 한국과 중남미와의 경제적 교류를 반영하여 1996년 9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남미 5개국(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을 순방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하에서 중남미지역의 17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한국과 중남미 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외교통상부 내에 대중남미 관계를 전담하는 중남미국이 창설됨으로써 한·중남미 관계는 진일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과 중남미 관계를 정리하면 첫째, 냉전종식 이

후 양자 간의 관계가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협력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실질적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양 지역간 국가원수들의 상호 방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셋째, APEC과 같은 국제협력체가 형성됨으로써 최소한 양 지역 국가원수들의 정기적 만남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 거점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게 되고 그 출발로서 중남미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었다. 비록 김대중 정부의 예정된 중남미 순방은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 불발로 그쳤지만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¹²⁰ 등을 통한 양 지역 간의 정기적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시기 중남미는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가) 주요 3국과 정치적 관계

현재 한국은 중남미 33개국 가운데 쿠바를 제외한 32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15개국에 대사관을 1개 지역(상파울로)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17개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¹²⁰ FEALAC은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간 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에 출범한 대화협의체이다. 현재 회원국은 동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각각 15개국씩 총 30개국이며 2004년에 중남미 2개국(니카라과, 과테말라)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회원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쿠바,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FEALAC의 주요 활동은 원칙적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외무장관회의,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리 회의, 3개 분야에 걸친 작업반 회의 등이 있다.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 서울에 상주 공관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남미에서 20개국과 수교했으며 상주공관은 4개국(멕시코, 쿠바, 페루, 가이아나)에 두고 있다.

국가 원수급 인사교류로서는 1970년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4개국 중남미 대통령들이 방한했으며 2000년 이후에도 2001년 1월 브라질 대통령, 2001년 4월 코스타리카 대통령, 2001년 6월 멕시코 대통령, 2002년 5월 에콰도르 대통령, 2003년 2월 칠레 대통령이 각각 방한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1991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과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의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5개국 순방 등 2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방은 한·중남미 관계 증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남미 지역과 한국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중남미와 한국은 양자 간에 다양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의 차원에서 1981년 미주기구(OAS) 상임 옵서버 가입, 1996년 Rio Group과의 대화협의체 구성 및 한·중미 5개국 정상회의 개최, 1997년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과 4월 한·Mercosur 협의회 구성, 1998년 카리브 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등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한·중남미 외교관계 현황

국가	한국과의 수교일자	북한과의 수교일자	현지 한국 공관	현지 북한 공관
앤티가바부다	1981.11.1	1973.11.27	-	-
아르헨티나	1973.2.15	1973.6 수교 후 1977.6 단교	0	-
바하마	1985.7.8	1991.5.16	-	-
바베이도스	1977.11.15	1977.12.5	-	-
벨리즈	1987.4.14	1991.6.20	-	-
볼리비아	1965.4.25	미수교	-	-
브라질	1959.10.31	2001.3.9	0	-
칠레	1962.6.12	1972.6.1 수교, 1973.9.19 단교, 1992.9.25 재 수교	0	-
콜롬비아	1962.3.10	1988.10.24	0	-
코스타리카	1962.8.15	1974.2.10 수교 후, 1983.12.2 단교	0	-
쿠바	1959 단교	1960.8.29	-	0
도미니카연방	1978.11.3	1979.9.18 수교, 1981.1.28 단교 후 1991.1.21 재 수교	-	-
도미니카공화국	1962.6.25	미수교	0	-
에콰도르	1962.10.5	미수교	0	-
엘살바도르	1962.8.30	미수교	0	-
그레나다	1974.8.1	1979.5.9 수교, 1985.1.15 단교 후 1991.9.20 재 수교	-	-
과테말라	1962.10.24	미수교	0	-
가이아나	1968.6.13 수교, 1978.7 신임장 제정거부 후, 1989.1 관계 정상화	1974.5.18	-	0
아이티	1962.9.22	미수교	-	-
온두라스	1973.4.1	미수교	-	-
자메이카	1973.10.13	1974.10.9	-	-
멕시코	1962.1.26	1980.9.19	0	0
니카라과	1962.1.26	1979.8.21	-	-

국가	한국과의 수교일자	북한과의 수교일자	현지 한국 공관	현지 북한 공관
파나마	1962.9.30	미수교	0	-
파라과이	1962.6.15	미수교	0	-
페루	1963.4.1	1989.11.21	0	0
세인트키츠네비스	1983.9.19	1991.11.23	-	-
세인트루시아	1979.2.23	1979.9.13 수교, 1988.3.24 단교 후, 1990.7.16 재 수교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79.10.28	1981.4.3 수교, 1988.1.30 단교 후, 1990.8.17 재 수교	-	-
수리남	1975.11.28	1982.10.11	-	-
트리니다드토바고	1985.7.23	1986.1.22	-	-
우루과이	1964.10.17	미수교	0	-
베네수엘라	1965.4.29	1974.10.24	0	-

자료: 외교통상부

1) 멕시코

1988년 5월 15일자 멕시코 헌법에 명문화된 멕시코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민족자결주의, 불간섭주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 금지, 모든 국가의 법적 평등, 국제협력 그리고 세계평화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멕시코 대외정책에 있어 불간섭주의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서 멕시코의 생존을 위해 서라도 강력히 주창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본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쿠바정부를 공식인정한 나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개방과 국제화를 위해 미국, 서구, 아·태지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UN이나 OAS 등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주요 산유국이면서도 OPEC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2000년 12월 71년간의 제도혁명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비센테 폭스(Vicente Fox) 정부는 멕시코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국내적 조건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권 강화의 제스처로서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군(PKO)에의 참여도 시사했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문화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속하면서도 지리적으로는 북미에 속해있는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서 그들 간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그들 사이에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남미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유대 강화의 일환으로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FTAA) 교섭 시 중남미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역할을 맡고자 한다. 나아가 미주 이외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EU와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지역과는 APEC을 통한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국 정책에 있어서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한국문제는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기본입장 하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며, 한반도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한국의 통일방안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의 경제 발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아시아 제2의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멕시코는 교역, 투자, 기술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을 전략적 동맹 국가로 생각하여 일찍이 우리에게 자유무역 협정을 제의하기도 했다.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멕시코는 한국의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12일 한국을 승인하였고 양국은 1962년 1월 26일 국교를 수립하였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1997년 김영삼 대통령,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으며 1996년 Zedillo 대통령과 2001년 Fox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였다.

2) 브라질

브라질의 대외정책 기조는 국익 극대화과 지역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유엔 비상임이사국 피선에 이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며, 인종차별이나 대량살상무기, 마약 등에 반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대륙 나아가 개도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리외교를 추구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내의 실질협력 관계를 공고화하고 나아가 안데스 지역까지를 통합하는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논의에 있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 하에 2002년 노동당(PT)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스 이그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s Ignacio Lula da Silva)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국제분쟁에 있어 평화적 해결에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인권, 군축, 환경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중남미의 지도국으로서 유엔안보리 확대개편 및 유엔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역내 국제기구로서 OAS나 리오그룹 등에서 국경분쟁이나 국제 범죄조직, 환경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 해결

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만의 남미 평화 지대와 남미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 대외적 단체협상력을 증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동티모르, 앙골라 문제 해결에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자주적 외교노선을 표명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중남미 비핵화를 위한 Tlateloco 조약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와의 핵물질 통제를 위해서 핵물질 통제위(ABACC)를 설치 운영하고 핵사찰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중심으로 한 핵통제 및 핵 비확산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 이익의 대변자이자 중남미지역의 대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NPT, IAEA, 환경, 인권, 조직범죄 등 세계적인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외교의 첫 번째 관심은 당연히 중남미 국가들이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들과 기존의 남미공동시장을 심화 확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 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북미에 위치한 멕시코와도 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미관계에 있어 룰라 정부도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해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적 결정에 기초한 상호주의적 관계를 강조한다. 유럽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남미공동시장과 EU간의 자유무역 협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과는 점차 증대하는 경제적 비중을 감안하여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투자유치와 기술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개도국으로서의 공통적 이해추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는 1959년 10월 31일 국교수립 이후 별다른 관계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초기 한인 농업이민자들의 불법적인 도시 이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다소 결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대에 브라질은 국제사회에서 대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브라질과의 실질적 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기업들의 대외 진출이 확대되고 브라질에서는 개혁과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양국 간에도 실질적 협력관계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우리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Mercosur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브라질과의 실질적 교류관계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 그에 따라 1995년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하였고, 1996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방문이 이루어졌다.

한편 양자 간의 관계증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브라질 또한 태평양 시대를 대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심지어 초기에 일본과 중국에만 관심을 가지던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최근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룩한 한국에 대해서도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브라질 외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2001년 브라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까르도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대통령의 상호 방문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백인 국가로서 국민의 다수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의 외교정책의 기조도 친유럽적인 성향을 지녀왔다. 그러나 1982년 영국과 Malvinas 섬의 소유권 분쟁 이후 중남미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갖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설립에도 브라질과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리외교를 위해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인권 문제 등으로 냉각되었던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1990년 2월에는 Malvinas 전쟁의 상대국이었던 영국과도 국교를 회복하고 EU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게다가 친서방 재접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9월 19일에는 비동맹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걸프전에 참전하고, 크로아티아에 파병하는 등 PK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1995년 2월에는 NPT에도 가입하였다. 1993년에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아르헨티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에는 위기 해결을 위한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확대와 남미 공동시장의 지속적 강화와 같은 문제에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아르헨티나는 남북 당사자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1996년 8월 26일 KEDO에 20만 달러를 기여한데 이어 9월 5일에는 KEDO 일반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 등 실질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62년 2월 15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한반도문제 관련 우리측 입장지지 등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왔다. 1995년 9월 Carlos Saul Menem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고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여 최초의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이 실현되었고 각종 협정이 체결되고 양자협약체 회의 개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경제통상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0년대에는 양국 간에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미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요 3국과 경제적 관계

중남미와의 교역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로의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남미의 개방정책이 시작되고 우리도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면서 중남미로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전체 수출의 5%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인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무역수지에서 42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표 III-3> 참조). 따라서 양 지역의 지속적인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과 함께 중남미에서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I-3> 한국의 지역별 교역 현황(2003년)

(단위: 백만달러, %)

지 역	수 출		수 입		상품수지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아시아	99,817	51.5	87,069	48.7	12,748
대양주	4,906	2.5	6,765	3.8	-1,859
북 미	36,902	19.0	26,674	14.9	10,228
중남미	8,802	4.5	4,594	2.6	4,208
구 주	31,899	16.5	24,759	13.8	7,140
중 동	8,592	4.4	26,929	15.1	-18,337
아프리카	3,118	1.6	2,006	1.1	1,112
기타지역	287	0.1	31	0.0	256
계	193,817		178,827		14,990

자료: KOTIS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03년 멕시코, 파나마,¹²¹ 브라질, 과테말라, 칠레 등의 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순서대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¹²² 등이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을

¹²¹ 파나마에의 수출은 주로 풀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제3국 우회수출을 위한 것이다.

2003년 순서대로 살펴보면 선박, 편직물, 합성수지, 승용차, 무선통신기 기부품, 무선전화기, 음극선관, 모니터, 칼라 TV, 컴퓨터 부품, 경유, 폴리에스터 직물, 냉장고,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 전자관부품, 타이어, 에어컨, 세탁기, VCR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괴 스크랩, 원유, 철광, 동광, 강반제품, 당류, 펄프, 아연광, 집적회로반도체, 식물성유지 등 주로 광산물이 주를 이룬다.

투자의 측면에 있어 중남미의 비중은 더욱 큰데 2004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외 총투자 누적 합계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비중은 전체 해외 총투자의 7.6%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는 유럽 전체에 대한 투자(16.8%)의 거의 반에 달하며 북미 전체에 대한 투자(28.2%)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표 III-4> 참조).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북미나 유럽 등의 선진 지역과 동아시아 등 인접지역에 비해 미진한 실적을 보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과 함께 지역 블록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였다. 또 미국의 중미 카리브 지역 특혜무역조치(CBI)정책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기존의 대중남미 투자가 CBI를 이용한 북미 우회수출용 섬유 봉제와 같은 업종의 소규모 투자와 원자재 개발을 위한 광산 유정개발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중남미 현지 수요와 북미시장 수출을 위한 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현지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¹²²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에콰도르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표 III-4> 한국의 지역별 해외 총투자 누계 현황(2004년 5월 말 기준)

지 역	금액(천달러)	총투자 대비 비율(%)
아시아	19,460,725	41.7
중 동	817,432	1.8
중남미	3,543,183	7.6
유 럽	7,869,633	16.8
북 미	13,188,153	28.2
아프리카	766,111	1.6
대양주	1,039,880	2.3
합 계	46,685,117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주요 투자 대상국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광산업에만 2억 9,233만 달러를 투자한 페루가 총 3억 1,074만 달러로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다음으로 2억 8,612만 달러를 투자한 멕시코가 2위, 2억 7,898만 달러의 브라질이 3위, 2억 480만 달러의 파나마가 4위, 1억 4,181만 달러의 아르헨티나가 5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최근 우리와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칠레가 7,156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들여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CBI로 우리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가 각각 7,988만 달러, 6,950만 달러로 6위와 8위에 위치하고 있다.¹²³

경제 및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중남미는 우리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중남미지

¹²³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 우회투자로 리타워텍이 13억 6,200만 달러를 투자한 중남미의 카리브에 위치한 버뮤다와 역시 1억 6,480만 달러 투자를 받아들인 영국령 버진제도 등은 비록 위치상 중남미에 있지만 정식국가는 아님으로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역 기술협력과 무상원조 지원액은 2002년 총 사업비 776억 원 중 95억 원으로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2.3%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1999년 6.7%, 2000년 7.2%, 2001년 5.74%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원형태는 2002년 해외봉사단 파견이 3국 54명 9억 5,901만원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물자지원이 27개국에 8억 9,996만원으로 22.4%를 차지하고, 연수생 초청이 31개국 233명 8억 5,568만원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사업이 9개국 8명 8억 3,423억 원으로 20.8%를 각각 차지한다. 그 외 KOICA의 지원은 의료단 파견이 1국 1명 1억 3,272만원, 긴급원조가 3국 4명에 2억 3,311만원을 비롯해 전문가 파견, 태권도 사범 파견, 개발 조사, NGOs 지원¹²⁴ 등에 사용되어졌다.

한편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2000년 중남미의 주요 지원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에콰도르, 파라과이에 지방통신망 확충사업에 각각 1,500만 달러와 3,000만 달러, 파나마의 의료보건 현대화 사업에 2,000만 달러, 과테말라의 농촌개발사업에 2,500만 달러, 니카라과의 전력망 확충사업에 570만 달러, 온두라스의 지방배전망 확충사업에 600만 달러, 엘살바도르의 병원건설 사업 및 의료기자재 구매 사업에 2,750만 달러 그리고 볼리비아의 교량건설 협조용자 사업에 2,300만 달러 등이다. 이러한 중남미와의 경제적 교류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²⁴ 2002년 중남미 NGOs에 대한 지원은 1국 1명에 2,569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0.64%에 불과하다. 앞으로 중남미에서도 NGOs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할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지원 확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멕시코

2003년 우리의 대멕시코 교역은 수출 24억 6,000만 달러, 수입 3억 3,000만 달러로 21억 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액의 14.1%를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는 2003년 중남미국가 중 최대 무역수지 흑자대상 국가(중남미 흑자의 46.2%)이자 중남미국가 중 최대 수출대상 국가(중남미 수출의 27.8%)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대상 국가 중 19위, 무역수지 순위로는 4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상품수지에 아주 효자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1995년 멕시코 경제위기로 일시 감소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999년부터는 20억 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중남미경제 위기로 인해 중남미국가의 전체 수출은 -0.7%로 감소하였으나 대멕시코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10%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21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반면 대멕시코 수입은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발생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1998년 2억 달러 이내로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3억 달러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I-5> 참조).

<표 III-5> 한·멕시코 수출입 동향

구 분	수출		수입		수지(백만달러)
	금액(백만달러)	증가율(%)	금액(백만달러)	증가율(%)	
1991	775	38.4	224	-15.2	551
1992	905	16.8	172	-23.2	733
1993	997	18.2	158	-8.1	839
1994	1,289	29.3	228	44.3	1,061
1995	941	-27.0	307	34.6	634
1996	1,191	26.6	408	32.9	783
1997	1,471	23.5	344	-15.7	1,126
1998	1,405	-4.5	191	-44.5	1,214
1999	2,016	43.5	291	52.4	1,725
2000	2,391	18.6	378	29.6	2,013
2001	2,141	-10.1	267	-29.5	1,874
2002	2,232	3.8	295	10.8	1,935
2003	2,455	10.1	333.7	13.0	2,121

자료: KOTIS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1993년까지 20여 개 사 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 초 NAFTA 발효 이후 대멕시코 투자가 급증하여 2003년 12월 말 현재 150여 개 사 15억 달러 규모에 고용인원은 약 25,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투자액은 2003년 6월 현재 3억 4,600만 달러¹²⁵이며, 멕시코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월 말 현재 6억 1,900만 달러로 한국의 직접투자가 전체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이다. 가전 3사 현지공장 건설 등 대규모투자는 1998년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2001년 LG전

¹²⁵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한국기업의 미국현지 법인이 투자한 액수를 계산하지 않음으로 액수가 적게 나타난다.

자가 멕시코 북부지역 몬테레이에 냉장고 공장과 일화모직이 중부지역 푸에블라에 모직공장, 2002년 LG필립스가 북부지역 토레온에 브라운관 공장, 삼성전자가 멕시코 중서부지역 케레타로에 냉장고공장을 건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투자만이 이루어졌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지사에서 지사장 또는 지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퇴직 후 멕시코시티에서 무역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2001년 이후 퇴직자 약 15명), 멕시코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보다 손쉽게 멕시코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멕시코의 대한 투자는 우리의 외환위기시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1998년 멕시코의 Pulsar International 그룹이 한국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에 지분인수방식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교류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업체가 멕시코의 대형 건설프로젝트(정유공장 현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 6개 정유공장 중 4개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업체(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가 수주¹²⁶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가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업체의 보다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¹²⁶ 주요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SK건설 Caderyta 정유공장(16억 달러), SK건설 Madero 정유공장(12억 달러), 삼성엔지니어링 Salamanca 정유공장(1.4억 달러), 삼성엔지니어링 Tula 정유공장(1.4억 달러).

그러나 앞으로 멕시코와의 관계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의 성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한·멕시코 자유무역은 우리의 GDP에 0.01%~0.03%(정태적 분석) 혹은 0.05%(동태적 분석)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대멕시코 수출은 6.8억~6.9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민간업계의 유보적인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 외에 또 다른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멕시코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이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고 나아가 교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브라질

우리의 대브라질 교역은 1994년까지 계속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브라질이 시장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직물,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수출이 크게 신장세를 보여 1995년도부터 무역흑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편입된 데다 대폭적인 원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수출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가 1997년 4억 달러 수준에서 1998년 1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부터 브라질이 또한 IMF체제에 편입되는 한편

긴축경제 계획을 비롯한 대폭적인 해알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1999년도에는 우리의 대브라질 수출이 5억 달러 정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양국의 교역은 IMF 이전 상태인 29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표 III-6> 참조). 또한 2002년 5월 20일부터는 상용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 시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해짐으로써 양국 간의 교류가 보다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표 III-6> 한국의 대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무역규모	2.91	2.80	2.48	2.48	2.12	2.68	2.74	2.48	2.75
수 출	1.51	1.50	1.71	1.79	1.21	1.72	1.61	1.24	1.14
수 입	1.39	1.30	1.24	0.69	0.91	0.96	1.13	1.24	1.61
무역수지	0.13	0.20	0.47	1.10	0.30	0.76	0.48	0.00	-0.48

자료: 외교통상부(2004)

우리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 및 부품, 전선, 직물,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 SLAB, 펄프, 사료, 과일 주스, 커피, 대두 등 주로 농산물과 광산물이다.

브라질과 한국간의 교역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잦은 덤핑제소이다. 브라질은 2000년에서 2001년 간 한국산 나일론사, 스테인레스 강관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 나일론사는 덤핑 판정, 스테인레스 강관은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 또 2001년 11월에는 한국산 PVC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국내업체는 한화, LG상사, 현대 석유화학 등이었다. 덤핑 이외에도 브라질은 수입규제 제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

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조치이후 브라질 정부는 철강재 수입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한 후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95년 한·브라질 항공회담이 결렬된 이후 브라질 정부는 항공회담 개최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불과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한국기업의 총 투자액은 7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브라질 주요 투자 관심 분야는 소비 및 서비스 분야보다는 전자, 전기, 철강, 정보통신, 자원개발, 무역, 운송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진출 업체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관, 포항제철 등 32개사가 있다.

인프라 건설 분야의 참여 실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브라질 남부 파라라주 Araucaria시에서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으며, 현대건설 또한 브라질 북부 Rondonia주 Porto Velho시에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 만큼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진출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시장이다. 그러므로 브라질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적 원칙에 따라 우리가 파는 만큼 그들의 상품을 사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를 통해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미공동시장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장래에 이 지역과 우리의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우리는 1997년 9억 달러 정도의 교역규모였으나 아르헨티나 경제의 위축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01년 약 7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나타냈다. 그리고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이 4억 달러 수준에서 5,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인해 전체 교역 규모도 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3년 다시 수출이 늘어나 1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으로 전체 교역 규모도 다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도 2000년까지는 우리가 2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아르헨티나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그 해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02년 3억 2,400만 달러, 2003년 2억 7,400만 달러 각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표 III-7> 참조).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의 대아르헨티나 수출도 늘어나 전체 교역규모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상품수지도 다시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7>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630	584	439.4	447.5	302.1	51.4	161.4
수 입	253	126	163.3	191.3	373.8	376.3	435.6
교역수지	377	458	276.1	256.2	-71.7	-324.9	-274.2

자료: 외교통상부(2004)

우리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은 플라스틱 제품, TV 부분품, 공기 조절기, 에어컨,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이 있으며, 우리가 아르헨티나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원유와 옥수수, 동관, 동물성 사료, 대두유, 냉동어류 등 농산물과 광산물 위주이다.

나. 중남미·북한관계

(1) 멕시코

멕시코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멕시코 정부는 전통적인 다원주의 외교정책에 입각하여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방침 하에 따라 북한과 1980년 9월 수교한 이래 1992년 북한의 주멕시코 상주공관 설치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1998년 1월 북한 공관원 2명이 코카인 35kg을 밀반출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김찬식 대사를 추방하고 공관원의 숫자를 축소하며 북한외교관의 체류사증 기간 제한 및 북한인 출입제한 등의 대북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북한 공관은 대리대사체제로 운영되는 등 북한과 멕시코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나 2002년부터는 다시 대사체제로 환원되었다.

북한과 멕시코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거의 매년 국제 좌익정당 회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고 멕시코 쪽에서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이 1996년, 1998년, 1999년, 2003년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멕시코에는 친북 단체인 「멕시코·북한 우호친선 문화교류 협회」, 「김일성 추모 멕시코 협회」,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멕시코 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멕시코와 북한의 경제교류는 매우 미약한데 2000년 북한의 대멕시코

수출은 거의 없고 북한은 멕시코로부터 약 17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멕시코의 주요 협정으로는 1976년 6월에 맺은 통상협력 약정과 1997년 12월 17일에 맺은 김책공대와 사카테카스자치대학 간의 협조 및 교류에 관한 협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북한은 멕시코에 비정기적으로 벼재배 대표단이나 농업과학원 대표단을 기술협력 차원에서 파견하고 있다.

(2) 브라질

브라질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의 관계발전 및 긴장완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2001년 3월 9일 북한과 수교하기로 합의하고 동 사실을 발표했다. 수교발표 공식 성명서에는 브라질과 북한의 수교가 유엔 헌장 원칙과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세계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개발, 인권, 군축 및 핵확산 방지를 도모키 위해 쌍무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은 공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북한의 경우 유창운 주페루 대사가 주브라질 대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오우루 프레투 주중국대사가 2003년 9월 29일부터 주북한 대사를 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말에는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과 민주여성동맹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백남준 외무상이 9월 브라질 국경절에 룰라 대통령과 셀수 아모링 외무장관 앞으로 각각 축전을 발송하는 등 양국 간의 친선협조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2004년 9월 초에는 북한관계자가 대사관 개설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함으로써 북한대사관 개설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편 브라질과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3년 북한은 브라질에 제작기계, 제어장치 등 6,600만 달러어치

를 수출하였고, 철광석·사탕수수·강판 등 7,4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함으로써 800만 달러의 교역수지 적자를 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경기회복으로 북한의 대브라질 수출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 제3국간의 중계무역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4년 6월 북한의 1만 톤급 소형선박 네 척이 브라질산 설탕을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브라질과 북한은 공히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 또한 미국의 무조건 핵포기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른데 북한이 그러한 저항으로 인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면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최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비롯해 중남미에서 진보적 성향의 정권이 부상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에서의 정치·경제교류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제네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중남미의 쿠바를 제외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북한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에 아직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아르헨티나·북한관계

북한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페론당의 3차 집권시기인 1973년 6월 1일 국교를 수립한 이후 군부정권이 들어선 1977년 6월 14일 단교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관계가 없이 지내고 있다. 특히 1991년 아르헨티나가 친서방외교로 돌아서고 그 일환으로 비동맹에서 탈퇴함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가능성도 더욱 멀어졌다.

다.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

(1) 아르헨티나

- 코르도바 대학교(Universidad de Córdoba): 아르헨티나 최초의 한국학 연구가 시작된 대학이다.

- 살바도르 대학교, “알 피 킬레스 에스 제이” 동양학 연구소(Universidad del Salvador, Escuela de Estudios Orientales “R. P. Ismael Quiles S. J.”): 아스마엘 킬레스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1991년 대한불교회 회장 서경박사 방문, 1999년 김원호 박사 초청 특강, 1999년 경창휘 한국대사 특강, 2000년 양기택 문화공보관 특강 등을 개최하였다. 연구소 발간 논문집에 한국과 관련된 논문은 아직 없다.

- 라플라타 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Universidad de la Plata, Institut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IRI): 1994년 “한국 그리고 한국의 국제 편입,” 1995년 “오늘날의 대한민국” 등의 주제 발표회가 있었다. 논문으로는 국제관계연구소지(Revista del Institut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에 1995년 발표된 호르헤 라파엘 디 마시(Jorge Rafael Di Massi)의 “한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협력”이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Universidad de Buenos Aires): 최근 한국학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대학이고 2003년 중남미 최초로 한국학회가 창립되었다.

(2) 멕시코

- 플레히오 데 메히꼬,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Colegio de México,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1995년부터 한국학 과정이 설치되었다. 초빙교수 José Luis Estrada가 한국 정치와 경제, 한국인 김형주 교수가 한국어·한국문학과 문화, 초빙교수 Juan Felipe López Aymes가 한국경제, Alfredo Romero 교수가 한국정치와 국제관계 그리고 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발간되는 잡지 『아시아·아프리카 연구』(Estudios de Asia y Africa)에 다수의 한국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 콜리마 대학교, 태평양유역 연구센터(Universidad de Colima, Centro Universitario de Estudios e Investigaciones sobre la Cuenca del Pacífico): 태평양 쪽에 위치한 대학교로서 아·태지역과의 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 교수 2명이 3년간 언어와 경제 분야 연구 및 강의를 위해 파견될 예정이다.

(3) 기타

-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 동양학 연구센터(Universidad Simón Bolívar, Centro de Estudios Orientales): 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였고 국내 선문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최근 한국학을 비롯한 동양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동양학 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라. 한인단체

2003년 현재 중남미 전체 재외동포의 수는 105,643명이며 이들 중 47.57%인 50,250명이 브라질에 거주하고, 16.28%인 17,200명이 멕시코에, 14.67%인 15,500명이 아르헨티나, 7.52%인 7,943명이 과테말라, 6.72%인 7,097명이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최근에 한국이민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와 과테말라로서 1997년 2,000여 명에 불과했던 멕시코 한인의 수는 최근 17,000여 명으로 늘어나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한국이민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과테말라 또한 1997년 2,000여 명이었던 교민의 수가 최근 8,000명 수준에까지 이르러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한국교민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이민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아르헨티나의 교민 수는 1997년 32,000여 명이었던 것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많은 교민들이 미국이나 멕시코로 재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역이민함으로써 최근 교민의 수는 15,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파라과이 또한 1997년까지 10,000여 명이 넘는 교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3년에는 7,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 브라질

브라질에 대한 한국이민의 시작은 일제시대에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이 1908년부터 일본이민에 섞여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해방이후 한국국적을 되찾기도 해 그 후 한국 이민자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 다음 세대는 6·25전쟁 이후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한 반공포로 50명이었다.

브라질에 한국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 1960년 이후

의 농업이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브라질 이민이 1963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1969년까지 약 1,300명 정도가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농업 이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신이 대부분 도시 상인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이 브라질에서 농촌에만 머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들은 3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도시(주로 상파울로)로 이주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계약을 어긴데 대해 한국인 농업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그 이후 한국이민은 주로 기술이민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971년 1,400명이 이러한 자격으로 브라질에 들어왔다. 1972년 브라질 정부의 또 다른 한국이민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한국인들의 도피성 이민은 늘어났고 브라질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파라과이 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불법 이민을 감행하기도 했다.

현재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한국이민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들 브라질의 한인 이민자들은 주로 남미 최대의 상업도시인 상파울로시에 96% 이상이 모여살고 있다. 그중 90%는 또 봉헤찌로와 브라스 구의 여성 의류업과 관련되어 있다. 상파울로 소재 브라질 한인회와 함께 지역별로 Brasilia 한인회, Belo Horizonte 한인회, Espirito Santo 주 한인회, Rio de Janeiro 한인회, Curitiba 한인회, Santa Catarina 주 한인회, Rio Grande do Sul 주(Porto Alegre) 한인회가 활동하고 있다.

(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한국이민은 1956년 10월 반공포로 1진 7명이 도착하고 이어 1957년 2진 5명이 도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이

민의 시작은 196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농업이민 18세대 93명이 도착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은 가족단위의 집단이민으로 처음에 라마르게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로의 농업이민이 몇 차례 더 있었고 파라과이로 이민 온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재이주하는 일도 있었다. 1970년에는 해외개발공사 주선 취업이민 85명이 또한 도착했다. 그러나 1977년 5월 남미 이민을 제한하는 5·4조치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파라과이, 볼리비아로부터 재이주자들이 급증했다. 그리고 1985년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체결로 투자 이주가 허용됨에 따라 1989년에는 1,000세대 이상의 한국이민자가 아르헨티나에 들어왔다.

아르헨티나 이민은 농업이민으로 시작되었으나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재이주한 교민들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취업 이민을 허가하고 있으나 수속 절차 상 시간이 오래 걸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허가를 받는 이민자들이 더 많은 형편이다.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은 1989년 말 한 때 40,000명에 달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교민의 상당수가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재이주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98년 한 때 한국의 IMF 위기로 한국이민이 소규모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 교민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주로 Flores(일명 109촌), Avellanade와 Once 등 3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류제조와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현지에서 중산층 정도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5세나 2세 중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나와 아르헨티나의 주류사회에 진출함으로써 한인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인사회 내에는 한인회, 민주평통, 한국학교, 재향군인회, 호남·영남·충청 3도 향우회 등 다양

한 한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동포 언론사로는 일간지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2개사와 라디오 한국방송이 있다.

(3) 멕시코

멕시코에 한인이 최초로 발을 들인 것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5월 1,033명의 한국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켁 농장에서 4년 계약 노동으로 일하기 위해 태평양의 Salinas Cruz 항에 도착한 것이 멕시코 한인 이민의 출발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해외 이민으로서는 1900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의 이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러나 멕시코로의 이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회로 끝나고 말았고 따라서 멕시코의 한인 후손들도 한국과의 고리가 끊어진 채 멕시코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다. 현재 이들 후손이 5세대에 걸쳐 메리다시를 중심으로 유카탄 전역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000여 세대 20,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계약이 끝나자 쿠바로 건너가기도 해서 따라서 현재 쿠바에도 이들 한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2세대부터 이미 현지인들과의 혼인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상실하여 현재는 한국어와 우리 관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열리는 한국관련 행사 등을 통해 점차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의 멕시코 이민은 1967년 티후아나에 정착한 김경우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 한인 국적의 이민은 멕시

코가 공식적으로 한국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도 총 이민자의 수는 5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미 경제위기로 인해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한인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몰려옴으로써 2004년 1월 현재 멕시코의 한인 이민자 수는 15,0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시티에 몰려있고(약 9,000명), 그 외 과달라하라에 약 1,000명, 티후아나에 약 1,000명, 레온에 약 700명, 몬테레이에 약 300명, 뿌에블라에 약 700명, 그 외 지역에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에는 상사 임직원, 투자업체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건설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이 약 500명 정도 체류하고 있다. 멕시코의 한인 단체는 아직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인 단체는 재멕시코 대한민국 한인회(Asociación Coreana en México), 멕시코 유카탄 한인회(Asociación Koreana, A.C. Kor. Mex.),¹²⁷ 멕시코 한인 100주년 기념 사업회 등이다.

마. 대중남미지역 통일역량 평가

중남미는 한국 정부수립 이후 전통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다만 1970년대 일부 국가가 제3세계주의에 따라 비동맹 외교를 주창하면서 한때 우리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남미와의 관계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중남미가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있음으로 인해 거의 무상으로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

¹²⁷ 에네켁 농장에 이주해 온 한인 후손 3세대로서 유카탄에 남아있는 한인 후손들을 주축으로 한 한인회이다.

중남미가 항상 우리에게는 가능성의 대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중남미와 활발한 교류를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85년부터 중남미와 우리나라 사이의 교역이 획기적으로 증대 하면서 우리 쪽에서는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중남미를 방문 하였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이후에는 외교부에 중남미 국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중남미와의 외교가 미주국의 관할로 미국과 관계의 부속물로 취급되었던 것에 비해 중남미국의 신설은 한·중남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는 이제 막 도약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무관심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그것은 중남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언론의 특파원 수만 봐도 확실하 드러난다. 중남미 전체를 통틀어 국내 언론사의 특파원은 연합뉴스의 기자 한 명이 멕시코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외교부, KOTRA,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중남미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연구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중남미를 다루는 사람들도 대부분 미국과 함께 중남미를 맡거나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담당한다. 학계에서도 중남미 정치·경제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를 한국정치·경제와의 비교 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기 어렵다.

중남미가 지닌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리와의 상호보완성 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지역으로부터 분명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배가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다각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과의 관계 증진은 경제적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여 진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남미의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중남미와 한국과의 관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4년 11월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시 남미 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앞으로 중남미와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광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양 지역에 공히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비록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간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끊임없이 홍보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대중남미지역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실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중남미 33개국 중 쿠바 제외하고 수교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대북 포용정책 지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간 평화적 해결 희망	상
경제관계	- 교역(2003년): 총무역액 중 3.6%, 42억 달러 무역흑자(총 무역흑자의 28%) - 투자(1980~2003, 6):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 47억 달러 해외 총투자 누적액의 7.5%	상
고위인사교류	노태우·김영삼 · 노무현 대통령 3회 방문	중
학술교류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간 교류 저조	하
한인동포 네트워크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101명, 국가별 한인회 활동	상

3. 아프리카지역

가. 아프리카·남북한 관계

남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남북한 각자가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남북한의 정치변화와 국제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아프리카 국가와 유대관계가 거의 없던 남북한의 초기 대아프리카 정책은 공산진영과 서구진영이라는 양분된 진영외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남한은 4·19 혁명으로 사회·정치적인 혼란과 제2공화국 출범의 과도기 상태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었다. 한국 외교는 단지 국제적 관례상 독립국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1965년까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외교적 제한은 별로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동맹운동에 공조하고 있었지만 식민지유산인 다당제인 서구민주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1965년에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앙집권화와 단일정당제도 등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를 통해 도입하면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북한을 의식한 안보외교를 중시하게 된다. 반면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신생국과의 친선협조관계의 확산을 통해서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¹²⁸

‘아프리카의 해’인 1960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배로부터 대거 독립하면서 유엔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동맹운동을 통하여 남한의 고립을 모색 중인 북한은 남북한외교 대결에서 수적으로

¹²⁸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77), p. 58.

앞섰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비동맹 운동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남북한 유엔 동시기입을 통해 북한정권의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적화통일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은 반미적 성향이 강한 모잠비크, 리비아, 이집트 등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 내에서 반미적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북한의 공세를 막기 위하여 철저한 할슈타인 원칙과 반공외교로 일관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물량외교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1972년도 남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남한의 아프리카 수교국은 북한보다 수적으로 앞서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를 두고 벌인 소모적 남북대결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동맹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세계화로 인해 외부에 의해 강요된 민주화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민정지도자로 탈바꿈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식민지배 경험과 독립이후 신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여전히 반서구적인 의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은 냉전시기와 같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정치적 협력관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비동맹운동이 현존하고 있지만 이념적인 문

제보다는 남남협력, 환경, 기아, 마약 등과 같은 국제문제에서 비동맹운동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아프리카 관계에서는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1992년 5월 비동맹조정위 각료회의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한반도조항 채택이 좌절되는 외교적 실패도 있었지만 비동맹회의를 자신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얻고 북한의 입장을 피력하는 중요한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동맹회의를 통해서 비동맹권에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더 강력하게 촉구함으로써 비동맹외교와 체제유지를 연계시키려고 제3세계 국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방위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정책,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북한의 체제유지 등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를 적극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서구적인 의식은 여전히 북한이 비동맹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훨씬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동맹운동 가입 29주년이 되는 2004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블록가담(비동맹)운동의 역사는 반제·자주·평화를 위한 투쟁”이고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탈냉전 이후에도 비동맹운동을 이념적 운동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²⁹ 북한의 핵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외교 활성화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위급 인사들의 초청·방문외교를 꾸준히 하고 있다.¹³⁰

¹²⁹ <www.new.joins.com/nknet/200408/25/200408251653014532m000m> (검색일: 2004.8.29).

경제면에서 2002년도 한국의 총 무역 중 아프리카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2002년도 총 무역 중 약 76%가 아시아와 대양주에 편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우 약 0.7%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유개발 사업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정화로 교역이 증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최근 들어 대중 무역의존도가 커지면서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남북한과 아프리카의 교역이 미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있다고 하겠다.

첫째, 30여 년간 남북한의 소모적 경쟁외교로 수출증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한·아프리카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약해 수입유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둘째,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EU-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 국가군(ACP)간의 특수한 경제협력 관계로 인해 유럽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셋째, 한·아프리카간의 지리적 원거리로 인해 무역관계를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와 기회가 다른 대륙에 비해 적다. 넷째, 아프리카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있고, 일부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투자의식이 부족하다. 다섯째,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비동맹회원국이어서 정치·안보면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아프리카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적 협력에 의존되어 있다.¹³¹

이와 같은 제약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탈냉전으로 사회주의 무역권이 붕괴된 이후 ‘무역주의’를 채택하여 대외교역확대를 위해 비동맹운동 국가들과의 결속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량이 아시아나 유럽

¹³⁰ 외교통상부, 『외교일지 1989-2003년』 참조.

¹³¹ KOTRA, 『2003년도의 대외무역동향』;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진출가이드』 (2003) 참조.

국가들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아프리카와의 교역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 26개 국가에서 각종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고, 독립 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미비아의 대통령 신관저와 애국지사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약 200여 명의 전문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¹³² 그러나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력이 남북한 대결까지 갈 만큼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2003년 현재 남북한 대아프리카 수교는 남한 46개국, 북한 44개국으로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통된 점은 탈냉전으로 소모적 외교경쟁이 필요없게 된 이후 상주대사관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다(<표 III-9> 참조).

<표 III-9> 남북한의 아프리카 상주대사관 실태(2003년)

한국의 상주대사관		북한의 상주대사관	
수단,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코트디브와르, 가봉, 가나, 케냐, 세네갈, 남아공, 짐바브웨	대 치 공 관	적도기네, 기네,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총 16 개국		총 10 개국	

나. 주요 3국과 한국 관계

(1) 나이지리아

1960년 10월 1일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이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2002년 약 1억 2천만) 아프

¹³² KOTRA 북한자료실.

리카 대국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독립과 함께 하우스, 요루바, 이보라는 3개의 큰 종족으로 나뉘어져 연립정부로 출범하여 1999년 2월 오바산조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기까지 종족간의 갈등으로 수차례 군정과 민정을 반복하여 왔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대국, 군사적 지역강국, 세계 7대 원유 산유국으로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평화, 안정 및 안보유지를 목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³³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는 라이베리아 내전, 시에라리온 내전 등 아프리카지역분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2000년 ‘77그룹’ 의장국,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창설 주도국,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관계’(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이행 위원장국,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의 주도권 경쟁국으로서 아프리카 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동맹 중립노선을 기본적인 외교방침으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는 1960년대에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국제적 관례로 독립국을 승인하는 절차적 외교로부터 시작하였다. 한국은 1969년 라고스에 KOTRA 무역관을 설치하여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1977년부터 나이지리아 주요 인사들의 방한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공식적인 수교는 1980년 2월 22일에 이루어졌고,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활발하게 유지되었다. 나이지리아는 객관적 시각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다가 1993년 군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바차 정권이 친북한 외교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¹³³ 외교통상부, 『나이지리아 개황』 (2002.11) 참조.

하지만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외교관계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 결과 1987년 서울에 나이지리아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99년 5월 최광수 대통령 특사가 오바산조(Obasanjo)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2000년 7월 탈냉전 이후 한국을 첫 방문한 아프리카 정상인 오바산조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였고 국제무대에서도 대체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197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나이지리아는 78회에 걸쳐 주요 인사들이 방한함으로써 외교면에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³⁴ 오바산조 대통령의 방한이후 나이지리아 의회대표단(2000.10), J. A. Obafem 대통령 외교고문(2001.2), 해운운송회 소속위원(2001.7), Stella Obasanjo 영부인(2002.4), 정부고위 사절단 (2002.5), Atiku Abubakar 부통령(2002.5), M. Alfolabi 내무부장관(2002.6), Mustafa Bell 상공부장관(2002.9) 등이 방한하였다.

경제면에서 1969년 라고스에 KOTRA 무역관이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는 1982년 8월 20일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와의 초기 경제협력은 무상원조, 대외협력기금(EDCF) 공여¹³⁵ 그리고 한국전문가 파견과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기술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¹³⁶ 1980년대 말부터 양국간에 「해운협정」(1989.8), 「문화협정」(1994.8), 「이중과세방지협정」(1988), 「투자정보협정」(1998.2) 등이 체결되었다. 2000년 7월 오바산조 대통령의 방한이후 나이지리아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방한이 많아지면서 한국과 나이지리아간의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I-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양국간 교역액은 약 7억 6,000만 달러에

¹³⁴ 이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 고위인사는 북한을 32차례 방문하였지만 국가정상의 방문은 없었다.

¹³⁵ 1988년~1992년 1~2차 철도현대화에 2천 5백만 달러 공여함.

¹³⁶ 1963~2001년까지 약 190명의 나이지리아인이 기술 연수생으로 한국에 파견됨.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약 6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이는 2000년부터 원유수입이 줄어들고 전자류와 기계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III-10>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105,255	153,613	167,532	248,873	414,956	686,940
수입	796,623	263,524	237,440	940,178	75,582	72,687
	-691,368	-109,911	-69,908	-691,305	339,374	614,253

출처: 외교백서

나이지리아는 한국에 대해 기술협력 및 합작과 건설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자동차 조립공장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한국자동차 조립공장의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현지인 고용효과는 물론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경제협력 확대로 서아프리카지역으로의 경제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앙골라

앙골라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10여 년이나 늦은 1975년 11월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지만 권력을 둘러싸고 27여 년간의 내전이 일어났고 이 내전은 미·소의 대리전 성격으로 시작되어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도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하지만 최근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무역시장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앙골라와는 이념적 대립과 북한의 방해공작으로 1992년 1월 6일에 수교하였고 현재 주남아공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수교이후 Van Dunem 외교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매년 관계장관들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5년 10월 PKO 공병대가 재진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앙골라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냉전시대 3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Dos Santos 대통령이 2002년 1월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친북 성향의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앙골라는 남북한 등거리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국가이다.

경제면에서 2002년 양국간 교역은 약 2억 4,000만 달러이고 한국이 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표 III-11> 참조).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에 비해서 수교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앙골라가 한국의 수출증가 기여도에서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수교와 무관하게 1981년부터 경제협력을 위해 앙골라의 주요 인사들이 방한했으며 한국측에서는 대우그룹이 민간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앙골라는 석유가 외화획득에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석유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제2의 아프리카 산유국이며, 한국의 자원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현재 앙골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 등이 진출해 있다. 해양 원유 생산설비의 수주(약 44.3억 달러)는 정유공장 및 해양 설비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전반에 걸친 건설사업을 기대할 수 있어서 경제협력을 통한 긴밀한 유대관계로 우리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5월 한국은 앙골라에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앙골라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통해 앙골라 경제재건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외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한국의 대아골라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출	238,438	18,519	303,667	16,637	695,588	18,544
수 입	181,843	106,319	646,411	654,330	219,739	219,709
	56,595	-87,800	-342,744	-637,693	475,849	-201,165

출처: 외교백서

(3)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유엔군으로 6·25전쟁에 참여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는 민간경제협력 차원에서의 교류를 하였지만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로 1978년 KOTRA지사가 철수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남아공이 1990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함으로써 국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내에서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의 재수교는 1992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남아공은 현재 국제평화유지와 분쟁해결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으로서는 비동맹정책을 추진하면서 제3세계의 중심국 역할 수행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남아공은 비동맹 외교정책 표방을 통해 1997년 4월 뉴델리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1998년에는 비동맹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선두국가로서의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AU에서 뿐만 아니라 NEPAD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남아공과의 유대강화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로명 외무부장관(1996.4),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1999.2), 김종필 국무총리(1999.6),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2000.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

장(2001.5), 최성훈 외교통상부장관(2002.9), 허성관 행자부장관(2004.4) 등의 남아공 방문으로 한국은 남아공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였다. 남아공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평화통일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Mandela 남아공 대통령 방한(1995.7), 남아공 부통령 Mbeki 방한(1998.4), 2001년 Mandela 전 남아공 대통령 방한 등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은 양국간 외교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998년 8월 북한과의 수교로 남아공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 남아공은 전세계 1위 광산물 자원보유국이며 광물이 수출액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III-1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과 남아공의 교역은 2002년 약 10억 달러에 달하나 한국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적자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표 III-12> 한국의 대남아공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471,314	597,270	496,431	494,873	422,933	394,491
수입	2,625,789	1,004,335	1,275,885	940,178	688,609	603,137
무역수지	-2,154,475	-407,065	-779,454	-445,305	-265,676	-208,646

출처: 외교백서

현재 남아공에는 대우, LG, 현대, 삼성 등 15개 한국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한·남아공간에는 「항공협정」(1995.7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약」(1996.1 발효), 「투자보장협정」(1997.6 발효) 등이 체결되어 있다.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아공과의 우호적인 경제협력의 지속은 남아공과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 우리의 통일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남아공이 주축이 되고 있는 SADC는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서브-사하라(sub-sahara)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공과의 경제협력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 주요 3국과 북한 관계

(1) 나이지리아

북한은 남한보다 이른 1976년 5월 25일 나이지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다. 특히 1997년 나이지리아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시 나·북간 군사부분에서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할 정도로 군사면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월 27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아티쿠 아부바카르 부대통령이 「미사일 기술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88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북한과 나이지리아 간 제1차 공동 위원회에 이어 6년 만인 2004년 4월에 열린 북한과 나이지리아간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비동맹운동 및 남남협력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¹³⁷

경제면에서 북한의 대나이지리아 교역관계에서는 북한의 수출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1년 240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60만 달러나 감소하였다. 북한은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과학기술협정」으로 1996년까지 많은 북한 기술자를 파견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한기술자의 파견이

¹³⁷ 『연합뉴스』, 2004년 4월 6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3개의 나·북 합작공장이 있지만 남한과의 기술합작과 남한기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11월 나이지리아와 원유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유수급에 필요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앙골라

앙골라는 북한과 1975년 11월 1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북한 군사기술고문단이 파견되기도 한 아프리카의 친북국가 중 하나이었다. 현 Dos Santos 대통령은 1981년, 1987년, 1988년 3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앙골라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 북한의 자연재해와 경제난 등 때문에 앙골라는 1998년 평양 상주공관을 폐지하고 주중국 대사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앙골라에는 2002년 10월 현재 40여 명의 북한 의료지원단이 체류하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앙골라는 과거 이집트,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과 함께 북한의 무기판매지로 국제기구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북한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경제면에서 북한은 앙골라와 「과학기술협정」(1977.5), 「문화협조협정」(1979.8), 「무역협정」(1980.12), 「친선협조조약」(1981.10)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탈냉전이후 비동맹운동 회원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자 제3세계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나섰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992년 1월 이집트, 나미비아, 짐바브웨를 방문한데 이어 2002년 8~9월 제2차 아프리카 순방으로 나미비아와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을 방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¹³⁸

(3) 남아프리카공화국

북한은 1998년 8월 이전까지 남아공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비난하면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대한 군사원조를 통해 백인정부와 적대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남아공은 북한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들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갖지 않다가 1998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2차 비동맹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주중국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주남아공 대사를 파견하였다.

2002년 남아공이 1993년에 핵폭탄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¹³⁹ 현정권은 만델라가 이끌었던 ANC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ANC는 과거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여 투쟁할 때 리비아 및 북한지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핵 제조에 있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4년 9월 21일 남아공 외무부의 아시아·중동담당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남아공과 북한간 군사 및 외교관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 북한도 역시 남부아프리카지역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건설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이미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니 등의 각종 건설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나미비아에는 대통령 신관저, 애국지사 묘비 건설에 참여하고 있고 200여명의 전문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남아공이 남부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점차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¹³⁸ 양형섭 부위원장은 2004년 2월 우간다, 나이지리아, 기니를 방문하였다.

¹³⁹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

라. 한반도 관련 주요 기관

(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는 약 37개의 대학교가 있으나¹⁴⁰ 특별하게 아시아와 관련된 정부 혹은 민간연구기관은 현재 없다.

○이바단 대학(Universty Ibadan) 아프리카 프랑스 연구소(Institution Francaise de Recherche en Afrique: IFRA)

이바단 대학 내에 소재한 아프리카 프랑스 연구소는 인문학을 주로 하면서 영어권과 불어권의 서아프리카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IFRA는 아프리카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아시아연구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 아프리카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60년에 세워진 이바단 대학 정치학과의 교과목에 국제정치와 국제관계학이 개설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구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아시아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으나 아시아에 관련된 연구는 유럽연구소에서 대부분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학자의 아시아 연구는 일시적으로 유럽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참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2) 앙골라

앙골라에는 Agostinho Neto 국립대학과 카톨릭 사립대학이 있다. 1962년 Luanda대학에서 1972년 Angola 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현재의

¹⁴⁰ <www.africavenir.org/research15.htm>.

Agostinho Neto 국립대학으로 변경되었으며 인문학과 의학 부분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gostinho Neto 국립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로는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Institut of Democracy)가 있으나 아시아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전혀 없다. 현재로서 앙골라와의 학문적 교류는 이 연구소를 통하여 아시아의 민주화와 앙골라의 민주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문적 역량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유럽연구기관과 연계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 따라서 국내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앙골라에 대해 한국 혹은 동아시아와 관련된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제적 통일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당분간 매우 어려울 것이다.

(3) 남아공

남아공에는 20여개의 대학이 있으나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경우처럼 아시아에 관련된 연구소와 전문학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발전경험과 모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학술적 교류가 용이하다 하겠다. 학문적 교류를 통한 통일역량 구축이 가능한 대학 및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 『세계대화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Dialogue: IGD): 비정부 민간연구소로서 환경문제에 관련된 시민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시아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최근 출판된 연구논문들은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중국, 중·미관계, 남아시아의 핵문제, 그리고 한국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제정치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CIPS): 남아공 최대의 기독교 명문 종합대학인 프레토리아 대학 (University of Pretoria)에 설립된 국제정치연구센터는 아프리카 역내의 분쟁, 민주주의, 이슬람문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관련하여 아시아의 경제발전 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소의 한 세미나에서 프레토리아 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발전을 비교하면서 NEPAD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CIPS가 아시아전문 연구소는 아니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학문적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 한인단체

현재 아프리카 인구 8억에 비해서 아프리카 재외동포는 전체 아프리카를 통틀어 2003년 현재 약 500명으로 한 국가 당 약 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포단체의 역할을 통해 통일역량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민간상사의 파견근무로 나와 있는 교포들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교포가 많은 편이다. 반면 아프리카에는 북한당국에 의해 설립된 친선협회가 있다. 수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아공에는 친선협회가 없으나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에는 「조선·나이지리아 친선협회」(위원장 송재성)와 「조선·앙골라 친선협회」(위원장 리철신)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인구 약 1억 5천만 명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다. 나이지리아에는 아프리카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456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60%에 해당하는 294명이 민간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약 15%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11명)와 기타 지역(315명)으로 분산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민단체로는 1980년 경 라고스에서 창설된 「재나이지리아 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Nigeria)가 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재외동포 중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교포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약 50명 정도이다. 또한 1973년 3월 정주영 전 현대회장이 설립한 「한·나 친선협회」(Nigerian-Korea Friendship Association)가 있다.

친북한 단체로는 「나·북한 친선협회」와 1980년 성립된 「나이지리아 주체사상 중앙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주체사상의 해외전파를 목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친북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유도 등을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북한 선전단체 중 하나이다.

(2) 앙골라

현재 앙골라 교민단체는 1999년 창립된 「앙골라 한인회」가 유일하며, 교포 수는 40명으로 대부분이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소규모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대우, 현대가 앙골라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지 국내정치가 불안정하여 교민단체의 활동이 거의 없다. 이 연구를 위해 현지의 한 동

포여성과의 직접통화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의 어려움은 경제 혹은 기후가 아니라 국내정치가 불안하여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양골라에는 현재 약 500가구의 북한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변 단체인 「조선·양골라 친선협회」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북한동포들 중에는 의사가 많으며 대부분이 ‘외화벌이’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북한동포들은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한다.

(3) 남아공¹⁴¹

남아프리카 재외동포 수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제일 많은 1,500명(2003년 현재)으로 시민권(82명)과 영주권(292명)을 가진 교포가 전체 동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23%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이 전체교포의 약 32%를 점하고 있어서 이들이 차후 국제적 통일역량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공에는 「남아공 한인회」, 「콰줄루나탈 한인회」, 「레소토 한인회」, 「보츠와나 한인회」등 4개의 한인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교민간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통일역량 구축은 혹은 북한 교민과의 교류 등을 통한 민간차원에서의 국제적 통일역량 구축 등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다. 오히려 한인교회들이 선교활동을 통해서 북한동포들을 종교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아프리카 재외동포의 실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재외동포가 수적으로 적고 단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재외동포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둘째, 재외동포의 활동이 대부분 경제활동에 국한돼 있으며 이들이

¹⁴¹ 재외동포 현황은 외교통상부, 『재외교포 단체조직현황』과 <www.hanminjok.net>를 참조.

소규모적인 자영업 혹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기간계약직인 민간 사업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서처럼 체류국가의 사회계 혹은 정치계와의 교류가 쉽지 않다. 남아공에는 유학생과 선교사업을 하는 교민들이 많아 이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통해 동포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바. 대아프리카지역 통일역량 평가

나이지리아와 앙골라는 오래 전부터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에 대하여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며 1991년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 앙골라 및 남아공과의 교역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한국은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고위인사들의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좀더 유리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이 한반도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후 한국 대통령 혹은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국 주요 인사의 방한은 무려 26회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초로 한 우호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3국이 한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경제협력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우호적인데 비해서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한반도 통

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실치는 않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학문적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프리카에서 외교 및 통상을 담당하는 고위직들은 대부분이 자국에서 대학 혹은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엘리트이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적인 정보 혹은 학문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관계부처에서 Data Base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해당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교포가 필요 시 재외공관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을 종합평가하면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대아프리카지역 통일역량 평가

평가기준	통일역량 실태	통일역량 평가 (상, 중, 하)
수교여부	아프리카 54개국 중 46개국 수교	상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통일정책에 중립입장	중
경제관계	교역(2002년): 한국의 총 무역 중 2.0%	하
고위인사교류	-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1982)이 후 대통령이나 총리의 순방 전무 - 아프리카의 정상 방한 수 차례	중
학술교류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간 교류 저조	하
한인동포 네트워크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국가별 한인회 활동 저조	중

정책적 고려사항

IV



상기와 같은 고찰과 분석을 기초로 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며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1. 기본적 고려사항

첫째, 북핵위기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전방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는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핵폐기와 검증의 수준과 방법, 시기 등의 문제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 중·러와의 협력, 남북대화라는 3중 축을 활용하는 외교를 기본으로 하되 캐나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 등과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은 2001년 12월 캐런 주중 캐나다 대사 겸 주북한 대사의 방북 시 캐나다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측에 핵문제 해결 이후에 협정체결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가 대북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캐나다·북한 협회』 회장이며 요크 대학교 인간안보연구소 연구원인 웨인가트너(Weingartner)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관료, 학자, 언론인들이 중국, 일본, 캐나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일

부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이들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설명하고 설득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2년 남아공이 1993년에 핵폭탄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¹⁴² 남아공의 현 정권은 만델라가 이끌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ANC는 과거 인종차별정책에 대하여 투쟁할 때 리비아 및 북한지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핵 제조에 있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9월 21일 남아공 외무부의 아시아·중동담당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남아공과 북한 간 군사 및 외교관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동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국제적 통일역량의 기반 구축을 새로이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3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동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국제적 역량은 지리적 여건, 현격한 문화적 차이,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등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을 더욱 육성한 이후 충분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내의 이 지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한반도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3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험과 통상 및 투자 등에 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시적인 경제협력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대북 및 통일정책 면에서 협력

¹⁴²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

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 관련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약 600만 명의 한인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및 북한문제 관련 해외 연구기관과 대학교, 전문가 등에 대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화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작성된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과 본 연구를 기초로 한반도 주변 4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EU, ASEAN, 오세아니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한반도 문제 연구기관과 연구자 관련 Database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국가별 고려사항

가. 대중국

먼저 한·중 양국 지도층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중국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17대 국회는 2004년 말까지도 결성하지 못한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대중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문을 통한 교

류와 논의를 병행하면서 체류를 통한 정보 교환과 대안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중 수교이후 한국정부의 연구기관들은 주로 중앙정부 소속 연구기관들과 상호방문을 통해 의견교환과 정책논의를 하였다면 이제는 상호 주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고 대안을 개발할 단계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 개발은 중국정부의 연구기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연구기관들이 적어도 북경에 상주하는 사무처(liaison office)를 설치하여 이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제는 중국의 입장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 외교, 특히 한국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기구에 대한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연구기관들은 중국 지방정부내의 연구기관들과 적어도 2곳 정도를 택해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한 학술교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국간 학술교류가 그동안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특화된 과중심으로 중국대학과의 교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맞춰 중국학생들은 자신의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간의 의견교환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의견교환 통로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조선족 인사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선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이 통일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대일본

한·일 상호의존의 증대, 일본내 재일 한인사회의 역사적 존재, 대중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 붐,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한·일 협력 등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일본내 통일역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내에서 적절하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북·일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교섭을 통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을 한국과의 협력아래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체제의 틀 내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한반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대일본 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미전략 및 동아시아전략, 대북전략 등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함께 일본의 협력을 도출하는 설득논리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력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좁은 국토로 인해 국내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대외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 2003년 한국의 총 무역흑자는 150억 달러에 달하나 대일 교역적자는 190억 달러나 된다. 우리 정부는 만성적인 대일 교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정부 역시 국내 여론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02년 9월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는 일본국민들의 여론 형성 및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아울러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국내여론과 언론 등을 통해 일본 내에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햇볕정책의 전개이후 한국 국내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 북한 인식을 둘러싼 한·미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국내의 갈등이 일본에까지 심각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 또는 비난이 의도와는 다르게 종종 한국의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인식을 호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북한을 비판하며 북·일의 접근에 제동을 거는 일부 일본 언론에 이용될 수도 있다.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항상 국익을 염두에 두며 일본내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북 재일동포 조직인 조총련이 이념적 기반의 약화와 금융·교육·출판 사업의 침체 및 세대교체 등으로 축소과정에 있다. 반면 재일동포 사회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류’ 분위기 확산에 따라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조총련 중앙 및 지방 조직의 젊은 간부들에 대한 초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대캐나다

캐나다는 G8 국가이며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발전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전두환 대통령 이래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캐나다를 국빈 또는 공식 방문하였음을 고려하여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중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200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거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 우리 정부는 한국이 1992년 이래로 한·미·일·캐나다·호주간 「5자 정책기획협의회」의 일원임을 고려하여 북한과 수교한 캐나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캐나다·북한 협회」 회장이며 요크 대학교 인간안보연구소 연구원인 웨인가트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캐나다가 대북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에반스 연구원과 잡 국제관계센터 소장의 의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2003년 45억 달러에 불과한 한국과 캐나다간의 교역(한국 총무역액의 12%, 캐나다 총무역액의 8%)을 전체 무역면에서 세계 9위인 캐나다와 세계 12위인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게 확대해야 한다. 1980~2003년 6월까지 18억 4,300만 달러 수준인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와 1962~2003년 29억 9,000만 달러에 불과한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도 상호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캐나다 아·태 안보컨소시엄」(CANCAPS)과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요크 국제안보연구센터」와 국내 통일·외교·안보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문제를 활발히 강의·연구

하고 있는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와 「한국연구센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연구소 및 대학들은 이 기관의 동북아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교수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는 친북 또는 지북 인사와 학자, 언론인들이 일부 있다. 북한 정세관련 정보획득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야 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세계문제연구소내 인간안보센터의 연구원, 「토론토 스타스」지의 컬럼니스트 워컴 등이 이에 속한다.

3. 지역별 고려사항

가. 대중동지역

(1)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지지 확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에 관심이 적은 중동지역 국가들과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며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이집트에 대해서는 남북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에 대해서는 북한도 리비아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란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권유하며 북한과 미사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시리아와도 외교관계

를 수립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유대 강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경제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중동지역은 1970~80년대 한국의 최대 건설시장이었으며, 2000년 국내 원유소비량의 약 77%를 이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였다.¹⁴³ 향후 남북경협 확대 및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으로부터 석유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향후 5~10년 사이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산유국들과 외교적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2004년 4월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6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와 함께 리비아는 경제제도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리비아가 석유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확대해 가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건설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한편, 이라크는 2004년 7월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라크는 아직까지 저항세력의 무력공세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정치적 평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원유매장국인 이라크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면 석유

¹⁴³ 외교통상부, 『2000년도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1년), p. 344 참조.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시설의 재건 등 전후복구사업을 급속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리비아와 이라크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다시 한국 건설업체들의 중동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비아에는 북한 건설인력이 300여명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⁴ 리비아에서 다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남북한이 합작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은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비한 준비를 하며 남북한 합작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멘의 경우도 1994년 내전을 겪은 후 경제안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한 합작투자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멘 통일 이전 북한은 남예멘에 건설인력을 투입한 경험이 있다. 중동 지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합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차원의 협력 강화

중동지역의 저명한 사회과학 연구소로서는 이집트의 Al Ahram 전략연구소,¹⁴⁵ 요르단의 Al-Urdun Al-Jaid Research Center(UJRC),¹⁴⁶ 레바논의 The Center for Lebanese Studies(CLS)¹⁴⁷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면 같은 아랍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랍권에 대한 통일외교는 남북한에 대한

¹⁴⁴ 외교통상부, 『리비아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7), p. 210 참조.

¹⁴⁵ ACPSS는 1968년 Al Ahram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이집트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물론 중동지역과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CPSS의 조직 연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xtra.ahram.org.eg>> 참조.

¹⁴⁶ UJRC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ujrc-jordan.org>> 참조.

¹⁴⁷ CL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user.ox.ac.uk>> 참조.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지역 사회과학 연구소로서 명성을 갖추고 있는 Al Ahram 전략연구소를 통하여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나. 대중남미지역

(1)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다. 심지어 우리의 중남미에 대한 무관심보다 그들의 우리에게 대한 무관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파견 외교관 등 특수 관계자가 아니면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그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려 한반도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특히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은 거의 없다. 중남미에서 한국 경제나 북핵문제 전문가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통일문제와 핵문제 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외교관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스페인어로 강의가 가능한 한국의 학자가 중남미 각 대학이나 외교아카데미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문제에 대해 순회강연회를 여는 것은 한국홍보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무역수지 균형 노력

한국은 중남미와의 무역에 있어 매년 50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관계는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중남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국제화하고 수출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탓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상품에 대해 적극적 구매 자세를 가지는 것도 장기적으로 양자 간의 교역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현지에 직접 투자해서 그들의 천연자원이나 농업자원을 개발해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한국문제 전문가 양성

중남미의 한국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전부터 한국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초보 단계에 있으며 한국문제만을 전담하는 학자도 없다. 따라서 한국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자를 발굴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 등을 보여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유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미래의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지도층 인사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대학에 유학중인 중남미의 미래 지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4) 중남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는 중남미를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남미는 개도국이며 일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낮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이미 5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했으며, 중남미 음악은 한 때 세계를 누볐고 지금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의 박물관이나 아르헨티나의 오래된 연주회장 그리고 브라질의 자연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 모두들 중남미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중남미를 생각할 때 미국 남서부의 히스패닉들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남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대아프리카지역

북한은 현재 '외화벌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외화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념 혹은 정치체제에 따른 선별적 외교가 아닌 무차별적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는 주요 수교국가와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의 협력강화를 통해서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논의·협의를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990년 초부터 민주화를 실시하여 독립이후 제2세대가 정권을 잡은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협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아프리카 문제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먼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문제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탈냉전을 전후해서 전지구적인 문제들인 환경, 지구 온난화, 사막화, 에이즈, 기아문제 등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이 인종차별정책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국제협약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가야 한다. 현재 아프리카통합기구가 『아프리카 연합』(AU)으로 발전하여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별 공동체기구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물질적인 기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고 위상을 점차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UN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11개이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와 같은 정부간 기구의 동시가입은 20여 개가 된다. 예를 들면 『아시아·아프리카 소지역 기구회의』(AASROC), 『아프리카 개발 도쿄 국제회의』(TICAD), 『아시아·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¹⁴⁸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fro - 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 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sian -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등이다.

(2) 한국대사관의 복귀

냉전종식 전후 철수한 우리 대사관을 다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해서

¹⁴⁸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아프리카 40개국, 아시아 14개국 고위관리가 참여한다.

관·민이 아프리카에서 통일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0여 년 전에 민주화를 단행하였지만 식민지 배와 독립 후 권위주의체제로 민족(인종)화합과 통합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 갈등이 불씨로 남아 있다. 현지 동포들이 이러한 정국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주 대사관이 이러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 대사관은 남북한 동포간의 친선축구대회, 명절맞이 잔치 등을 개최하는데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이지리아·북한 군사관계 주시

1997년 나이지리아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시 양국은 군사분야에서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고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상호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나이지리아와 북한간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적 유대 강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내지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아프리카 전문학자가 10명 내외이지만 이들을 통해 학술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자들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아프리카의 관료 및 학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남북한 민간교류의 시도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비해서 동포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고 활동인원 수뿐만 아니라, 활동도 거의 잘 되지 않고 있지만 현지 남북한 동포간의 친선도모를 위해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도 국제적 통일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의사나 의류판매 등을 통해서 ‘외화벌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상품을 현지 한인회가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의 남북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제정보연구원. 『북한경제총감』. 2004.
- 국토통일원. 『북한의 군사외교 실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김원용. 『재미한인 오십년사』. Reedley, CA: Korean Affairs Institute, 1959.
-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7.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서울: 내외통신사, 1991.7.1~12.31.
- 박건영. 『국제정치』. 서울: 오름, 1999.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송영우. 『한국의 외교』. 서울: 평민사, 2000.
- 외교통상부. 『나이지리아 개황』. 2002.11.
- _____. 『리비아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7.
- _____. 『아프리카 진출가이드』. 2003.
- _____. 『아프리카편람』. 2003.
- _____. 『외교일지 1989-2003년』.
- _____. 『이라크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 _____. 『이란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 _____. 『이스라엘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2.
- _____. 『재외동포 단체조직현황』. 2004.
- _____.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7.
- _____. 『캐나다 개황』. 1999.6.
- _____. 『캐나다 개황』. 2003.7.
- _____. 『한국외교 50년: 1948-1998』. 서울: 외교통상부, 1999.

- _____. 『1998년도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1999.
- _____. 『2000년도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1년.
- _____. 『2003아프리카 진출가이드』. 2003.
- _____. 『GCC국가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11.
- 유정렬. 『중동: 정치와 그 현실』. 서울: 어문각, 1985.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77.
- 차경미.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연구-국내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 통상교섭본부. 『우리나라 경제통상 통계』. 2003.11.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 하시모토 고헤이(橋本光平) 저. 김은진·김소은 번역. 『국제정세 한
눈에 꿰뚫기』. 서울: 가람기획, 2002.
- 한국예멘교류센터. 『예멘』. 서울: 종합경제사회연구원, 1996.
-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가능성』. 통일연구원 2001-25.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張 榮 主 編. 『韓國盧武鉉參與政府的對朝和平繁榮政策』. 한국 노
무현 참여정부의 대북한 평화번영 정책. 길림성 사회과학원,
2004.6.
- KOTRA. 『2003년도의 대외무역동향』.

Afrique Contemporaine, Afrique du Sud.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N 184, 1997.

Braillard, P. et Djalili, M.-R. *Tiers Monde et relations internationales*.
Paris: Masson, 1984.

Gonidec, P-F. *Relations internationales Africaines*. Paris, L.G.D.J.,
1996.

Hochet A-M. et N'gar Aliba. *Developpement rural et methodes*

participatives en Afrique. Paris: Harmattant, 1995.

2. 논문

김기현.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 31호 (2004년 6월호).

김기현. “유카탄 한인 이민 초기 에네켁 농장 생활.” 『서어서문연구』 제28호 (2003년 9월호).

김용찬. “중동의 민족현황과 민족문제.” 『민족연구』 제10호 (2003.3.1).

김태호. “한중관계 11년과 미래: 양적팽창과 잠재적 갈등을 중심으로.” 『계간사상』. 2003년 가을호.

미국의회조사국. “북한의 중동과의 군사관계에 관한 보고서.” 『국제문제』. 1994년 12월.

배정호. “日本・北韓의 關係正常化와 남북관계.”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5卷. 서울: 統一院, 1994.

서재만. “페르시아만 연안국과 한국.” 홍순남 외 공저. 『중동의 정치경제: 페르시아만 안보와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87.

유정렬. “제10장 한국과 중동.” 최종기 편저. 『한국외교정책』.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이한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국제사회』. 충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1998.

홍순남. “중동정세와 국제정치환경.” 홍순남 외 공저. 『중동의 정치경제: 페르시아만 안보와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87.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990년 12월호).

Shulong, Chu.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10.28-10.29.

Wedeman, Andrew.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in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3. 기타

『동아일보』

『한겨레』

『朝日新聞』

『毎日新聞』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大公報』

『東京新聞』

『朝日新聞』

Toronto Stars

“북한 장웅 IOC위원 토론토 방문”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3.1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kotown.com>>.

“주류사회 민관, 북한돕기 앞장” <<http://www.JoongangCanada.com>>
(검색일: 2001.1.25).

“캐나다 약식개항”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 canada.htm>.

“캐나다 한인이민사 100년” <<http://research.korean.net/global/docs/>

- docs/r_board_detail.html> (검색일: 2003.3.24).
- “캐나다 한인인구” <http://research.korean.net/global/docs/docs/r_board_detail.html> (검색일: 2003.1.23).
-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http://www.koreancan.org>>.
- “하워드 발로치 초대 주북한 대사 신임장 제정”
<<http://www.Joongang Canada.com>> (검색일: 2001.3.1).
- Andrew Mack. “DPRK not to blame for nuclear treaty failure.”
CanKor - 24 January 2003 - Special Edition.
- “Canadian Cabinet Minister to Visit North Korea.” *Hankook Ilbo*, October 11,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 “Canadian Professor in the Korean Language Studies of UBC Visited Korea.” *JoongAng Ilbo*, November 7,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 “Canada urges DPRK to relinquish nuclear Plans.” CanKor - 24 January 2003 - Special Editio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announce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ebapps.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February 6, 2001, No. 17).
- _____. “Canada announces recogni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llowing bilateral talks in Bangkok” <<http://webapps.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July 26, 2000, No. 184).
- _____. “Graham calls on DPRK to resume freeze of its nuclear program” <<http://webappa.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December 23, 2002).
- _____. “Canada deplores DPRK withdrawal from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http://webappa.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January 10, 2003).

<http://www.mapleleafweb.com/education/spotlight/issue_26/c_perspective.html> (February 4, 2003) Policy to North Korea.

_____. “South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Visits Canada” <<http://webapps.dfait-maeci.gc.ca/minpub/Publication>> (September 27, 2004).

“N.K.’s Nuke Plan Draws Consternation Abroad” *Chosun Ilbo*, October 19,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ROK’s Yonhap: Roh Calls for Seoul’s Participation in China’s Development Project.” *Yonhap*, July 3, 2003. *FBIS-CHI-2003-0708*.

“Top Legislator Wu Bangguo: PRC Willing To Seek Stronger Economic Ties With DPRK.” *FBIS-CHI-2003-1030*.

“5 Foreign Firms Looking for Oil in North.” *Kukmin Daily*. September 25, 2002.

<<http://www.canadanews.or.kr/article/index>>.

<<http://www.korea.gc.ca/political/bilateral.relation.k.html>>.

<http://www.korea.gc.ca/political/ck_trade.k.html>.

<<http://www.korea.gc.ca/political/historical.roots.k.html>>.

<<http://www.korea.gc.ca/political/regional.k.html>>.

<<http://www.korea.gc.ca/political/schofield.e.html>>.

<<http://extra.ahram.org.eg>>.

<<http://user.ox.ac.uk>>.

<<http://www.africavenir.org/research15.htm>>.

<<http://www.arts.mcgill.ca/programs/eas/korea/thomas.html>>.

<http://www.chass.utoronto.ca/faculty/Faculty_Schmid-A.html>.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c_general1.htm>.

<<http://www.iar.ubc.ca/introduction/kpark.htm>>.

<<http://www.jeuneafrique.com>>.

<<http://www.nis.go.kr>>.

<<http://www.okf.or.kr/index.html>>.

<<http://www.ujrc-jordan.org>>.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접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근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